

제429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7일(금)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종합정책질의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2
- 종합정책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우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결위에 들어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또 한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들 중의 하나가 캄보디아 사태가 있었잖아요. 캄보디아 사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으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너무 취직할 곳도 없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이런 불법적인 취업까지도, 유혹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정말 주목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역대급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비명 소리가 있는 그런 곳에 조금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 종합정책질의

(10시04분)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7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한시간 17분이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해하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오늘 국민주권정부의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2일 차의 첫 번째 질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미 관세협상 그리고 APEC 이야기부터 시작할 건데요.

APEC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역시 성과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관세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했다’라는 국민도 41.4%에 달합니다. 특히 AI·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가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기술번영 MOU를 체결하면서 세계 최빈국, 원조를 받

던 국가에서 최강대국의 파트너로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AI 이니셔티브를 담은 경주 선언을 견인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 등 7개 글로벌사들도 13조 원 투자를 발표하면서 AI 3강, 아태지역 AI 수도의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대한민국의 군사적·외교적 역량을 한 차원 높은 외교사에 빛날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상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은 늘 제기되어 왔지만 어느 정부도 풀지 못한 해묵은 숙제였습니다. 이번 계기로 군사적 역량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었고 동시에 SMR 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의 교두보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외신들조차도 한국이 이번에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뉴욕타임스는 ‘일본보다 더 얻어 냈다. 예상 밖의 진전이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타결 가능성을 낮게 봤던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다. 핵잠수함에 대해서는 호주도 안 준 극비 기술을 한국이 받는다’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는 원팀이 되어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10월 27일에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오라’라고 하더니 이제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게 과연 국익을 위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익이 어떻게 되든 상대방을 발목 잡아서 정치적 이익을 꾀하겠다는 정쟁의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국익 앞에는 정파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이제는 새 정부 발목 잡는 후진국형 정치는 좀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GPU 26만 장 확보 성과는 또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5개월 만에 성과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만 장 확보 공약에서 5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세계 최대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SK도 최첨단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초 기업 주도 제조 AI 클라우드도 구축됩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GPU 5만 장 공약을 찢고 조롱하지 않았었습니까? 조롱당했다고 손 놓고 있었으면 이런 성과를 우리가 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APEC 성과,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는 기업 성과를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AI 3강을 위해 모든 국력을 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재를 뿌려서야 되겠습니까?

관세협상, AI 이니셔티브 경주 선언, 한한령 해제 요청까지, 국제적 외교 무대에서 실용외교의 진면모를 보여 준 실적까지 폄하할 실력과 자격이 국민의힘에 있지 않습니다. 만찬장에서 노래나 부르고 뒤에서 욕설이나 하던 윤석열의 외교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무정부 외교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트집 잡고 발목 잡는 행태를 우리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셨다시피 AI 시대에 하루가 늦춰지면 한 세

대가 뒤쳐질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AI 예산은 10.1조 원, R&D 예산 35.3조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의 AI 예산은 2025년도 윤석열 정권 짚금 추정 1.8조 원에 비교하면 첫 예산이 10.1조 원이고, R&D 예산은 윤석열 정권의 그 카르텔 말 한마디에 5.2조 원을 삭감한 것에 반하면 35.3조, 역대 최대 규모이고 올해 대비 19.3% 확대 편성입니다. 어느 정부가 AI에 진심인지 과학기술에 진심인지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에 진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총리님, 이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R&D 예산 35조 원은 복원의 의미가 있고 AI 예산 10조 원은 집중력, 미래에 대한 전략적 집중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중에 GPU 5만 장, 26만 장 부분은 26만 장이 민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정부와도 비교할 때 우리 정부가 가졌던 그 5만 장 목표로 하고 실제로 집중한 집중력이 그 전체 26만 장으로 이어지는 동력과 토대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은 민간과 기업에서도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예, 맞습니다. AI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골든타임에 이렇게 발목 잡기에 나서는 것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IDC 등 국제기관들 분석 결과에 따르면 AI로 10년간 세계 경제성장률이 최소 4%에서 18%p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 AI 역량이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천차만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더 치고 나가야 됩니다. 더 뒤처지면 1%대의 성장률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AI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성장 가속화, 국제기구들까지 단언하고 있습니다.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이미 지난 3년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예산 법정시한 12월 2일입니다. 하루가 늦어지면 얼마나 더 뒤쳐지겠습니까? 법정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최근 국회가 계속 지켜 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황정아 위원** 지금 국민의힘은 재정 포퓰리즘이라면서 또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은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2023년 세수결손이 56.4조, 24년 세수결손은 30.8조.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채도 발행하지 않았고 기금 돌려막기로 대응했습니다.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까지 다 끌어 썼습니다. 이게 재정 포퓰리즘 아닙니까? 집안 살림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겠습니까?

민생경제 회복, AI 과학기술 성장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될 지금 골든타임에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발목 잡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문재인 정부 초기 3년간 단순산술평균으로 1.9% 오를 동안 윤석열 정부는 8.2% 급등했습니다. 올해 0%대 성장률을 찍을 뻔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3분기 성장률 긴급 추경을 통해서 1.2%로 올려놓았고 1%대 성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000을 돌파했고 지금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중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인 6월 4일에만 코스피가 2.66% 급증한 2770을 기록했어요. 불과 5개월 만에 4000을 돌파했던 것입니다. 잠시 조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 상승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

피는 7000을 넘는다는 환상, 입이 떡 벌어지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재명 정부 내 5000도 넘을 것이라는 국민의 응답이 63.8%에 달합니다. 잠시 조정이 있더라도 이런 추세적 상승이 사라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추세적 상승이 사라지지 않게 할 의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추세적인 상승에 중간중간에 등락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총리님, 코스피 떨어지기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혹시 윤석열 정권 당시 코스피지수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권 출범일인 22년 5월 10일 코스피는 2596을 찍었습니다. 20년 11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2600선이 붕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 직전인 24년 12월 2일까지 코스피가 3년 6개월 동안 복원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해서 2454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내란이라는 핵폭탄을 던졌지요. 정말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정권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지금 지표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민간 벤처·스타트업 투자 플랫폼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스타트업 투자가 직전 분기 대비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투자 건수는 2분기 대비 42.3%, 투자금액은 152.3%나 급증합니다. AI 반도체 업체인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이 1000억 이상 빅딜을 유치했습니다. 500억 이상 규모 투자가 11건, 100억 원 이상 투자도 64건에 달합니다.

3분기면 정확히 이재명 정부 출범 시점입니다. AI 3강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 벤처·스타트업 지원책의 확대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 등 정책적인 메시지가 시장의 성장을 이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정책의 방향과 또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합쳐져서 비교적 여러 가지 지표는 다 상승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표는 명료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를 AI 산업계의 기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강력한 실행력으로 현실화해야 될 시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와 실행력이 저는 정부의 재정과 예산에 있다고 봅니다.

총리님, 우리는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 AI에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에 AI 예산을 포함시키겠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김’ 자만 붙이면 ODA 사업 수천억도 뚝뚝 주더니만 AI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이것 합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AI에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의 골든타임을 살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범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AI 예산 소요 발굴하고 AI 투자 적극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계속 추가 재정 수요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또한 AI 유니콘기업 창출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투자 바람을 지키려면 AI 규제 합리화가 필요합니다. AI 규제 합리화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취임 초부터 대통령께서도 거미줄 규제를 걷어 내겠다라고 강조하고 계

됩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될 AI 기본법에 담길 신설 규제들이 AI 산업계를 옥죄 수도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 상하원 의원들이 이사회 명예 공동의장으로 있는 ITIF 보고서에서조차 AI 기본법 규제가 법이 지닌 다른 강점들을 잠식할 수 있다,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AI 산업계의 의견들을 청취한 결과 신설 규제가 유예되었으면 좋겠다는 벤처·스타트업들의 주장이 절대 다수입니다. 정부가 과태료 유예만으로는 AI 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AI 산업 진흥 그리고 AI 성장을 위한 메시지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벤처·스타트업들에게는 과태료 유예뿐만이 아니라 사실조사까지 일부 유예하고 기간도 3년으로 폭넓게 잡는 것이 글로벌 국가들에게 AI 산업 진흥을 위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거미줄 규제는 걷어 내야 되고 벤처·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더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조사 유예라는 초강수라도 뒤서 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글로벌 AI 역량을 흡수하고 있는 블랙홀 중국도 규제가 없다는 점이 큰 영향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려되는 점은 콘텐츠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상에 담긴 AI 표시의무제가 일괄적으로 강제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 VFX(시각효과)의 경쟁력마저 잃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규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이 부분 직접 챙겨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서 지금 저희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국가 AI 전략 그리고 규제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챙기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저도 제가 원래 총리실 소관에 있던 규제 부분을 챙겨 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어젠다로 강력하게 챙겨 가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GPU 26만 장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최신형 블랙웰까지 확보하면서 자본·기술·하드웨어라는 AI 트라이앵글이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AI 3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발 그리고 पै, पै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인데 그 발에 뿌릴 씨앗 그리고 물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발에 뿌릴 씨앗이 인재와 벤처·스타트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공계 청년 인재 70%가 지금 현재 해외로 이직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연봉이 네 배에 달하기 때문이지요. 인재 확보를 위해서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구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이번 AI 예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인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해외 인재 그리고 국내 인재 성장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 훨씬 집중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합니다.

또한 시장이 인재들을 품을 수 있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는데 오픈AI, 테슬라처럼 벤처·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훨씬 더 큰 회사로 자라난 회사들이 많고 그리고 그 인재들에게 엄청난 처우를 보장해 주는 유니콘·데카콘 기업들을 육성하는 게 그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혹시 유니콘·데카콘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과기부장관님 또 산업부장관님 또 중기부장관님 등등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기업인 출신인 배경훈 과기부총리님과 한성숙 중기부장관께서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과기부1차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니콘·데카콘 기업들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중기부 그다음에 여러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중기부장관입니다.

사실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이 모두 다 갖춰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창업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인재들에 대한 보상도 창업자에 준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혁신 벤처들이 가져온 새로운 보상체계의 덕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고 곧 보고하고 또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방안들 마련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총리님, AI 시대에 밑에 뿌릴 물은 전력이 될 것입니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력난 우려에 미국은 대형 원전을 짓고 SMR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끊기지 않게 공급하는 것이 보장이 되고 작은 면적의 송전망도 불필요한 SMR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 오픈AI와 같은 첨단기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활용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كل로, 뉴스케일, 테라파워 미국 SMR 기업들이 확장을 위한 잔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SMR 기술이 핵잠수함 확보라는 계기와 더불어서 글로벌 원자력 강국,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이미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주·영양·봉화 출신 임종득 위원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SCM 개최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감사합니다.

○임종득 위원 잘 끝났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아주 양국이 높이 평가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임종득 위원 끝나고 나서 공동성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PPT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 SCM 공동성명 내용 중에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썼지요? 그런데 24년도 공동성명에는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전력 수준’이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양국이 저 분야에 대해서는 장관급 회담에서는 깊이 논의가 안 됐습시다라는 별다른 큰 이견 없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언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워딩의 변화가 주한미군의 감축,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SCM 회담 자체에서는……

○임종득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입니다. 다음 PPT 올려 주시지요.

합참 관련해서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어제저녁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어제 확인했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합참의 40명 되는 장군을 일괄 교체하겠다. 중령, 대령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다 교체하겠다. 이게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합참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임종득 위원 아니, 장관님이 지시하신 거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지시한 바는 없습시다라는……

○임종득 위원 지시 안 했는데, 합참의장이 인사권을 자기가 상의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어쨌든 적법절차를 유지한 가운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아마 합참의장……

○임종득 위원 장관님, 국방위원만 한 20년 하셨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20년 하시는 동안에 최고 군령기관인 합참의 장군 40명을 다 바꾸고 중·대령을 바꾸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것은……

○임종득 위원 그것은 20년이 아니고 창군 이래 초유이고 군국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합참의장의 말씀의 워딩을 보면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연한이 된 그 인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종득 위원** 합참에 들어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데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위원님,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아니고 연한이……

○**임종득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의 문제성을 그 누구보다도 장관님이 잘 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군령기관은 24시간 365일 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장군을 40명을 동시에 바꾸고 중·대령을 다 바꾸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장해제하겠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임종득 위원** 그걸 아신다면 변명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장관이 변명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임종득 위원** 아니지요. 장관으로서 지금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시를 안 하신 사항을 지금 합참의장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해야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거 하십시오. 이걸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후회할 일이고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장관님의 인품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재고하십시오.

다음은 총리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팩트시트 발표도 안 되고 MOU 체결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박했다는 얘기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언제 됩니까, 이거?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MOU 팩트시트가 늦어질 만큼 어려운 협상을 한 것이지요.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본 것이고요.

○**임종득 위원** 슬라이드 올려 주시지요.

부총리님, 11월 5일 날 KBS 라디오 나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보시지요. ‘경제 분야는 거의 마무리됐는데 안보 분야가 마무리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안보 분야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위성락 안보실장은 또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안보 분야는 대체로 합의가 됐는데 관세 분야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1월 5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 때 장관님도 안보실장님의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셨지요? 지금 달라요. 이게 지금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고 걱정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올려 주시지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그 결과로 7월 31일 날 미국과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그 진위 자체를 묻는 질문에 ‘국

익에 손해가 된다’ 하면서 입틀막을 했어요. ‘공동 합의문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습니까? 지금 100여 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협상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팩트시트도 안 나오고 MOU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의 당국자들이 지금 늑대소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이거 제대로 좀 하십시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총리님, 대통령실은 관세협상의 성과로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미 투자구조가 확정됐다, 자동차 관세가 인하했다, 농산물과 반도체를 방어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저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체크를 할게요.

대미 투자구조를 확정했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중에 2000억을 현금으로 주는데 그게 한화로 따지면 약 280조 원입니다. 그다음에 조선업 협력에서 150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4000억 불 좀 넘나요?

○임종득 위원 저 앞에 적혀 있잖아요. 4280억입니다.

외평기금이 얼마 정도지요, 부총리님? 외평기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외평기금은 사용이 안 됩니다.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외환보유고 가지고 하고 통화스와프가 됐다 그러면 통화스와프를 좀 활용할 수는 있을 텐데 지금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외환시장의 불안요소가 안 되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저게 1년의 한도가 200억 불이고요. 그리고……

○임종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만약에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다면 200억 한도를 줄이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추진하고……

○임종득 위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걱정은 저희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1년에 200억 불 준다 그랬는데 200억 불이 올해 우리 예산을 놓고 들여다보니까 SOC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7조 5000억 원,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의 돈을 지금 미국에 현물 투자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조선업, 자동차 이 부분들이 지금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될 거고 우리 투자 확대를 인해서 국내 산업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 지금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업 같으면 우리 쪽의 기자재가 나간다는지 크레인이 나간다는지 하는 이런 수출 요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득 위원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종득 위원 다음 PPT 올려 주세요.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서 국회 비준 필요성 이야기를, 어제든 아마 여러 질문들이 나왔는데 총리님이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최초의 입장하고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 일관됩니다.

○임종득 위원 국회 비준 이야기를 하셨다가 어제 답변을 보니까 특별법 운운하면서 돌아가시던데……

저것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PPT의 내용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시리즈를 봐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헌법 60조를 보더라도 조약 비준 그다음에 비준에 대한 동의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고 헌법재판소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비준 건이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국회 비준을 안 거치고 특별법으로 돌아간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은 조약의 경우는 당연히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에게 또 국가에 부담을 주는,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럴 때는 적절한 수준과 방식의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

○임종득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실제로는 마지막에 미국·한국, 한국·미국 양국 간에 상호 강제성이 없는 의미에서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MOU로 확정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MOU를 양국에서……

○임종득 위원 그것은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알고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일국에서만 비준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상의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PPT 올려 주시지요.

총리님, 현금으로 투자하는 2000억 달러, 우리 정부가 여기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완전히 결정권을 우리가 가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시한 것이지요. 그러나 투자위원회, 협의위원회의 상호 협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임종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책실장이 발언한 내용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저 내용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큰 일종의 엠브렐라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저는 말장난으로 지금 규정을 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을 말장난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오히려 우리의 힘과 협상력

이 악화되겠지요.

○**임종득 위원** 지금 한번 보세요. 미국에 투자하면서 모든 결정권을 미국에서 가지고 있고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우리 의견은 일부 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당연히 미국은 미국 이익에 부합되게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김민석** 걱정하시는 부분……

○**임종득 위원**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여론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신 승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신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국민의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데 국민들이 다 정신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임종득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 승리는 알고 계시지요, 무슨 뜻인지?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장치를 누차 말씀드렸고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미국만 이익을 보면 되겠냐 이러셨는데 상업적 합리성에……

아니, 미국이 망하는 장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상호 윈윈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야 되겠지요.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할게요.

부총리님, 지금 투자와 관련해서 협상에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총리님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PPT 한번 보시지요.

투자수익 구조가 원금 회수 전에는 5 대 5, 후에는 9 대 1 이렇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종득 위원** 지금 투자처도 미국이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결정을 합니다. 원금 회수는 불확실하지요. 그리고 그 부담은 한국이 져야 됩니다. 이것은 불평등한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한국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언론에서 지금 나오는 걸 체크를 해 보니까 투자가 실패했을 때 손절을 할 수 있는 권한도 한국에 없다, 이게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투자가 실패할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습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투자하는 사람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임종득 위원** 아니, 실패할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미국하고……

○**임종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아무리 체크하고 체크하고 체크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손절할 수 있는 권한을 투자하는 사람이 가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저 배분 비율도 조정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지금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난 7월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할 때 현금 직접투자 비율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현금 직접투자가 과반이 넘습니다. 지금 절반이 넘어요. 이것 자꾸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게 지금 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세요.

더 큰 문제는 지금 3500억 달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SNS 확인해 보셨지요? 거기에 의하면 6000억 달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진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 6000억 달러는요 정부가 지금 현금을 투자하는 2000억 불 그다음에 조선업에 1500억 불 그다음에 에너지 사 주는 1000억 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하는 1500억 불……

○**임종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것은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어쨌거나 그것 다 합쳐서 이렇게……

○**임종득 위원** 지금 우리나라 돈 6000억 불이 미국으로 투자된다고 하면 국내 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600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6000억 불이. 그것까지를 고려하면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다음 슬라이드 봐 주세요.

총리님, 자동차 관세 인하된 것이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정확하게는 양국에서 관련된 법을 제출하는 시기부터 소급해서 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의는 된 것입니다.

○**임종득 위원** 아니, 이걸 인하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는 여론들이 많아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FTA에서 관세가 0원이었지요, 0원. 그렇지요? 0%였어요. 그런데 지금 25%로 갔다가 15%로 내려오는 과정을 이걸 인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하는 거다, 국민이 원숭이도 아닌데 왜 국민한테 조삼모사하냐라는 여론들이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런 용어를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또 조금 전의 말씀 중에 좀 불평등한 결과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번 관세협상의 시작 자체가 미국과 한국이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기반에서 출발했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임종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이 얘기가 지금 답변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끊었습니다.

기존에 0%고 일본과 유럽이 2.5% 2.5%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25%로 갔다가 7월 이후에 일본과 유럽은 합의가 되면서 15%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25% 그대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향후에 15% 똑같이 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실 관세가 한국은 0%고 일본과 유럽이 2.5%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자동차산업이 육성되고 활기를 띠었던 거예요.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5%가 아니라 최소한 12.5% 정도로 해서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그다음에 지불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또 하셨는데 지금 2/4분기, 3/4분기에 기업의 예상 손실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점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25% 관세를 낮춰야 됩니다, 위원님.

○임종득 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되는데 왜 못 하고 계시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 자체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임종득 위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8월 7일 기준으로 소급 환급하는 걸로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도 그걸 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25%를 빨리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음 PPT.

철강 관세 이게 지금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인데 50% 그대로 맞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강만 그런 게 아니고 철강의 파생상품 400여 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과 EU가 그대로 50% 한다면 이거 수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철강업계하고 다양한 얘기도 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마지막으로 농산물, 반도체와 관련해서 방어를 했다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방어했냐는 부분들이 많아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농산물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쌀이라든지 소

고기 분야는 방어를 확실하게 했고요. 반도체 부분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기를 제발 바라고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우려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겠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갑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 경기도 고양시 김성희입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 종묘와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장님께 질의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결산 국회 당시에 이 자리에서 왕도 밑에 내려가서, 왕도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했던 종묘를 김건희 씨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개인 카페처럼 사유화한 황후 놀음에 대한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도 또 종묘의 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청장님, 서울시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바로 앞에 140m 높이의 건물을 올리겠다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던데요 사실입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지난 21년까지 소위 말하는 서울시의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종묘와 가까운 종로변은 최고 높이를 55m 이하로 하고 청계천변은 71.9m 이하로 하기로 그 당시 문화재청, 지금 국가유산청이지요. 여기랑 협의가 돼 있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결정됐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랬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가 24년 9월에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서 유산청에게 요청을 했는데 최고 높이를 145m로 고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의회에서라도 국가유산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하도록 했던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5항을 돌연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단체 등이 오세훈 서울시의 문화재 훼손을 염려해서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센터에 민원을 집어넣었고요. 지난 4월 유네스코는 서울시에게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유산청도 지난 9월에 서울시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을 중지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재정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지난 9월 25일 날 서울시에서 시행령을 공고한다고, 예정됐다고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9월 24일 날 서울시에 공문으로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성희 위원 답은 안 왔나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답은 연기한다는 말만 왔지……

○김성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답으로 온 것이 140m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 발표였던 거네요, 결국?

○국가유산청장 허민 답은 안 오고 바로 이렇게 발표된 겁니다.

○김성희 위원 오세훈 시장이 140m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 말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종묘에 그들이 안 지나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거 그들만 안 지면 괜찮은 문제입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아침과 저녁도 다르고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데 그 문제는 여기에서 이야기할 개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한 세계유산 앞에 있는 경관의 훼손입니다.

○김성희 위원 경관 훼손에 대해서 이미 예비책을 세워 뒀더라고요. 94년에 종묘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심사 당시에 유네스코가 우리 정부에게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건물 건축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된다는 권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게 여러 가지 조항에 묶여 있지만 청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난 1995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권고 사항으로 ‘유산지구 부근에 그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지역의 고층건물 건축허가는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성희 위원 이것 지금 서울시도 알고 있나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알고 있을 겁니다.

○김성희 위원 아니, 유네스코의 이러한 보장해야 된다는 권고 사항을 유산청에서 충분히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것을 진행한다면 큰 문제고, 사실 이렇게 해서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된 사례들이 다른 데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개발하거나 아니면 건물 짓거나 해 가지고 된 곳이, 드레스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 한 세 군데 정도는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김성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독일 드레스덴, 영국의 리버풀 이런 데들은 재개발로 취소가 돼서 저희 종묘도 세계문화유산 취소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종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전 세계가 보존 가치를 인정한 보물인데 여기에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서 훼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청은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종묘 보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여론전도 같이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오세훈 시장님께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자리지 자신의 업적을 바벨탑처럼 쌓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 개인의 허영과 욕망을 위해서 종묘라는 이 국가유산의 그 정면에다가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는 발상 자체, 이 국가유산에 누를 끼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문체부장관님 그리고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장관님께도 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현재가치를 보면요, 2023년도 총매출이 22조 9000억 원이고요 전체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무려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판·방송 분야랑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음악이 가진 12조, 만화 2조 7000억, 영화 5조 9000억, 애니메이션 1조 1000억 원을 다 합쳐도 될 만큼 엄청난 거대한 문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 성과에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게임이 K-콘텐츠 바람의 중추지요. 23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133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게임이 83억 9400만 달러로 전체의 69.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케이팝을 되게 잘 알고 K-컬처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음악산업의 규모는 9.2%, 수출에서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게임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저희가 잘 알았으면 합니다.

문화적 이용 측면에서도 게임이 모든 사람들, 세계인에게 일상적으로 쓰여지고 있지요. 24년 기준으로 보면요, 게임 이용자 수가 34억 2000만 명이고 그리고 국내 게임 이용률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종합예술이지요.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기술도 있는 미래 콘텐츠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플레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 영상, 소설, 웹툰, 코스프레 등으로 확장되어서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화산업 중의 하나고요. AI, VR, AR로 확장되어 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문체부장관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K-컬처 300조의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게임이 중심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게임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 문화이자 K-콘텐츠의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김성희 위원** 총리님께서도 이런 문체부장관의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게임산업 성장세가 최근에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매출 증가율이 21.3%였다가 그다음에 11.2%, 22년에는 5.8%, 23년엔 3.4%로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 수출액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시장에서 국내 게임사의 점유율이 미국·중국·일본에 이어서 4위인데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대형사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고요.

문체부장관님께 또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것은 국민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서도 게임 문화·산업에 대한 진흥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적기라고 보는 데 견해를 같이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 방안, 진흥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스타크래프트, LoL 등 하기만 하면 전 세계 누구보다도 잘하고 진심으로 게임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밤잠을 설치 가면서 애쓰는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등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보면 우리 게임 산업과 문화의 미래는 어두울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좋아했던 것의 시작도 사실은 엔비디아가 처음에 기초를 쌓았던 게 한국의 PC방에서 그래픽카드를 썼던 문화라고 많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불필요한 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에 도입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유독 게임만 영화·드라마·만화에 비해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영화 많이 본다고 병원에 보내는 일 없고 음악 많이 듣는다고 환자로 취급하지 않는데 게임만 중독이니 질병이니 따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과몰입과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의학적 근거 없이 게임에 대한 낙인을 찍는 효과가 발생할까 걱정이요.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 등 모두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별도의 질병코드를 부여하거나 공식 질병체계 안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정신의 학협회는 게임이용장애를 정식 진단항목이 아닌 연구가 필요한 항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지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위원님 말씀처럼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국가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총리님, 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15일에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총리님도 이런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개인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부장관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 내에서도 각각의 부처 그리고 우리 사회 내에서도 문화계와 의료계에서 이견을 가지고 상당히 오래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김성희 위원 예.

○국무총리 김민석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하게 관여해서 관장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 입장을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러나 굉장히 이 부분은 질병코드로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래서 총리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총리실 주관하에 민관협의체가 운

영 중입니다. 여기에서 명확한 의학적 근거, 정확한 진단방법 마련은 물론이고 명백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선부터 질병코드화 이런 것은 안 하시도록 그렇게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인데요.

온라인 본인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보실 때 여러분들 아무 유튜브나 가서 누구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증을 해야 되는 경우는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입니다. 이건 누구나 동의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유튜브는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려면 아이의 경우에는 그 아동이 본인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증을 뭘로 하느냐,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심지어는 그냥 휴대전화가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해서 게임을—전체이용가 게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성인게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이용할 수 있는데, 유독 게임에 대해서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임을 먼저 인증하고 나서 게임을 이용하라고 하고 있는 것 이걸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콘텐츠하고도 명백한 차별일 것 같은데요.

문체부장관님, 이것 지금 물론 국회에서의 논의사항이긴 합니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또 하나 지적드릴 것은 콘텐츠 제작 관련된 세액공제제도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화나 영상을 만들 때는 세액 지원을 하는데 게임은 제작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조승래 의원이 얼마 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게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을 물었는데 부총리께서는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이미 높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쉽지 않다고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콘텐츠 쪽에 게임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드린 것은 또 다른 분야도 좀 확대해 나가려면 상대적으로 나은 부분은 조금 적게 해야지만 다른 부분에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김성희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콘텐츠진흥원이 24년에 수행했던 연구를 보니까요 영국 같은 경우는 34% 그리고 프랑스는 30%의 세제 혜택을 설계해 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미국, 일본 다음에 한국이 있는데 후발주자인 영국과 프랑스는 국가가 지원해서 따라오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넘어서야 될 벽들이 크게 있는데 지금 영국과 프랑스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한국만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고, 특히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우리나라 게임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세제 혜택을 R&D로 받을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연구실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인디게임들이나 작게 하는 데들은 따로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세제 혜택을 보

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된다는 말씀은 대기업에 한정된 문제라고 보고.

그런데 슈퍼셀을 포함한 외국의 많은 기업들이 10명, 20명으로 시작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한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은 저는 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인디·중소기업의 성공과 유니콘기업의 지속적인 등장이 우리 게임 산업과 K-콘텐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인디·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그런 미세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게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바라보면 게임이라는 산업과 문화가 가진 진가가 우리 눈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게임 문화와 산업에 대해서 색안경을 벗기는 것에 대해 지금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서 주고 계시는데요. 게임이 국가 신성장동력이자 핵심 문화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하 유관부처에서 대한민국 게임문화가 융성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과 문화 발전의 가장 큰 공헌자는 대한민국 게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용자와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에 대한 편견에 직접 맞서고 사회적 목소리를 내 온 이용자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게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게임 이용자 보호,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되지만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운영과 관련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성희롱 방지 또 사이버 괴롭힘 방지 등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약관도 강화해야 하고요.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좀 더 촘촘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경남 통영·고성의 정점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점식 위원** 정점식 위원입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장님, 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안, 소위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미 진행되고 있던 형사재판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재판중단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뭘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일단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헌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재판중지법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실장님의 답변 중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소위 형사소추에서의 소추의 의미가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게 다수 견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25년 5월 2일 날 발의와 동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그리고 법안소위 회부 그리고 5일 뒤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고 같은 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단 5일 만에 처리한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11월 2일 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이라고 호칭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기자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나서 그때 박수현 대변인은 11월 중에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던 이 법을 돌연 하루 만에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다시 바꿉니다. 물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날 실장님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실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대통령과 생각이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정점식 위원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생각이 같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정점식 위원 민주당이 이렇게 11월 중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하겠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행 처리 의지를 불태운 민주당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당이 얼마나 우왕좌왕 좌충우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자 당장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이처럼 그간 추진되어 온 과정을 놓고 보면 민주당 내 강성 세력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노력이 얼마나 그동안 급급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결정이 강성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 속에 또 앞으로 여론이 불리해지거나 궁지로 몰리면 다시 재추진할 것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이 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위원님, 이미 재판부에서 다들 더 이상,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또 그것을 만약에 기존의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 민주당이 그렇게 계속 재판중지법을 11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이 부분이,

사법부가 이미 기일추정의 방법으로 재판을 정지를 했지만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겠지요.

법치주의 국가의 핵심을 지탱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힘의 논리로 바꾼다는 발상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이 과연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오히려 국민의 평등권 및 사법정의 실현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장님,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 모든 국민 앞에 법은 평등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에 정정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천대엽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정점식 위원** 처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현재 중지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자 이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께서 민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운운하는 상황인 만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해야 한단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처장님 알고 계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러한 발언은 명백한 사법권 독립 침해 시도라고 보는데 법원의 입장을 대표하는 처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일단 그 부분은, 첫째로 입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재판사항으로서 각 재판부가 지금 84조 해석에 관해서 5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치주의가 가장 중요하고 법치주의는 국민의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사법이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서 출발된다고 봅니다. 그 점 저희들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처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게 사법부 구성원들 전체의 생각으로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의 발언처럼 정치권의 어떤 압박에도 법원은 독립적 재판 진행 방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천명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대장동 사업자 5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만배에게 징역 8년, 유동규도 징역 8년 등 중형이 내려진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법원이 역시 인정했다고 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면서 대장동의 수뇌부임을 스스로 밝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결국 많은 국민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법관으로서의 소신으로써 이 재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처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 진행하는 상황 자체도 역시 재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리와 판결 모두가 재판을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 재판부의 심리 상황 그리고 판단을 존중해 달라는 말씀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점식 위원** 앞서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린 재판중지법,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법률가 출신인 의원들조차도 이게 소위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일 겁니다.

조금 전에 비서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 제84조의 소추 규정이 공소제기를 의미할 뿐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처장님께서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제가 법사위에 가서도 그에 대해서는 헌법상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해서 5개 재판부가 이미 판단을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드린 바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면 그 판단에 따라서 소위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했지 이 헌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전히 최종적인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전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오히려 다수입니다. 단순히 형사소송법에 공판정지 조항을 넣어서 재판 중단을 시키기에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이런 견해가 다수인 것은 처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런 다양한 논의가 있고 견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통과함에 대해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줄속으로 처리된 재판중지법이 민주당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회를 통과한다면 헌법 103조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그리고 111조 법 앞의 평등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장님부터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를 비롯해서 모든 법관들은 초심, 즉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모든 사건에 임할 것이라는 다짐을 매일 하고 있고 앞으로 법관으로 봉직하는 동안은 계속 다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점식 위원** 최근 일련의 입법 논의가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헌정질서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법행정 차원에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법원이 절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소위 봐주기 판결, 죄 덮어 주기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처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각오를 말씀해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 법원행정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재판에서 모든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충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명을 저희들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입니다.

○**정점식 위원**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10월 1일 공표가 되고 1년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해야 될 법률이 180개, 하위법령과 규칙까지 합치면 9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1년 동안 굉장히 방대한 작업을 해야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갖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정말 소위 대한제국 시대부터 시행된 검사제도,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제도가 거의 100년이 넘게 시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 폐지가 되는 상황인데 과연 1년 안에 그 많은 제도들을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은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이미 수사·기소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다가 또 최근에는 다시 2개로 환원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때로는 표적수사, 어떤 때는 봐주기 수사 이렇게 해 갖고 권한을 남용했으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갖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폐지한다기보다도 기능을 재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결산심사 때도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과연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계자들 특히 법률전문가인, 형사소송을 많이 해 봤던 변호사들의 비판도 많고 우려도 굉장히 큰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도 당정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까지도 없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런 핵심적인 제도, 가장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아직까지 당정 간에 어떠한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안들, 특히 수사 지연이라든가 부실 수사, 암장수사로 인해 갖고 국민들이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장관님께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점식 위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실장님 산하에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만들었지요?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까지 회의는 몇 차례나 개최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 자문단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문단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점식 위원** 실제로 회의에서 소위 수렴한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물론입니다.

○**정점식 위원** 그 논의의 결론은 아직까지 나온 부분은 하나도 없고?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 초기에 정무위 국감에서 소위 추진단의 명단 공개도 처음에는 거부를 하셨지요? 그리고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사 파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파견 검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여러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초기 단계에서의 해프닝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린 것처럼 국무조정실장님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예, 충분히 감안해서 탄탄한 제도·법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소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서울 금천 최기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기상 위원** 저는 국무총리님과 경제부총리님께 청년 일자리 그리고 사회이동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에 청년 일자리 주요사업 예산 다양하게 편성을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

으로 일자리 찾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부총리께서 잘 살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두 번째로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저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겠지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이전 정부에서 마련하다가 조금 중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데이터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잘 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최기상 위원** 왜냐하면 이번 예산 때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부분, 청년미래 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상속 계급사회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개인적 상속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회적 상속으로 완화시켜야 된다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집행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이동성 지수라는 부분을 국가데이터처에서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야만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 현황이 어떤지 알 수가 있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표현이 있지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아프다. 모든 생명이나 유기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벽을 쳐서 갇혀 있으면 썩고…… 예전에 김민기 씨의 노래도 있었나요? 통해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왼쪽의 승자 재신임 패자부활이라는 제도가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보여져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승자독식과 패자지옥의 현실은 바뀌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이동성 지수의 개발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무총리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기상 위원** 그러면 국무총리님께 질문합니다.

청년에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뭘까요? 청년에게.

○**국무총리 김민석** 일 아니겠습니까?

○**최기상 위원** 일자리라고 합니다. 일자리인데 좋은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쉬었음’이 많아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원하는 일자리에 가장 의미를 많이 뒀고. 그다음에는 정책도 주거 정책 다음으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국정과제를 많이 마련했어요. 그래서 기재부총리께서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이 부분을 신뢰를 하고 취업에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황은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에 나가서 취업사기를 당하고 고령층은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빈곤율이 계속 1위랍니다. 청년들이 키보드 앞에서 주식시장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일자리에서. 그러면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하에서 좋은 일자리 몇 개를 어떻게 만들겠다, 내년 1월이면 이런 일자리가 열린다. 기다려라, 지원해라.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볼까요?

예전에 맹자 때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항산(恒産)’, ‘항심(恒心)’. 항산 해야지 항심이 있다.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거든요. 이게 민생이지요. 우리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민생입니다, 민생.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은 이 내용이 뭐냐?

다음 PPT 보여 주세요.

민생인데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주거·일자리·물가.

주거에 관한 부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매년 줄여야 됩니다. 이거 숫자로 개선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거, 겨울철에 한파와 대설 때문에 생존이 위협받는 국민이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주로 아이들과 고령층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님,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아무리 소득이 올라도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 소용없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일자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다, 생존이고 자존감이고 구성원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게 하는 매개체다. 저도 공직생활만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우리 국무총리님이나 정치인 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낙선의 시기,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아실 겁니다.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 아이를 안 낳느냐? 좋은 일자리가 평생 꾸준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요?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아도 자기가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라는 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2개예요, 우리 헌법에. 교육과 근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 교육과 근로, 이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은 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돈만 주면 되느냐?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헌법에서 정해 놔어요. 우리 국무위원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숫자 나열해서 고용률 많이 올라갔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돼 있잖아요, 헌법에. 헌법을 지켜야지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민주당 정부입니다. 민주당 강령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강령에 전문이 있고 1항이 있는데 2항에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수시로 대한민국헌법과 강령을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일하실 때. 그래야만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산을 써야 되겠지요.

다음 보지요.

그래서 ILO 고용국장께서 좋은 일자리란 저렇게 말을 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저러지 못한 일자리 지금 많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지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만드는 일자리는 저런 조건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가요?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거 아니니까?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데 일자리는 1등 못 한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I도 결국은 일자리로 연결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AI에 수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데 그것 때문에 내 일자리가 생길까라고 신뢰합니까?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루에 100개, 1000개씩 만들어 내면 6개월 지나면 청년들이 신뢰하지요. ‘믿을 만하구나, 역시. 이재명 정부, 김민석 총리, 우리 강훈식 실장님 믿을 만하구나’. 그래서 기다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보지요.

며칠 전 중앙일보 사설에서 저런 평가를 해 봤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 정부는. 그렇지만 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게 옳다. 이게 기성세대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하다.

며칠 전에 청년 연장 논의가 있었습니다. 필요합니다만 청년들은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체계나 그로 인한 청년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세대 간의 갈등을 정부가 방치하면서 논쟁을 끌어가게 됩니다.

새벽배송,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새벽 시간에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독일에는 한 병철 철학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피로사회,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성취에 억압된 사회다. 피로사회, 우리 사회가 그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새벽배송 없어도 살았잖아요, 잘. 다른 방식으로 돌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논쟁을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끌지 못하면 논란만 생겨서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표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새벽근무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WHO에서 평가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낮에 일을 해야지, 밤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밤에 일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 방향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지요.

저는 정책이, 이재명 정부가 5년의 임기입니다만 모든 정책을 오늘 계획하고 다음 달에 바로 발표한다? 그러지 못하는 정책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5년을 임신 상태에 있다가 출산하는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년도 있을 수 있고요 1년도 있을 수 있고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표현이 저렇게 있는데 ‘기다림 없이 태어나는 것들은 죽은 채로 살거나 태어나지 못한 채로 죽는다. 시간으로 하여금 얼마간 품어 달라고 하라’. 국민들과 상의해야 됩니다. 같이 이 정책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충분히 살 수 있을 때 꺼내 봐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제대로 밟고 있는지 우선순위는 명확한지 챙기셔야 됩니다.

다음 보지요.

유명한 소설가 보르헤스의 평가와 관련한 건데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우리가 오래 못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지만 개개의 인간은 오래 못 살지만 인류는 불멸할 것이다, 이게 우주적 불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과 역사라는 무한한 시간을 상상한다면 나 때는 안 되지만 우리 5대 후손들은 누리고 살 수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마 우리의 5대 조상들은 그 신념하에 나라를 지키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환경부장관님 계시고 산업부장관님 계시지만, 최근에 NDC 논쟁 있잖아요? 지금 산업

게 얘기 중요하지만 탄소 관련 문제는 5대 후, 10대 후의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다른 나라에서 안 하니까 ‘왜 우리만 해야 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지요. 저희 5대손, 10대손까지, 앞뒤로 합치면 아마 그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었을 거고 장애인도 있었을 거고 성소수자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세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자식·손자만 바라보고 정책을 하면 안 되지요.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복이 되도록 저희가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늘 상상해 주십시오, 우주와 역사라는 이 무한한 불멸을요.

다음 보지요.

버니 샌더스, 2016년에 예비선거 나와서 일자리 1300만 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률 만들어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라도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왜 표명을 못 하시나요?

며칠 전에 뉴욕시장 당선자, 맘다니인가요? 어떻게 당선됐는지 혹시 그 비결을 총리님 살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관련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무엇보다도 현재 뉴욕시민들의 민생에 대한 고통 이 부분을 직접 그것을 어젠다로 삼고, 운동을 하는 방법도 거리에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듣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기성정치를 뛰어넘는 노력을 한 것이 마음에 닿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기상 위원**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맘다니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읽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우리 정치하고 너무 달라요. 현장에서 만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잖아요. 다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때 유명한 루쉰 선생, 중국의 노신 선생의 글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아서 한 달 만에 잔치를 하기에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자가 되겠다, 벼슬을 높이 갖겠다 했더니 부모가 좋아하면서, 덕담을 해 주는데 이 사람은 곧이곧대로 ‘언젠가는 죽겠지요’라고 했다가 매를 맞았다는 건데 거짓일지 모르는 얘기에 대해서는 덕담을 받고 당연히 진실인데 매를 맞았다.

정치나 행정이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알리바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자꾸 뭘가 한다, 그럴듯하게 발표한다, 돈을 어떻게 쓴다, 그러나 연결이 돼야지요. 좋은 일자리, 물가 안정…… 오늘도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많이 얘기하십니다만 그게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내셔야 되잖아요.

자영업자가 일을 하다가 돈을 못 받아서 이 돈을 받아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수사와 재판인데 이번에 이렇게 바꾸면 내가 그 돈을 받는 데 더 신속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돈까지 받아 주는지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정부에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떠들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맘다니는 그거를 이해를 했겠지요.

끝으로 좋은 일자리 관련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총리님께 여쭙보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성공의 3대 요소는 이렇다고 합니다. 다들 들어 보시지요. 1번 과로, 2번 스트레스, 3번 돌봄 회피.

저도 홀로 계신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지 3년 됐습니다만 단 하루도 돌봄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미래는 아마도 요양원에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여 년 넘게 지내다가 이 좋은 세상을 떠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돌봄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존중받고 사랑하는 속에서 돌볼 수 있는가를 계획하지 않으면 저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성공한 공직자들은 특히 마지막 돌봄 회피라는 부분은 동의하실 거예요.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 이 돌봄에 관련한 부분이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될 건지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돌봄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돌봄 민주국가, 돌봄민주주의라는 화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 돌봄, 서로 돌보면서 살면 됩니다. 돈도 중요하고 필요하지요. 성장 중요합니까만 우리 국민들 스스로 서로 간에 서로 돌보면서 우리가 있어야지 너도 있고 나도 있다 이런 인식이 도달할 수 있도록 총리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대답 한마디만 해 주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최 위원님께서 늘 질의 때마다 자세를 좀 잡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철학적 깊이가 있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기술주의를 넘을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깊이 생각하고 저희 내각도 다 그렇게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박희승 위원님, 조지연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의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총리님을 비롯해서 장관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불통은 최악의 의료대란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그 갈등의 늪에서 나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총리님, 전 보건복지위원장 하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박희승 위원** 의료 정책의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이 총리가 되셔서 매우 기쁩니다. 취임 첫날부터 전공의·의대생들을 만나셨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난 정부에서 원인이 돼서 해당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쨌든 문제를 풀어 가자라는 얘기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박희승 위원**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데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보이고요.

지난 7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한 지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총리께서도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하셨지요. 대통령께서는 의대생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소회를 전하며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 서둘러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결국 이번에 취약성이 드러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게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가 돌아오기 시작한 건 큰 성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각종 수련 특혜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충원율은 59.1%에 그쳤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전남은 22%, 경북은 31%밖에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65%로 가장 높았지만 필요 인원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전공의 복귀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 지방 기피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한 가지로 딱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전공의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 혁신 문제를 짚 논의해 온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 문제를 포함한 것을, 지난 정부에서 발생시킨 의료대란을 넘고 의료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안을 차근차근 풀어 가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실례로 안과·피부과·성형외과는 10명 중 9명을 충원했지만 비수도권 소아과·소아청소년과는 10명 중 1명만을 간신히 뽑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의정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신규 공보의는 전년 대비 36%가 급감했고 올해는 4% 절감 늘었습니다. 공보의 수 자체도 10년 만에 27% 감소했고 지난해 기준 공보의가 전무한 보건지소도 다섯 곳 중의 한 곳에 달합니다.

의료대란 여파로 내년 군의관과 공보의 배치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현실입니다. 아주 쉽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런 현실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장기적 대책을 잘 연결시켜서 풀어 가기 위해서 빨리 의료혁신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요. 구성해서 논의를 가속화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안규백 장관님,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역 사병에 비해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이 너무 깁니다, 현실적으로. 원활한 군의관·공중보건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만 국방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익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 같습니다. 특히 군의관과 공보의 또 복무기간이 긴 여타 다른 병과의 장교들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날이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역 자원의 절벽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걸로 생각되고 거기에 동시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복무기간 단축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빨리 발표하여 의대생들이 더 이상 현역 사병 입영을 선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재명 정부의 소통과 노력으로 많은 부분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정갈등으로 드러난 상처를 이번에도 치료하지 못한다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 버릴 우려가 큼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주춧돌을 마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요. 그중 하나가 공공의대 설립인데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예, 동의합니다.

○**박희승 위원** 2018년 당시 정부와 민주당은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남원에 설치하는 것

으로 당정 협의 결정을 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관련 예산도 반영됐지만 법률 제정 지연으로 불용됐습니다. 당시 정부 사업 설명 자료에는 ‘대학은 남원시에 위치, 임상 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을 활용하여 순환 교육 실시’라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추진,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예.

과거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한다면 의대 정원 갈등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남원은 이미 부지의 55%를 매입하는 등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도 당론 채택된 법안이며 총리님도 공동 발의하신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 장관은 관련 입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하셨습니다.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를 통해 다듬을 부분이 있다면 정부의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마칠 계획인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구체적인 시기는 아마 복지부장관께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남원 또 공공의대 관련한 부분, 과거의 서남의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특정 지역 차원에서 꼭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과정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11월 출범한 걸로 말씀하셨고 어쨌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인 공공의대가 이재명표 의료 개혁의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그리고 총리님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님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에 전북 새만금을 찾아서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린 현장만큼 구체적인 결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새만금 공항·신항도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같은 생각이고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에 입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런데 새만금신공항 개발 사업이 법적 공방에 지금 휘말리고 있습니다.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 가처분 사건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나 신항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동력인 하늘길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주요 근거는 조류 충돌 위험성입니다.

2021년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새만금신공항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의 610배라는 주장 등에 대해 일부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쪽만 맞는 사실입니다. 같은 평가서에서 새만금공항은 조류 비행을 방해할 만한 건축물이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초지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 인접해서 운영 중인 군산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비교 분석하여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불과 1.35km 떨어진 군산공항의 경우 조류 충돌 위험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일부 주장만을 근거로 새만금공항을 취소하는 것은 새만금 개발이라는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30년이 넘게 거쳐 온 법적·행정적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수정·보완해 문제를 해결할 일에 대해 사법부가 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입니다. 안전·환경 등 기존 대책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즉각 수정·보완하는 등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고 저도 새만금을 갔을 때 그런 말씀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한 범위를 벗어난 사법부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자체는 그 자체로 걱정하게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다음에 제2중앙경찰학교 관련해서 총리님과 그다음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혹시 제2중앙경찰학교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들어 봤습니다.

○박희승 위원 현재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가 포화 상태라 작년 7월 후보지 신청을 받았고 전국 47개 기초지자체가 공모해서 작년 9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시, 예산군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현재는 경찰청에서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원래 작년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계속 미루어져서 최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유재성 직무대행이 연내 발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구체적 내용까지는 경찰청에서 챙기겠지만 후보지 세 곳 중에 경찰교육을 위해 가장 적합하면서도 국가균형성장 측면에서도 타당한 곳으로 최종 부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시 신입경찰 약 5000명이 입교하게 되면 약 300억 원의 경제효과와 300명 규모의 상주인구 유입효과가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가균형성장 측면에서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가장 절실한 곳은 남원입니다. 남원은 세 곳 후보지 중 유일하게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인구수는 다른 후보지인 아산 대비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 1966년 통계를 보면 남원이 18만 7000이었고 아산은 17만 1000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남원시는 7만 4900 정도에 불과하고 아산시는 35만 7000으로서 굉장히 인

구 변동이 심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전체 32개 중 수도권이 9개, 충청권은 13개지만 호남권은 3개뿐이고 그중에서도 전북은 단 한 곳입니다.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훈련상의 불편도 덜기 위한 균형적인 분산 배치가 필요합니다.

더하여 남원 운봉의 116만㎡ 후보지는 대부분 국유지로 토지매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바로 첫 삽을 뜰 수도 있고 경사도가 낮은 평지대라 시설 확장 가능성도 많습니다.

남원은 경상도·전라도를 잇는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KTX·SRT 같은 고속철도가 지나며 2030년 개통될 달빛철도도 지나가게 됩니다. 경찰 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영호남 정치권은 물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남원 유치에 힘을 실어 주는 등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영호남 주민 약 2000여 명이 국회를 찾아 남원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된다면 영호남 상생협력과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동시에 이룬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행정기관 분산 배치나 남원 지역과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할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소멸위기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입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총리께서 위원장이신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통해 RE100 산단이 지정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RE100 산단이 한 곳이 아니라 지정요건을 갖춘 곳이라면 여러 곳이 지정되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에 더 부합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 부분은 특별법이 여러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위치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복수 여부 또 개수 이런 부분은 논의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지난 9월 총리께서 새만금을 직접 방문하셔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김의겸 새만금청장도 취임 일성으로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유지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광역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생산량 통계를 살펴보면 전북이 전국 생산량의 19%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 측면에서도 새만금은 간척지인 만큼 RE100 수요 기업에게 충분한 부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요건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북 새만금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안 나오셨나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차관입니다.

○박희승 위원 향후 10년간 철도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현재 연구용역 중인데요. 현재 지금 대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원을 잇는 대전남원선이 그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김천에서 진주 가는 고속선은 예정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박희승 위원 그러니까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동쪽은 돼 있는데 백두대간 서쪽은 지금 전혀 철도교통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남원이나 여수 같은 사람들은 오송에서 익산으로 가서 다시 동진을 해 가지고 남원을 거쳐서 여수를 가고 있는데 빨리 대전에서 무주-장수-남원을 거친 선을 국가철도 5개년 계획에 꼭 넣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예, 균형발전 측면 고려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연 위원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여야를 떠나서 국익 차원에서 APEC 정상회의 이렇게 잘 치르게 도와주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지만 제가 예결위 때 늘 부탁드렸고 당부드렸던 경북의 무형유산들이 이번 APEC 계기에 많은 전 세계 각지에 홍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리님, 제가 결산 때 뵈고 지금 이제 2026년 예산 편성 시기에 이렇게 다시 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렵게 질문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책을 출간하는 거는 출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지만 출판기념회 열어 가지고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책은 서점에 가서 사도 된다 이런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총리께서 그때 당시에 법안을 한번 검토해보고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긍정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대략 봤는데요…… 뭐 그랬습니다.

○조지연 위원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취지에서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출판기념회……

○조지연 위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총리님.

혹시 공감하십니까,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요?

○국무총리 김민석 출판기념회를 제약하는 거라기보다는……

○조지연 위원 출판기념회는 열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 아니십니까?

○조지연 위원 예, 투명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 큰 틀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에, 총리님께서 공감했다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이 계시는데, AI 3대 강국 연다면서 10조 1000억 원 투자한다고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지연 위원 그런데 지난번 2차 추경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13조 원 저희 편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 우리 청년, 미래세대가 다 갚아야 될 그런 빛인데 이게 전액 국비로 지급을 하지 않고 지방비를 10% 매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작 생색은 정부가 내고 지방정부에 물어보니, 저희 의원실 차원에서 지자체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정말 지방채 발행했다라는 그런 광역자치단체도 있었고 그리고 재난기금을 끌어다 쓴 곳도 있었습니다. 이게 영호남 할 것 없습니다. 전국 각지가 대부분 다 비슷한 처지였어요.

이런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매칭 비율에 따른 재원 조달하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빚도 내고 그리고 심지어 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체 현안 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 재원 확보가 곤란해졌다, 그리고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이 부담이 된다, 그리고 매칭비 부담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라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3조 원 그리고 모든 전 국민에게 15만 원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미래산업 그리고 청년일자리 이런 것들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할 때,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 이것을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저희들이……

○조지연 위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계획 부분은 지금 경기 상황이나 또 지역의 어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제가……

○조지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추가적으로 또 지급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려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저는 이런 사업보다 정말 필요한 데,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SOC 사업 그리고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가오는 11월 9일이 소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소방관 급식 단가가 대부분 4000원대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 전 국민에게 15만 원 주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국민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우리 소방관 이분들에게 처우 개

선 차원에서라도 급식 단가를 인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부총리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기재부가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고생하는 소방관들의 급식 단가가 진짜 다른 데하고 어떤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지연 위원** 그리고요 지금 정말 계층 사다리가 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요즘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개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용만 쓰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그동안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다’ ‘돈 모아서 집 사라’ 이런 얘기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장관님들 그리고 정부 부처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 기성세대들은 자산 형성할 때 부동산으로 자산 형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세대들에게는 돈 모아서 집 사라. 이거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없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없었던 단어, 바로 ‘청년일자리’.

저는 이것 대통령실에서도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겠습니까만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를 언급을 해 주셔야지 저는 마땅히 된다고 보는데 이런 언급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진짜 외환위기 이후에 최저치 그리고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년 연장 65세로 법정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고령화 시대 그리고 저출산 시대적 흐름에 불가피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이런 대책들이 충분히 아우러져서 가고 있습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늘 부족함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에 청년일자리라는 단어가 빠졌었나 하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만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별도로 우리 기업들에게 청년일자리를 특별히 호소하고……

○**조지연 위원** 총리님,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 호소에 또 부응해서 4만여 일자리가 약속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가 정말 이렇게 피해 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요 이번 예산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15세에서

34세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지연 위원 그런데 이게 한 900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목표치 대비,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치 대비 실적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좀 질의를 했었는데 청년도약장려금을 단순히 지금 500인 이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인 이상 기업도 이 부분을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설계를 고용부에는 잘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기재부와 한번 협의를 해 봐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사실 비수도권의 어떤 청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에 도저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고용부랑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가지고, 협의해서 가지고 한번 의원실에도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제조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지연 위원 재정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재정도 마찬가지로 사업적인 측면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조업, 제조업. 숙박업까지,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조지연 위원 아닙니다. 일단은 제조업을 얘기하는 것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제조업.

○조지연 위원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지연 위원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예산보다 두 배 정도 편성이 더 돼서 한 1300억 정도 규모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결산 때 국토부장관께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국비 50%, 지방비는 50%를 또 매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생회복소비쿠폰 이거 하는 데 9 대 1도 사실은 지방이 버거워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비를 50%나 매칭을 해야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방 재정이 안 그래도 열악한데?

그런데 지방의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이 사업들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수요 조사도 없이 또 지자체에 떠밀어 버리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맞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이것 국비 매칭 비율을 조정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 대상을 이렇게 좀, 지방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조지연 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숫자를, 지금 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고민이 그겁니다. 이게 올려 주고 숫자까지 늘리면……

○조지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많으면 재정적으로 저는 전 국민 15만 원 주는 것보다 오히려 청년들에게 이런 지원을 더 하라는 취지인데 그것은 재정적인 어떤 불요한 데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방에 자꾸 이것을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 취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

○조지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것 예산이 더 늘어났으면 매칭을 이만큼 또 더 해야 된다, 지방정부가 이만큼 더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무리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숫자를 지금은 조금 늘리는 게, 청년들 혜택을 늘리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해서 여력이 좀 된다면 조금이라도 뭔가 하여튼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검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지연 위원 그리고 총리님, 지금 온실가스감축목표 총리님 주재로 관계 장관님 모으셔서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지연 위원 지금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이렇게 감축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총리님께서서는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숫자만 갖고는 저도 보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는 충분히 듣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나름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여러 얘기를 하는 말씀 듣고……

○조지연 위원 총리님, 이 목표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계가 받을 그 영향은 정말……

○국무총리 김민석 알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다배출 업종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다배출 업종에서 탄소 감축을 하지 못하면 저는 그 목표를 아무리 높게 과감하게 잘 세워도 이것 실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50, 53이 다 산업계에 대한 부담은 일정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논의를 할 때 어떤 경우든 필요한 부분, 그로부터 부담을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또 충분히 잘 같이 병행해서 제시되고……

○조지연 위원 총리님,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후위 국감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게 NDC 달성을 위해 산업별로 기술 전환에 필요한 비용이나 설비투자 비용 등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도 없었고, NDC 달성을 위해서 감축 기술별로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더라는 그런 추산도 없고. 이게 그런 계획들 없이 막연히 목표만 세워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실현하려고 목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리께서……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지만, 이게 지난 9월부터 시작됐지만 정권 교체기가 있었고 중간에 중단되면서, 토론회를 여섯 차례 진행했다고 하지만 2주에서 3주 사이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결론을 내서 UN에 제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배출 업종에 대해 무조건 지원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의 어떤 업계의 이 고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산업계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환경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과 산출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거라도 의원실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알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총리님께서 경제부처부터는 안 나오셔서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총리실에도 대통령의 공약 내지는 국정과제를 종합해서 평가하고 관리하고 진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SOC 사업도 다 같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종합적으로 공약과 국정과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지연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나오셨습니까?

○국무조정실장 김영수 예.

○조지연 위원 저희가 국무조정실에 대통령 공약 중에 지역 SOC 사업 추진 현황, 관리 계획 자료 이것 요청드렸더니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걸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역대 정부별로 대통령의 역점 사업, SOC 사업, 공약 사업 이런 것들은 정책 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계속 해 왔다고 보는데 이런 취지의 답변은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실장님. 관리하셔야 됩니다.

○국무조정실장 김영수 예,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리고 제가 국토부에도 문의를 해 봤더니, ‘대통령 공약 중에 광역 단위 SOC 사업 어떤 게 있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수소충전소 구축,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이 단 두 가지가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께서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하겠다고 했고 대구 도시철도도 5호선 건설하겠다고 했고 대전에 GTX-A 광역철도 추진한다고 했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한다고 했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사업도 대통령께서 경북 공약으로, 영남권 공약으로 내세운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부처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국무조정실에서는 ‘부처에 물어봐라’, 부처는 정작 이 2개 사업만 저희한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는 SOC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중에 아마 공약과 국정과제

로 대선 후에 확정된 부분 사이에서는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부총리님, 오늘 질의를 보니까 관세협상 이후에 국민들께서 ‘외환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단기외채 비율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들이 3년 평균 지금 38% 정도이고 아마 금융위기 당시에는 79%, 단기외채가 컸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때보다는 지금……

○위원장 한병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외환 소요가 있다 보면 우리 외환보유가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자금 조달할 때는 이자 또는 배당, 지금 우리가 한 4200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하고 또 부족하다면 정책 특별법을 만드는 그런 조직에서,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4200억 이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렇고요.

그리고 IMF 대외부문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외환보유액이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5월 달에 했나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한 4200억 불 정도 가지면 단기외채 비율이 좀 낮고 또 저희들이 해외자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외환 충격에 지금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 이렇게 IMF에서 보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S&P, 무디스, 피치 등에서 신용등급 관련해 가지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하나의 리스크였던 정부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를 했잖아요. 이런 평가는 긍정적 평가로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3대 평가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신용등급 강등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난번 무디스에서 한국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한국은 지금 재정도 잘 관리하고 있고 또 새 정부 들어서 우리 성장정책을 잘 발표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의 주가에 반영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 총체적으로 반영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관련해서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 장시간 앉아 계시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본인이 질의할 때 관계있는 대상 장관님들을 지명해 주시고 그사이에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회의 진행의 범위 내에서,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시 이석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서왕진입니다.

점심 막 드시고 오셨을 텐데 제 목소리가 졸음을 부르는 목소리라…… 총리님하고 부총리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릴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좀 편하게 계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유산은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민주주의 훼손 또 헌정질서 교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책임·무능력·무비전 3무 국정운영으로 인해서 초래된 세원의 축소 또 국가재정의 악화가 아직도 그 폐해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정지표만 보더라도 윤석열 3년 임기 중 국세수입이 15% 감소했고 3년간 97조 5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사실상 국가재정을 파탄 낸 3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구나 건국 이래 유례없는 R&D 투자 축소와 대비되는 각종 치적 쌓기용 예산 낭비 또 허례허식 의전이나 행사, 해외순방에 국고를 씹짓돈 쓰듯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국민들 또 우리 국가재정이 잘 버틴 게 용하다고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6년 예산은 국가가 국가답게 또 국민이 국민답게 살 수 있도록 다시 국가재정에 주춧돌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정 예산이 첫째 윤석열 정권 3년 퇴행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예산, 두 번째 AI·반도체·첨단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 세 번째 민생을 지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예산이라는 그런 기조로 수립되고 운용돼야 한다 그런 원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민주권정부 첫 번째 예산인 이번 예산안이 제대로 수립되고 또 운용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훼손시킨 세입구조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가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5년간 약 8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간을 거덜 낸 무책임한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조세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전환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 과표 구간별 1%p 인하 부분을 원상복구한 것 또 증권거래세를 복원한 것은 감세정책 방향을 중단하고 응능부담의 원칙, 즉 납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데 총리님, 그런

기조가 맞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맞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런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약 35조 6000억 원의 세수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세법 개정안 이후 처음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80조 원의 일부라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런 과세의 기본원칙 또 응능 부담의 원칙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인데요. 정부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내리게 되는 개편안인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님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25% 정도로 낮춰야 뭔가 배당이 좀 제대로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일리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25%로 낮추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하신 그대로 최고세율 35%로 처음에 제시가 됐었고 그런데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나와서 현재까지는 최초의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열어 놓고 말씀을 들어 가면서 이것은 연내에 정리해 가면 되지 않느냐, 아마 부총리께서 또 기회 되면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기조로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정부 내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왕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세입 기반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얼마 전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도 철회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5년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세수 증대 효과가 사라진다는 이런 비판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실제로 도입을 하게 되면 향후 4년간 총 9136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국회예정치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35%에서 25%로 더 낮추게 되면 이게 더 커질 텐데요 이런 점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초에 이 개편안의 취지 자체가 낮은 배당 성향 자체가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배당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상 유인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이라는 것이 배당소득 세율 때문에 꼭 발생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특유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지배의 괴리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근본 원인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총리님은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맞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더구나 경제현상과 관련된 것은 하나의 원인으로 딱 일의적으로 해석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

목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세제개편에 있어서도 세원의 확충 내지는 회복이라는 측면과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한다라는 면을 갖고 있는 그 양자 사이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회복을 하면서도 큰 틀에서 배당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낫겠는가 하는 그런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설명됐습시다라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한국 ESG기준원 분석을 보면 소유 지배 과리도, 그러니까 큰 회사일수록 주주환원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라는 것이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시다라는 이런 어떤 구조적 원인 자체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대중요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자칫하면 기존 고배당 기업만 과잉 지원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일반주주를 위한 주주환원 차원의 배당을 증대한다는 제도의 애초 목적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애초 목적도 달성 못 하고 또 정부의 세원 확충 노력하고도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번 판단해 볼 일인데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거 한말씀만……

○서왕진 위원 제가 좀 단순한 질문이기는 합시다만 총리님께 여쭙본다면 어쨌든 우리한테 시급한 확실한 세수 확보 이런 관점하고 배당소득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분명한 실제로 주주환원의 측면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시급할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래서 한말씀만 드리면 최초에 35% 안을 제시할 적에는 세수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전체 시장이라는 측면이 이 정도면 큰 무리 없이 균형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열어 놓고 논의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이, 지금 국회 내에서 25%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논의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정리 내지 수렴을 해 봐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보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서 최상위 쏠림현상이 상당히 큰 소득이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 저희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배당소득 금액이 3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10년 사이 2배 이상이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합니다.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은 원천적으로 고소득 쏠림현상이 굉장히 큰 분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앞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종합해 본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한편으로는 배당소득 증대 효과가 불분명하다, 또 당연히 감세 결과를 가져온다, 세 번째로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말씀하신 대

로 이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좀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지난번에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금투세와 관련한 논쟁을 할 적에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논거가 오가고 그러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것들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아마, 합리적인 토론이 되면 저희는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최근 주식시장의 상황들하고 연동해 본다면 그런 고민들이 일리가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세제개편 과정에서 이 점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분리과세를 꼭 해야 한다면 저희 당의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이고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내용을 다루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쭙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게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라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즉 지배주주하고 일반주주에게 다른 배당률, 일반주주에게 지배주주보다 좀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는 것을 해서 차등배당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에 대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보다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배당 증대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주주환원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높인다는 점에서 최근의 상법 개정 취지하고도 맞는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리님, 이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차등배당이라는 게 다른 한 측면에서는 가족 간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어쨌든 법안 제안을 드렸으니까 함께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실효세율 관련해서도 총리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표 구간별로 1%p씩 상향한 것, 그래서 22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해서 확충하기로 한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미 각종 공제로 인해서 최상위 기업의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법인세로 인한 추가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좀 제기가 됩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지난해에 법인세 신고를 한 전체 기업을 보면 실효세율이 16.7%고요 상위 10대 기업은 한 20.3%인데요, 명목세율보다 한 3~5% 정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저한세율 적용 기업이 급증해서 지난해 이 적용 기업이 총 13만 6853개로 전년 대비 60%가 넘게 증가했고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9.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명목 최고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낮지 않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마는 실효세율까지를 고려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법인세로 인한 세수 확

충 효과 자체가 과연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법인세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예외가 생기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특히 전략적 산업 또는 국가적인 어떤 신산업 이렇게 하면서 자꾸 감면되는 것도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충돌이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쌓인 측면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지적이신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실효세율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왕진 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분 종부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세금 중과를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요. 그런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서울의 고가주택 한 채 이런 걸 사려는 수요가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이른바 뚝뚝한 한 채 현상인데요. 서울의 집값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공제로 인해서 뚝뚝한 한 채 현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장관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현재 아시다시피 개인의 경우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0.5~5%까지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이상인데 이게 실제 거래가로 보면 한 17억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장기보유 또 고령자 공제 합치면 거의 세액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료화면 보시면, 실제로 2024년 실체를 보니까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합부동산세가 89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있는 17억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89만 원 정도다,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종부세가 높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부세에 대한 과도한 공제 때문에 고가 1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서 오히려 뚝뚝한 한 채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게 바로 강남 3구나 한강벨트의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게 또 주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총리님 혹은 경제부총리님이 답하셔도 좋은데, 이런 과도한 공제를 좀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가지는 과세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서왕진 위원** 워낙 민감한 주제라서 쉽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세금을 높여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한 세금 혜택이 공평과세 원칙을 무너뜨리는 문제 또 세원 확보에도 굉장히 부정적 작용을 해서 특히 지방재정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과도한 공제 조치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데, 경제부총리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동산정책 전체의 어떤 구조 속에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좀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의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서울 광진구의 고민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년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늘 기재부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냐를 가지고 감론을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민감해지게 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돈으로만 환산되는 것들만 들여다보는 게 전부여야 할까 하는 고민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K-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케데헌 그 만화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혹은 아이돌 그룹의 쇼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다들 제목 정도는 알고 또 자부심 정도는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K-콘텐츠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당장 환산되지 않으니까 하는 이유로 자꾸만 밀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부 돈의 논리에 눈이 멀어서 후손들에게서 우리가 갈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유산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어제오늘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묘에 대한 겁니다.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개발로 인해서 취소된 사례가 한 3건 정도 된다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종묘 앞에 40층짜리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서울시에 전달한 바가 있는 것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수회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유네스코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그 법에 의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고민정 위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까지는 중지된 상태로 가져왔었는데 최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한 특별한 답변을 받지는 못하셨군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세계유산 영향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을 반드시 하계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대법원에서는 개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지금 뉴스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고민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단위에서 이것을 멈춰 줘야 되나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일단은 세계유산 영향법이 현재 작년 10월에 법제처에서 법은 통과됐는데 아직 시행령이 각 부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다시 저촉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유네스코하고 함께 많은 국제기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과 함께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위원회들과 함께 현명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 갈 생각입니다마는 걱정이 많습니다.

○고민정 위원 대화의 상대가 서울시입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의 결심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네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연 어떤 결단과 답변을 줄지 유산청장님께도 혹시 오는 게 있으면 저희 국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고민정 위원 그런데 이 종묘 앞에 건물을 들어서게 만드는 개발 문제도 마찬가지로만 또 한동안 논란이 많이 됐었던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차관님 나오셨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해수부 기조실장입니다.

○고민정 위원 기조실장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한강버스가 정식으로 운항되기 전에 속도 테스트, 시운전 이런 것 해 보셨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건조검사를 받았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때 최대속력이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그것은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것으로는 17노트가 안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 아니면 저한테 나중에 다시 말씀을 주시고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고민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은 최대속력이 20노트가 나온다, 평균속력은 17노트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 보니 최대속력이 17노트가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 시장이 잘못된 말을 했든지 아니면 테스트가 조작이든 혹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든지일 텐데 어쨌습니까? 공단에서 테스트를 잘못하거나 혹은 조작된 숫자를 말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아니요, 정확하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 잘못된 숫자를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검사했을 뿐이니까요.

사실은 시속 몇 킬로미터냐, 그러니까 몇 노트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빨라야 결국은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빠르면 빠를수록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간시설들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

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양경찰청에서 누구 나오셨지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차장직무대리 나와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4년 2월에 보도자료를 낸 걸 보니까 해경하고 한강버스 VTS로 협의를 한 적이 있다,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고 그렇다고 말을 하던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23년 7월 19일 날 최초 협의를 했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때 한강버스 VTS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한강 전체 개발에 대한 내용 중에 리버버스도 포함돼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필요한 장비나 시설들에 대해서 용역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본 자료로는 23년 당시에는 서울항 조성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한 바는 있다고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했는데 VTS가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저희 청 의견으로 24년 5월 달에 VTS는 교량이 17개나 되고 한강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 공식적인 의견을 준 때가 23년입니까?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24년 5월입니다.

○고민정 위원 24년 5월입니까?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23년 때는 그런 의견은 드린 바 없으시고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예, 그때는 용역이 필요하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같이 한번 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나 23년에도 서울에 교량이 얼마나 되고 폭은 어떤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의견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상에서 VTS를 수십 년간 운용해 온 경력은 있지만 전문기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

○고민정 위원 시간이 좀 필요했군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해경이 VTS가 필요하지 않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을 24년 7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5월입니다.

○고민정 위원 5월, 그때 주는 바람에 서울시는 24년 2월에 대국민 거짓말 브리핑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해경하고 VTS 도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했다 그리고 할 거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진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속도가 못해도 17이다 그리고 최대속력은 20이다라고 서울시장이 누누이 얘기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17이 안 나와요. VTS, 해경하고 계속 협의를 했다고 브리핑까지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해경은 거기에 대해서 결론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지금 CCTV를 설치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38명의 상황실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6명만 근무를 하고 있어서 뚝섬에 있는 상황실은 운영을 지금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것 괜찮습니까?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CCTV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CCTV는 사실은 설치대수보다 운용 인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운용 인력이 38명 대비해서 6명이면 한참 모자란 숫자인데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소통한 게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보시기에,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이 정도의 인원 가지고는 CCTV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지요?

○해양경찰청차장직무대리 여성수 모르겠습니다. 요즘 CCTV는 지능형 CCTV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 말고 AI로 작동하는 게 현재 군에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177대의 CCTV가 추가로 설치됐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저희 국민들이 특히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난 몇 년 동안, 이태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벌어졌었고요 세월호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국가를 믿고 몸을 맡겼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벌어지는 게, 매년 뭔가 터지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러면 누구에게 기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CCTV가, 지금 당장은 무슨 대단한 재난·재해가 발생됐거나 혹은 선박에 잦은 사고들은 많지만 아주 대형 사고는 아직은 벌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CCTV를 관리하는 인력이 반의반도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나오셨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고민정 위원 한강에 보면 한강수상안전교육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뚝섬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매년 초등학생 5·6학년들이 한 1000명 정도씩 생존수영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강버스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수면 흔들림이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교육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이걸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범위가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파동에 의해서 밀려나는 현상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교육부가 직접 협상할 대상은 아닌데 교육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이

한강버스의 항로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와 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관님도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관련 부서에 확인해 봤는데 없다고 들었습니다.

○**고민정 위원** 우리 정치인들이 매일 입만 열면 말하는 게 단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놓치고 나면 그제야 땅을 치고 통곡을 하지요. 특히나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루에 운항하는 횟수가 열여섯 번인데요 지금 서울시의 목표에 의하면 내년에는 서른두 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행만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급행도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크고 잦은 파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견된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끔 장관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오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고민정 위원** 참 이 한강버스가 여러 군데를 다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밤섬 문제입니다. 밤섬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한강버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처럼 가끔씩 운행하는 경우들은 그럭저럭 괜찮으니 지금까지는 운영이 되어 왔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버스가 본격화되면 32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속도는 훨씬 더, 지금의 유람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30분 안에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주파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단체는 밤섬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수중생태계에 대한 걱정들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장관님께서 하시기 전에도 협의나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앞으로의 어떤 보호 방안이 있는지를 들어 본 적 있으신가 묻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따로 들어 본 바는 없고요. 한강버스가 운영되는 지점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영향평가 과정에서 혹시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는지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서울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요 이게 왜 꼭 만들어지고 나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이제 막 다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왜 이 설거지를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원망의 마음도 드실 겁니다. 저도 정말 화가 납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느려 터진 한강버스를 무슨 출근시간에 이용하겠느냐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 생존수영하는 그 문제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시설들은 연결하는 고리들이 다 파손됐습니다. 제가 다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요 한강버스의 장점을 정시성이라고 홍보를 하길래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도착

은 하고 출발은 하나 보다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무려 23분이나 늦게 도착하더라고요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또 밤섬에 대한 문제들, 저는 환경부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 서울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나. 지금 제 눈앞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국무위원들께서 앉아 계시지만 지금 이 화면은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속력 20노트라고 홍보했는데 17도 채 안 나오고 있고 정시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지만 제시간에 도착도 안 합니다. 해경과 VTS 협의했다고 말했지만 아까 답변 들으셨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도대체 서울시장의 무슨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강버스 조달자금이 무려 1755억 6000만 원입니다. SH와 민간 기업이 51 대 49%로 출자해서 주식회사 한강버스를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수익구조도 51 대 49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이 49%의 투자금 정도는 넣어야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조달금액 대비 고작 2.79%밖에는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위험은 시민들에게 이익은 민간 회사에게, 이 생각밖에는 안 납니다.

2007년에 시작했다가 2024년에 결국 다 망해 버린 수상택시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택시 비해서 한강버스는 50배가량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주식회사 한강버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으로 가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서울시의 일이니 오세훈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저희 서울시민들은 그리고 뚝섬선착장이 있는 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혹시나 어떤 사고가 벌어지지 않는을까, 안전에 0.001%의 위험이 있어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드린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점들이 있으니 해당 부처에서는 최대한 많이 검토해 주시고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도 해 주시고 저랑도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지난 3월 22일 날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혹시 기억하시나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임미애 위원 그때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10만ha가량의 산림과 농지가 탔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무려 2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1만 7158대 그리고 주택은 3848동

이 났습니다. 농업시설만 해도 6000건이 넘는 게 다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산불 피해주민들의 지원과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임미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런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지금도 많은 피해주민들이 임시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생계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만나 보면 이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사과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올해 소득이 0원이다. 대출을 받아서 생계를 꾸리고 있다. 긴급생계 구호자금을 받기는 했지만 내년에도 소득이 발생할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보다 더 큰 걱정이 뭐냐 하면 집 문제예요. 농가주택을 짓고 들어왔을 때 사실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집은 다 났는데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대출금을 다 못 갚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 특별법에 보면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13조에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 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택의 문제, 언제까지 이분들이 임시주택에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니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그것을 또 갚지 않으면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고 이런 난감한 상황인데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2022년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요 사고 직후에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중은행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은행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했고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 여기에서 유가족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유가족이 긴급 대출을 신청할 때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산불 피해 주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수 있을까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요. 아무래도 그 지역의 농협이라든지 해서, 농림부도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살펴보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피해주민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그래도 좀 따뜻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서 주민들이 매우 안타까워한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계절근로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가 생겼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의 역할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데요. 입법예고 내용 중에 보면 민간단체가 전문기관에 지정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주노동인권단체에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들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큰 이유는요 첫 번째로 브로커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본국에서 모집하고 교육하고 송출하는 일을 하자 이게 취지인데 그런데 기존에 브로커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전문기관 지정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문기관은 꼭 공공기관이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식품부차관입니다.

○**임미애 위원** 차관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임미애 위원** 이게 농식품부하고 저희가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무부장관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도 지금 현장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입장 차이가 있어서 아직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문제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아무 기관이나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현장 잘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맞게 제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농식품부 산하기관 중에 이 일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농업고용인력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인데요. 농정원에서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정원에서 하고 있지만 전문기관은 아니고요. 좀 더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계절근로제도는 농어촌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이지만 이게 신속하게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임미애 위원** 법무부 주관 사업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것은 농식품부입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이 일과 관련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농정원이 제대로 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법무부랑 잘 협의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문제없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민간단체가 다시 들어와서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문제부터, 부작용부터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총리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윤석열 정부하에서 세수결손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부에서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방법이 하나였어요, 지방교부금 삭감하는 것.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것 이것 법적 근거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지방재정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지방자치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새 정부 들어서 다시는 이런 우를, 지방교부금을 마음대로 삭감하는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정말로 세입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교부금에 손을 대야 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줄인다 하더라도 법에는, 지방교부세법에는 다다음 연도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이것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경제 부처에서도 다 같이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세수결손이 되면, 지방세인들 많이 걷혔겠습니까? 세수결손이 되면 중앙정부만 세수가 결손되는 게 아니고요 지방은 더 해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25% 감면, 두 자녀 이상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이런 취득세 감면제도 확대가 계속되고 시행이 연장되면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도 재정에 굉장히 심각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지방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안 걷힌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했나 하면 결국 지방채 발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라고 했지만 기금의 비상금 역할을 하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도 35%가 증발된 상황입니다. 교부금도 줄고 지방세수도 줄고 그리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그런데 26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정부의 의무지출 비율이 이제는 70%에 이른다는 것이 지방재정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어제 질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질의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총리님이나 부총리님의 답변이 충분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강화되면 정책이나 주민 수요 대응력이 굉장히 떨어질 텐데, 이것은 지역의 고른 발전을 꾀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역행하는 일인데, 저는 이제 중앙과 지방간 재정 관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이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저는 그 방향 말씀해 주신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방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지방정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이고 또는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비율을 늘리는 쪽으로 편성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총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기본적으로, 저는 근본적으로 경제 파이를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법인세도 늘어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소득세가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지 이 작은 파이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면 중앙의 채무가 늘어나든 지방에 가든 어쨌거나 회피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 조금 전에 총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이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보조사업을 늘리려고 이렇게 배분도 하고 또 다른 지방의 재정 확충 방안이라든지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계속 연구하고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포괄사업 이야기를 하셔서요, 저는 이 포괄보조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사업 개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제가 볼 때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지방이 그 자율성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지특회계의 포괄보조사업은 쉽게 말해서 메뉴판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자율계정 대상 사업 목록 중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골라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담당 사업부처에서 예산을 내려 주는 방식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기는 하지만 의견만 기재부에 전달할 뿐 금액은 일절 손대지 않습니다.

사업의 개수 크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25년 포괄보조사업의 총 개수가 51개에서 26년도에는 123개로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게 방향은 바람직한데요.

한번 집행 현황을 따져 보면요, 26년도에 새로 포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72개의 사업을 한번 살펴보니 사업 이관 이전부터 예산액과 미집행액이 각각 100억 원 이상이고 실집행률이 2년 연속 70% 미만인 사업이 무려 9개에 달합니다.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관되기 전에도 사업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인데 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해서 지자체에 맡기면 이 사업들의 정상 추진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좀 있거든요. 어떨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의 사업을 선정할 때는 지자체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개선도 하고 좀 더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를 협의를……

○임미애 위원 저는 제도개선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계속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지방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안 되는지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의 특징은 지방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성과관리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방의 역량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봅니다.

지방의 역량이 이게 잘 안 돼요. 중앙부처에서 특히 행안부나 각 부처에서 지방의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한 노력은 사실 하지 않고 돈 던져 놓고 사업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지특회계의 대부분이 집행률이 굉장히 부진하고 돈 쓸 줄 모르는 지방정부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에 내려가면요 지방공무원의 역량 수준에 따라서 지방 주민들의 복지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 고민이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또 들고 오면 자율성 없다고 그러고 이런……

○임미애 위원 돈을 들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지방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일련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방공무원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공공, 소위 말하는 민간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방공무원들 순환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을 배우고 다른 경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방공무원 역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님하고 좀 상의도 하고 해서…… 그래도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조금씩 저희들은 정책을 펴 나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방향은 옳습니다. 그렇게 방향은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지방에서 느끼기에는 마치 따라올 놈만 따라오라는 식의 예산집행 방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섬세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임미애 위원 행안부장관님 계신가요? 행안부차관님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차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제가 경제부총리님하고 이야기 중에 나왔던 건데요, 지방공무원의 역량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의 구축과 관련해서 행안부가 혹시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라든지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조직 설계하는 자율성 이런 것도 풀어 드렸고 부단체장 직급도 상향해 드렸고 그리고 인건비 문제 같은 경우도 기존 인건비에 대한 지적, 그러니까 비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량도 늘려 드리려고 새 정부 들어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거기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지방의회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그것은 또 지방의회법 제정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존경하는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총리님, 전번 추경 질의에서 뵙고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위상 위원** 울산에서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매몰됐던 노동자 세 분이 구조 작업 중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아직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 모두 하루빨리 무사히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매몰된 노동자들의 가족께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구조하는 거 기다려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관계 당국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사고 수습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좀 구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사고 소식이 있고 바로 저희들이 만전을 다해야 된다는 지시를 내렸고 지금 말씀하신 관련 세 부의 장관이 다 현장에 내려갔고 저도 예결위가 끝나면 바로 현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김위상 위원** 국민주권정부에서 산업재해가 요 근자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또 산업재해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한테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APE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기점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큰 틀에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위상 위원** 지루한 협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대한민국의 공무원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결국 우리에게 절대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국부를 미국에 갖다 바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떤 손해를 보지도 않고 수천억 달러를 벌어들이게 된 그런 결과다, 그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총리님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만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연 200억 달러 수준으로 한도를 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당장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것 이외에 또

투자액 6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라고 소셜미디어에 띄어 올리셨습니다.

일본하고 EU, 주요국 중에 미국과 서로 주장하는 숫자가 틀린 것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다른 나라들에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00억 불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6000억으로 표명했던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은 실제로 관세협상 외 우리 기업들의 자체 투자와 에너지 구입 비용까지를 넣어서 그렇게, 어찌 보면 미국 측에서 더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서로 말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정부 발표대로 총액이 3500억 달러가 맞고 또 한도를 연 200억 달러로 정했다고 해도 우리 경제와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 분명히 따져 봐야 할 문제다.

그리고 총리님, 국내 제조업의 한 해 설비투자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한 100조~14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규모가, 20~30%에 달하는 외화가 매년 해외로 유출된다면 국내 제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 노동단체들이 규탄성명문을 내고 있는 것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위상 위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탄성명문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한미 FTA로 확보되었던 자동차 관세, 무관세에서 관세가 15%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25%에서 15%로 인하가 된 것이 아니고 무관세에서 15% 오른 겁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바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할납부에 대해서도 현장 노동자들은, 명백한 조건 악화로 인해 가지고 국내 생산물량 감소와 부품업계의 연쇄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장치라기보다는 국내 제조업계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매년 대규모 외화가 미국으로 빠져 나가는 구조를 제도화한 그런 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자리 산업이 점점 비어 가는 산업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많은 국민과 2300만 노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세가 50%가 유지된 철강산업의 경우에 영남과 충남지역의 철강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량 실직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이고, 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한병도 위원장, 박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위상 위원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 요구를 또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퇴직을 원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없습니다. 결국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사는 감원을 택할 겁니다. 이런 문제, 현

정부가 꼼꼼히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제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우려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맞습니다. 그런 지적 다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적과 우려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사실 처음 시작부터 기울어져서 시작했다는 것을 다들 아시고 아마 그런 환경에서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족하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한 1450원이 넘었습니다. 이미 시장은 발작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꺾일 기색은 없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정상적인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관세협상에서 양해각서와 팩트시트, 아직 감감무소식인데 언제쯤 나오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직접 협상팀 그리고 미국 측의 이야기가 다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철강·알루미늄 50% 고율 관세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자동차 관세 15%, 11월 1일부터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 부분은 내용적으로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각국에서 법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김위상 위원 우리나라만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지금 관세협상 타결이 문제의 종점이 아니고 이 문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위상 위원 그리고 총리님,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아십니까?

이것은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노동자 또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석유화학·철강 산업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이런 데가 지원 대상인데 이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이 연년이 똑바로 관리가 되지 않고 또 기업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위기가 본격화된 올해도 30%를 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예산이 후불로 지원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선지급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부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저도 꼭 챙겨 보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국내 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넘어 공동화 위험까지 아른거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실제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협상 결과를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고 앞으로 닥쳐올 구조개편과 공동화의 파고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현장 제조업 노동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과 우려를 덜어 낼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연말까지 해서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준비해 왔고 현장에서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꼼꼼히 좀 챙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다음으로 올 9월에 고용노동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위상 위원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은 30억이라는 예시 사항이 함께 부기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의 5% 숫자는 정부의 고용노동부의 산재를 줄이겠다는 나름의 고민이 담겨 있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숫자가 국무회의나 또는 총리님이 계신 회의 중에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논의했습니다.

○김위상 위원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때는 예시 사항이든 확정된 수치든 간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된다. 왜냐? 각종 언론이나 방송 또 신문에 보면 모두 5%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기정사실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 산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저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나름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봤느냐?’ 정부에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 같고……

○국무총리 김민석 죄송하지만 저 사안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연 3명의 사망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위상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제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법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기업 명단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을 받았습니다. 사업보고서상의 손익계산서를 하나하나 추적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총 기업 29곳의 영업이익이 30조 8500억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을 적용할 경우에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 5695억 원이 됩니다. 연평균 5231억 원이지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4조 2396억이었는데 과징금을 5% 낸다면 7119억을 내

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7명의 사망사고를 냈는데 영업이익이 8조 3647억이었습니다. 과징금을 4182억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1115억을 내고 과징금과 함께 등록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을 지금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정도의 큰 어떤 무게와 부담감을 가지고 그것보다 사실상 적은, 아마 실제로는 훨씬 적게 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도 좋고 노동자들에게도 좋고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위상 위원 알겠습니다.

현대차에서 발생될 수천억의 과징금 이 부분은 결국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라는 시공능력 2위 건설사가 통째로 이제 사라져 버리면 거기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매출액이 30억 원도 채 되지 않는 영세 제조·건설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이제 사업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5% 과징금 물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도 의견을 좀 달리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구체적 숫자는 노사정 회의를 통해서 논의, 결정하겠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다행스러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부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토론의 구색만 갖추려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도 상당한 고민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대책이 고용노동부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관계부처 사이에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총리님도 깊이 있게 생각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각 과징금 모수에 따른 추정 규모를 추계를 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좀 할 수가 있다면 총리님께서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보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실제로 종합 대책의 대부분은 말씀하신 그 과징금을 포함한 처벌도 있지만 예방과 지원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 과징금으로 인해서 사실상 예로 드신 기업들이 문을 닫을 정도가 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가 되겠고 실제로 안전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한 최근 몇 달의 통계를 보니까 50억 이상 기업들은 대부분 안전사고가 좀 주는 추세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그것보다 좀 낮은 중소 규모나 영세 기업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훨씬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위상 위원 우리 사회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떠한 상황들이 되어야 되

는데 이 과정금으로 인해서 기업에 어떠한 충격이나, 또 이런 산재 사고를 예방은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예방은 해야 되는데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견뎌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회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총리님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감사합니다. 인명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노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고민에 기초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구의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인천 남동구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제가 속한 과방위는 지난 1년간 방송개혁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8월 방송 3법이 통과되면서 방송개혁의 큰 산은 넘었습니다. 이제 방송개혁에서 콘텐츠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방송의 날 축하에서 대한민국 방송·영상 콘텐츠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의 핵심 주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K-콘텐츠가 대한민국 경제성장, 경제도약의 새로운 열쇠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최근 전 세계적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훈기 위원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의 전통 설화, 무속, 저승사자 그리고 케이팝이라는 한국의 독창적 요소를 결합해서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고 한국 콘텐츠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 케데헌은 1억 달러를 투자해서 10조, 1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봤고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은 효과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케데헌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역대급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빌보드 핫 100에서 ‘Golden’ 8주 연속 1위, 빌보드 200 OST 1위 재등극 그리고 OST 톱 10에서 네 곡 동시 사상 첫 진입, 여러 가지 기록을 갱신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콘텐츠가 우리 대한민국 안방에서, 우리 안방에서 우리 콘텐츠를 갖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글로벌 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OTT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OTT 진흥이 과기정통부, 문화체육부 그리고 새로 만든 방미통위로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없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콘텐츠 경쟁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삼원화돼 있는 이런 정부의 OTT 진흥을 위한 조직을 좀 개편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일관성 있게 컨트롤돼야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그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하고, 다만 현재의 부처들을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진지하게 갖고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 지금 보면 기획-투자-제작-현지화-배급-IP확보 이런 식으로 컨트롤타워에서 모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부, 과기정통부, 방미통위로 삼원화돼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문체부가 올해 OTT 예산 1048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915억 원으로 감액 편성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그 부분은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전체고요. OTT만 보면 올해 382억 원에서 내년에 478억 원으로 96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지금 한 400억대 아닙니까? 지금 글로벌 OTT 플랫폼들은 수조 원을 쓰는데 저는 터무니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1차관 나와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지금 과기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OTT 예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전체적으로 OTT가 올해는 111억 정도 됩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OTT를 과기부에서 담당하는데 전담 인력이 두 명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전담 인력이 단 두 명뿐이라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구혁채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콘텐츠 하나 갖고도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는데 전담 인력이 단 두 명이고 예산이 과기부는 한 100억 정도 되고 문체부는 한 40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누구도 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방미통위는 예산이 또 9억밖에 안 돼요.

경제부총리님, 이 3개 부처의 OTT 관련 예산을 다 합쳐도 1165억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928억 원으로 오히려 감액된 예산인데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저희들 통계로는 한 1700억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맞춰 보도록 하겠고요.

○이훈기 위원 디테일한 부분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정도 갖고는 절대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조 원씩 투입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분야는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어디보다 가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지상파방송이나 이런 인력이라든가 제작 경험이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서사 같은 게 상당히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전략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이쪽 분야에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대통령께서도 제가 보기에 방송개혁보다 콘텐츠에 무게중심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쪽에 좀 뒷받침을 하고, 이게 뒷받침이 아니고 산업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훈기 위원** 예.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 부분은 실제로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아주 전문성은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개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통합이 안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잘 조율되어 있는지,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챙기는, 필요하다면 조속하게 관련 TF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요. 3개 부처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따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 하면서 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산개척단, 국내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사과나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때 큰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의 사과라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주체가 하느냐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안들인데요 그 외에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APEC도 그렇고 관세협상도 그렇고 여러 성과를 냈는데 이제 인권 분야에서도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선언이나 될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됐고 국가의 사과를 공식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께서 공식 사과를 하시고 인권 대한민국을 선언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국가 사과를 고려해야 될 계기와 사건, 사안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보실 때나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게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셨는데 정말 가슴 뭉클했고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얘기한 집단수용시설은 희생되신,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생존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과하신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분

들의 한을 풀어 주고 좀 치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끝나고 보고서 작성 기간인 것 같아요. 5월에 2기는 끝났고 11월 26일 날 보고서 작성까지 끝나는데 3기까지는 좀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이게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안타깝게 신청을 못 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신청기간을 확대하거나 또는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의결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훈기 위원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3기에 대해서 법을 발의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빨리 공백이 길어지지 않게 이어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거 2기 때 보면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2년에 불과해 가지고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3기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좀 축소해서 이런 과거사 기구를 상설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은 하여간 법안 하는 과정에서 논의하시고 저희도 생각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상 관련해서, 진실규명이 되는데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은 개별 사건마다 특별법을 요구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총리실 산하에 보상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모적인 소송 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 관련해서도 아마 비슷한 취지의 법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논의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지금 과거사 관련해서 민주화 지원 및 과거사 정리 프로그램 예산이 올해 3225억에서 내년엔 2836억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행안부차관입니다.

보상금은 4·3사건 보상금,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등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4·3사건 보상금은 지급종료 시점이 28년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매년 나가는 액수가 평균적으로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5·18민주화운동 보상금도 보상심의 대상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추가된 것도, 한국전쟁 전국단위 위령시설이 이제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성사업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이미 보상이 많이 나가서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4·3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훈기 위원 법무부장관님, 장관님 취임하시고 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산개척단 이런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취하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21건은 상소를 포기했고요. 또 진행 중인 사건 52건을 상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총 73건을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는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사실 이재명 정부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과거의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 적극 응하라고 하는 대통령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장관님, 그런데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이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못 주고 있다는데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좀 됐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현재까지 판결이 확정된 것만 보면 올해 예산이 1317억이었는데요 전액 소비되고 10월 말 현재 부족한 게 3138억 원이 부족합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 지금 연리 15%이기 때문에 하루에 이자로만 6000만 원 이상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1439억 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좀 관심 가져 가지고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힘을 모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훈기 위원 문체부장관님,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이 문화체육부 산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예, 맞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지금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의 콘텐츠 제작 비용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지도 않고 대상이 아닌데 지원은 여기서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6년간 1600억을 받았어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상당히 줄어들고 잘못하면 고갈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당연히 문화체육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주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관리권과 예산 편성이 다르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현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이랑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긴밀하게 협의가 아니고, 이것은 계속 몇 년째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문화체육부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겠다고 예산을 처음에는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증액이 안 돼 가지고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문화체육부 일반회계로 편성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이 부분은 저희도 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요.

○이훈기 위원 아니, 법에 따라서 하면 문화체육부 일반회계로 하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들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안 냅니다. 안 내는데 지원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지역마다 지역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소방송들이 있고 한 40개 되는데 여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매년 내요, 매출이나 수익에 따라서. 그렇지만 40개 방송사가 1년에 지원받는 게 40억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 한 200억을 받았는데 아리랑국제방송하고 국악방송에는 1600억을 줬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지역소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지역방송이 지역문화의 구심체로서 또 여론 형성의 구심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소멸 시대에 지역방송이.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지역중소방송한테 돌리면 한 백 몇십억 되는데 훨씬 큰 역할을 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원이 됐던 거는 어쨌든 법의 근거를 가지고 했던 거고요, 법의 모호함 때문에 생긴 어떤 지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훈기 위원 아니,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을 근거가 제가 보기에 없어 보이는데, 별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취영 이 부분은 재정 당국이랑 깊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좀 바로잡고 지역소멸 시대에 지역방송을 위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게 참 저희도 고민이 많은 게 이게 방송이거든요, 방송. 그런데 방송은 또 문화부 소속으로 가 있고 또 방발기금을 쓰니까……

○이훈기 위원 아니, 방송은 원래 방미통위 소속입니다, 문화부 소속이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리랑국제방송도 방송인데 또 조직 간의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갑의 국민의힘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APEC 회의 등등 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 그리고 기재부 부총리님 등을 비롯해서 주택시장,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앞길을 논의해 볼까 합니다. 큰 틀에서는 총리님께 여쭙보고 그다음에 좀 정책적이고 자세한 거는 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리님,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발표한 이래 난리가 났

있지요. 그리고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다운로드해서 밑줄 치면서 읽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국민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까한 페이지, 한 페이지 언론에 있는 기사들을 살살이 볼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겠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총리님,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10·15 같은 그런 안정화, 이런 역대급, 매머드급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알아야 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근본적으로 사실 보면 시장의 모든 원리가 그렇듯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공급이 충분치 않다. 그러면 어떠한 공급이 충분치 않느냐, 그리고 어떤 식의 공급이 충분치 않느냐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정책의 결과였다고 설명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은 4개월, 이제 5개월에 접어들어 가는데 그 이전 시기에 우리나라, 특히나 수도권, 사실상 서울에 있어서의 원하는 공급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금융적인 원인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정훈 위원 맞습니다.

이 앞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세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누적된 공급 부족의 여파다, 그 얘기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화량이 증가했다,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금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를 ‘슈퍼사이클을 맞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페이지 넘는 대책 안에 과연 공급대책보다는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에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게 있고 나머지 열네 페이지는요 ‘집을 못 사게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째, 현금 없으면 못 사게 하겠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 다주택자 집 못 사게 하겠다, 이제 집 사려면 허가받아야. 수요를 막으신 거예요.

좀 거칠게 얘기해 볼까요? 계란값 파동이 일어나면 계란을 사옵니다. 수입까지 하지요. 양파값 파동이 일어나면 양파를 더 심습니다. 그런데 ‘양파 먹지 마라. 계란 먹지 마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춧값 파동이 나면 배추 심기를 장려하지 ‘이제 배추를 먹지 마세요. 배추는 이제 현금 내고만 먹으세요. 카드 결제는 안 합니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 정책은 그냥 ‘하지 마세요’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용인에 있는 수지구에서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어이없어 하세요.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데 잡겠다고 하는데 왜 수지를 때려잡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들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디테일로 내려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부동산,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갈 집이기도 하지만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정훈 위원**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은 이윤을 전제로 거래가 됩니다. 파는 사람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파는 거고 사는 사람도 사서 이윤을 남기려고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부동산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은 이념과 현실의 괴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미안한 것은…… 이것은 이념과 현실의 충돌이었고요. 또 총리님, 두 번째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게 미래세대 청년들한테 못된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앉아 계신 부총리님 개포1단지 아파트 경매로 당첨받으시고 8억 원에 사서 지금 50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장관님들, 차관님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주택청약해서 당첨된 분 손 들어 보라고 그러면 꽤 나올 걸요?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제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 현금 조건도 없었고 실거주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지라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없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순서는 다르지만 청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본시장, 자산을 축적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 안정화돼 가고 정착해 가는 과정이었는데 언젠가부터가 우리 기성세대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고 있습니다. 지금 반포 어딘가에 2000세대짜리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난립니다. 로또 분양이라고 합니다. 25억이라고 합니다. 현금 25억 있으면요 갭투자해서 30억을 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누구만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현금 25억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중에 누가 있을까요? 집, 청약으로 두세 번 번 사람들만 이 게임에 참여하는 이 현실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정부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에 맞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 청약 한두 번 해서 집 마련했잖아요. 그것을 밑거름 삼아서 더 좋은 집, 더 나은 지역 그리고 아들딸한테 물려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집 하나 없는 청년들에게는 돈 없으면 부동산시장 이제 꿈도 꾸지 말라고요? 그냥 주식만 하라고요? 이러고도 우리가 후배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총리님, 저는 접근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좀 과합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들의 울분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해 놓고 우리는 못 하게 하느냐라는 그 질의,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우선 말씀 중에 이번 대책에는 공급의 내용이 전혀 없다 하는 부분은 이번 대책은 주로 공급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세 번 발표된 대책 중에 지난번이 주로 공급에 관련된 것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조정훈 위원** 예, 그 얘기도 제가 이제 할 겁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에 대한 토론은 별론으로 하고.

두 번째로 상품이라는 측면을 인정해야 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런

데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상품이라는 측면이 과하게 부각되어 있고 주거라는 안정적 측면이 또 사실은 훼손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정책 토론의 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비판되는 측면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위원님과 제가 아마 깊이 진심으로 공감할 ‘그러면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주택을 마련해 갈 것인가’라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왔던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그냥 상품성을 인정하는 시장에 놔두는 방식으로는 사실상 점점 더 젊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국무총리 김민석 그리고 끝으로 말씀 주신 그것이 어떻든 간에 설명할 수 없을 분노를 청년들이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우리 시장에서 살 때 현금만 받고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고 하면 그것 고발하고 신고해야 되지요? 경제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만 받습니다. 신용카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 뭔가 잘못된 거고 그것 신고해야 됩니다. 아마 국세청에 신고하면 조치 취할 겁니다. 그런데 집은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 중에 가장 화가 치밀고 청년들에게 어이없음을 준 것은 대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뛰어들 수 있고 현금이 없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지요. 30대 무주택 맞벌이 부부가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예전에는 LTV 70%, 즉 7억 원의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가 나면서 이제 4억 원만 대출이 됩니다. 3억 원을 더 모아야 됩니다. 청년 근로자 연봉의 10년 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들에게 집 가질 수 있는 시간을 10년 미뤄 준 거예요. 10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화 안 날까요? 현금 있는 사람은 쪽 사 버리고 대출받아야 되는데 이제 받지 못하게 해서, 연봉도 좋고 충분히 소득도 할 수 있는데 10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이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하면 누구 좋으라고 이 정책을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동산 정책을 덜컥 내놓을 수 있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역지사지해 보면, 이 정부에도 청년 보좌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 없는 청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정책으로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라도 보십시오, 10년 동안 더 기다리게 하는 게 맞는 지.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 주식 사면 괜찮고 대출받아서 부동산 사면 안 됩니까? 빚내서 주식하는 건 박수 받을 일이고 빚내서 집 사면 나쁜 놈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어떤 시장, 어떤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을 이렇게 합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요구하는 사람의 담보와 신용을 보고 얼마를 줄지, 어느 비용으로 줄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그것에 개입할 수 있다면 반대로 저 조정훈이라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3억만 대출하라는 게 정부의 원칙인데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5억 원 대출해 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반헌법적, 반

법률적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굉장히 소수의 그리고 이미 자산을 축적한 그리고 압도적인 비율로 기성세대들만이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솔직히 얼마 전인가요,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집은 사는 곳이지, 그러니까 잠자는 곳이지 돈 주고 사는, 바잉(buying)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얘기를 좀 해 보지요.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저도 그때 초선이었는데요. 부동산가격이 막 폭등하니까 2주택 금지, ‘주택 팔아라’ 이랬어요.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들 또 장차관님 중에 2주택 있는 사람 다 명단 가지고 몇몇은 또 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변명도 하시고. 그때는 그나마 염치라도 있었어요. 2주택 금지하니까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인 내가, 집권 여당인 내가 2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집을 팔려는 그런 노력과 압박이 있었고 뭐 일부는 뽀수를 부려서 피해 가기는 했지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출 규제해 놓고 지금 빚 대출받은 거 한 톨이라도 갚은 사람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한 톨이라도 있습니까? 국무위원 중에 한 톨이라도 있습니까? 본인들은 다 대출받아서 집 사 가지고 자산 증식하고 있으면서 미래세대들, 다음번 주자들한테는 ‘여기까지 끝.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대출 안 된다’라는 그 염치없음, 그 뻔뻔함,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세대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린 다 누려 놓고, 두 번 세 번 청약받아 놓고, 딱지 팔아 놓고, 강남에 그렇게 해서 진입해 놓고 ‘여러분들은 부모 잘 만나서 부모님이 물려주지 않으면 강남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강남은 어차피 땀 세상입니다. 그냥 뽀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두 번 더 있을 기회에 계속 부동산만 얘기할 거라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부총리님·총리님.

큰 틀에서 저는 이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바라보는 그 철학적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큰 틀에서 유동성 잡아야지요. 솔직히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돈 뿌려 가지고 유동성이 지금 하늘에서 떠도니까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간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 부족한 거잖아요. 공급 부족한 거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뭘니까? 아무 데나 짓는다고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솔직히 가고 싶은, 살고 싶은 동네가 있잖아요. 선호하는 지역에 집을 지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분양된 지역에다가 주택 공급 더 하겠다고 하면 미분양만 쌓여 가지 않겠습니까? 수지, 지금 미분양된 단지가 몇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거에 보면 수지에다 집 더 공급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미분양된 동네에다가 더 주택을 공급해 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 과연 성공할까요? 그러면 ‘집 없는 사람 수지 가서 집 사세요’ 이게 정책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살 곳으로서 주택 환경, 모든 국민들이 살 곳은 있어야 되겠다는 건 동의하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그랬듯, 우리 청년세대가 지금 국민연금에 절망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부동산,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자산을 축적해서 자산의 증식을 통해서 이 사

회의 안정을 찾아가겠다라는 그 생각을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을 넉넉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 몇십 호라고 그러셨지요, 그 정책에? 2030년까지, 그거 절반이라도 30년까지 하면 제가 박수 쳐 드릴게요. 진짜 먼저 중요한 거는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총리님. 서울의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98%인데 자가율은 44%, 아실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 이렇게 높여 놓으면 집을 누가 내놓습니까? 이번 달, 다음 달, 내년 초에 나올 집이 지금부터 땅 파서 만들어지는 집이 아니잖아요. 지금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동기 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막아 놓고 어떻게 집값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허가 받고 해라’ ‘대출 안 해 준다’…… 정말 못 사게, 거래 자체를 동결시키는 행위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친 정책으로 부동산 관리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부터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 텐데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진영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다음 질의 때 대안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같이 다시 논의하지요.

○조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형수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탄소중립, 지역소멸 이런 큰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중요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총리님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바로 영농태양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농태양광은 농업 소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소득을 크게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농업을 손상시키지 않고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의미에서 영농형태양광이라는 대신에 영농태양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영농태양광은 대규모 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생산함으로써 AI 시대의 전기 수요 폭증에 대응하게 합니다. 또 원전 건립에는 빨라도 칠팔 년이 걸립니다만 준비만 잘되면 영농태양광은 농한기만 잘 활용해도 몇십 기가의 설비가 실제로 가능합니다.

영농태양광으로 농촌 소득이 높아지면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와서 일할 수 있고 결혼

해서 아이를 낳음으로써 소멸해 가는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가가 탄소 감축 목표와 RE100을 더 쉽게 달성하게 하는 것도 큰 효과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지 기준으로 볼 때 17.5% 발전 효율을 적용하면 682GW의 보급 잠재량이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2050년까지 60GW 규모 보급이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는 5~10년 사이에 30GW를 전국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30GW는 1.4기가 규모 최신형 대형 원전 21개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영농태양광은 무엇보다도 농업 생산의 경제성과 태양광 발전의 기술성이 모두 입증됐습니다. 논에 영농태양광을 한 사례들을 제가 꼭 한번 전국 사례들을 모아서 통계를 내 보니까요 벼 수확량은 실제로 거의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광합성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간격만 적절하게 넓히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1메가를 생산하는 곳이 한 2500평이 듭니다. 그런데 1메가 생산 시설을 영농태양광에 한다면 약 4500평 이 정도 필요하고 실제 농업 생산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실제 파일(pile)을 박거나 하는 그 지역만 빼면 거의 100% 생산성을 유지합니다.

또 영농태양광으로 농지 보유 농민에게 생기는 수익은 시설 설치비라든가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도 기존 논 농사 소득의 5배가 넘는 추가 수익이 생깁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요.

그래서 영농태양광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소득 기반을 바꾸는 그리고 또 농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치밀하고 잘 기획해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지를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이용하면서 난개발을 막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국무총리께서 저는 직접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형수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농업과 농지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자체들도 여기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면 제가 그동안 조사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 3기가 정도가 모여야 일정한 설비에서 가격을 크게 낮추거나 하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군 2개 정도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의 협력도 이끌어 내려면 아무래도 국무총리께서 나서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농촌에 큰, 농지를 가진 분들에게 큰 소득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고루 나눌 것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농태양광을 개발이익 환수형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의 기존 영농 수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100% 보장하면서도 영농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 발생한 발전이익의 50% 정도는 저는 정부가 환수해서 그 재원을 청년들의 귀농 지원,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오라고 해도 청년들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농태양광의 수혜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농촌에서 발생한 수익을 청년들에게 나눔으로써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고 또 농촌에서의 어떤 새로운 사업들, 스마트팜이라든가 스타트업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농지를 보유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보유한 농민을 위해서는 농민기본소득으로 활용한다면 세수 확대와 농촌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영농태양광은 저는 국가적 대전환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미래 동력에 큰 관심 있으신 총리님께서 이미 영농태양광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총리실 산하에 영농태양광 추진단을 설치해서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고 기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행안부와 각 지자체가 함께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데 총리님 견해 좀 짧게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오전에 공교롭게도 우원식 의장님 어떤 행사에서 뵈는데 딱 같은 주제를 가지고 아주 의미 있게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셨군요.

○국무총리 김민석 영농형태양광 문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관 부서의 문제도 국무회의에서도 농림부, 행안부 등등 포함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마침 현재 범부처 협의체를 하고 있는 것이 탄핵위 주도로 하고 있는데 탄핵위가 총리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듣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처 협의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저도 직접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을 틀을 어떻게 짤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1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후보지로 전남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공약 등을 통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광주시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것 총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다행히 대통령께서 정무수석을 통해서 광주시민께 송구하다 또 광주와의 약속을 지키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광주시민과 함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지금 상실감 속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후속대책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광주의 중장기 미래는 물론 또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몇 가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광주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국산 NPU, GPU에 이어서 굉장히 속도도 빨라지고 전기가 더 적게 드는 새로운 컴퓨터 프로세싱 핵심 칩입니다. 국산 GP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의 광주 설립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AI 시티, AI 특화 시범도시를 광주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토교통부는 AI 대전환을 위해서 AI 시티 조성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정진욱 위원 AI 시티는 한 도시가 완전히 AI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실증하는 사업인데요. 마침 정부가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이 AI 시티 사업에서 핵심 사업이 광주 AI 모빌리티 국가신도시 조성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데 함께

광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가칭 국가 AI 연구소의 광주 설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도 이 미 말씀을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들었습니다.

○정진욱 위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광주는 일찍이 정부도 지자체도 AI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2017년부터 AI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보고 AI 선도 도시의 비전을 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AI 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 AI 대전환, AI 부문의 선구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한 기여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통 큰 투자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광주가 AI 도시로 처음 관심 가지는 과정에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오래전부터 광주 AI 시범도시 관여해 주신 총리님께서 끝까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AI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기초과학부터 첨단산업까지 연구 현장이 굉장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 전체가 부패 세력으로 매도되고 정부가 과학기술인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실을 떠나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급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인력의 42.9%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요. 2030 세대의 70%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이유는 결국 국내에서 연구해도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또는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AI 3강으로 간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GPU보다 더 중요한 게 인재의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이번에 저희가 10.1조 하는 데 있어서도 인재 부분이 국내에서 나가지 않게 하는 것 또 사람을 키우는 것, 해외에 나가 있는 아주 고급인력을 다시 회귀시키는 것,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이미 국가가 AI 국가대표 인재 양성 이코노미 사업—올해 추경에 들어갔었지요—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국가 책임 AI 인재 양성 사업의 박사후 과정까지 전 주기 성장 경로 지원하는 체제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것이 과학기술인에게 다시 국가가 투자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아직까지 이 프레임은 여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좀 막연하긴 합니다만 AI 인재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과와 시장 가치 기반의 보상 체계 이거 반드시 저는 R&D에서 관철돼야 된

다고 보고요. 둘째는 AI 인재의 생애주기형 경력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R&D 투자에 대한 일관된 법제화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제안을 하면서 상당히 좀 마음속에서 주저하기는 했는데 정부 R&D 예산을 GDP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산을 경직되게 쓰는 거긴 한데요. 저는 우리 이공계 인재들에게 좀 명확한 메시지를 국가가 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법제화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목표로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예, 그건 추가로, 또 법제화라든가 추가 논의는 저희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의견을 모으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여수·울산·대산 등 국내 대표 석유화학단지의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지역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부도 올해가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10대 석유화학사에 연내 감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려면 기업끼리 만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생산량도 조율해야 되는데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공동행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합입니다. 총리님도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해당 사업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합병이나 공동행위에 대해서 공정위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업이 구조조정에 신속히 나설 수 있도록 절차와 시간을 줄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무부처가 사업재편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경쟁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물론 공정위로서는 공정위의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마는 공정위의 의견은…… 기활법은 모든 산업에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특정 산업을 위한 특별법도 있습니다마는 기활법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폭넓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예상되는 산업 위기를 미리 전제한 개정에는 반대한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위기가 특종 업종에만 지금 국한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전처럼 우리 산업이 비교적 상황이 좋을 때는 공정위의 의견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조선산업이 위기였었는데 누가 지금 수준의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의 위기를 예견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산업의 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올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할 것인가. 저는 이런 경우는 지금 같은 뉴노멀의 시대에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예방적인 제도개선, 선제적인 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석유화학 업계에 구조조정 계획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작 구조조정에 필수적인 법적 기반은 지금 아직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 지원도 어렵고 또 구조조정의 물꼬도 트기 어렵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총리님께서 공정위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정위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직접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총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검토대로 하고요, 말씀하신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기업들한테 놓고서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되지 않게, 아까 담합이라는 그 우려가 걸리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기고, 또 이미 산업부 등에서 그런 논의에는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투트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만찬 정회 전까지 휴식 정회 없이 계속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답변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국무위원님들을 미리 특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의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APEC 때 이 성공들을 만들어 주신 거 깊이 감사드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이번 APEC이 더 자랑스러웠던 것은 드디어 이제 한국이 국제무대 안에서 어떤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총리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으시다시피 글로벌 사회가 안정기라고 하면 한국 같은 나라가 유럽 중심의 국제 질서나 아니면 북미 중심의 국제질서를 넘어갈 동력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글로벌 대전환기에 놓여 있고 그 대전환기가 AI와 같은 기술적 요인과 또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 한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인구가 축소돼 나가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 인구가 폭증하게 되는 굉장히 불균형한 인구 폭증의 문제 그리고 기후나 팬데믹 이런 식의 다중위기 문제가 굉장히 큰 축으로 전 세계에 작용하고 있고, 전 세계를 향후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2040년경 늦어도 2050년대까지는 전 세계를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질서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산업혁명 이후에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에서 하고 있었던 국제질서의 주도성 역할을 지금 한국이 할 수 있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유럽의 각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문화적 영향력이 부족한 상태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외교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기보다 초점이 잘 안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정세상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4대 강국의 외교에 초점을 맞춰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 대전환기에 한국이 그다음 글로벌 선도 국가, 책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

경제와 문화적 영향력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외교적, K-디플로머시(diplomacy)의 노력들, 그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거 유럽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대전환기 시기에 글로벌 어젠다가 사실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혹은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어떤 글로벌 어젠다를 형성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가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쟁 상황에 놓여 있어서 국방비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여분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국제질서가 이상할 정도로 한국에 너무나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고 대한민국이 지난 수백 년간의 역사 그리고 최근 20세기부터 이어졌던 굉장한 고난의 역사를 넘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총리님과 대통령님 같은 리더십들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선도적인 국가로 포지셔닝할 수 있게 계획을 가지고 게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처음에 있고 그 계획을 프레임화하기 위해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더 드리면, 우선은 ODA에 대한 프레임 자체를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시다시피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국제개발, 인도주의 관련한 유럽에서 그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미 한 십수 년 전부터 지금의 국제개발 프레임워크는 더 이상 효용가치를 잃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 ODA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실패한 모델을 쫓아가고 있는 게 컸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정치화돼 있어서 효용성이 없는 데, 실제 사람들의 생명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살릴 수 없는 데 투여되곤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개발 그것도 굉장히 옛것을 따라가는 국제개발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수정할 때는 이전에 있는 방향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것으로 개선한다기보다 국제개발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한국형, K가 만들어지는 어떤 글로벌 협력구조 거버넌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중에 하나의 주요한 어젠다가 현재 국제개발이라는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잘사는 국가로 있는 선형적인 개발모델이 아닌 지금 다중 위기에 맞서서 글로벌 위기에 리질리언스(resilience) 프레임워크라고 부를 수 있는 차세대 국제개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한국이 던져 주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게 한 가지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도움이 되고 한국의 위기와 닿아 있는 AI·인구·기후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액션플랜들이 필요하고 이 액션플랜들이 우리가 가진 국제협력 구조, ODA 구조 안에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다자기구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제한된 경제력과 제한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은 훨씬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자기구에 대한 거버넌스의 확대를 통해서 실제 국제사회가 이루어지는 질서들을 새로 세팅해 나가는 작업들을 유럽 지역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들이 가진 국력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4대 강국과 외교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저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나머지 국가들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다자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할지는 또 지금이 굉장히 절호의 기회입니다. UN 같은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금을 굉장히 낮춤으로 인해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UN 자체도 UN80 이니셔티브라는 구조개혁 플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어젠다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고 그리고 AI와 같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역량과 니즈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다자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 그리고 기존의 ODA가 아니고 조금 더 수평적·협력적 구조를 가진 글로벌 위기적응 혹은 글로벌 위기 리질리언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 ODA가 한 단계 넘어선 형태로 나아가는…… 예를 들어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중국이 하는 AIIB 혹은 미국 월드뱅크가 했던 방식들은 한 국가의 재정적인 능력을 다른 국가들과 풀 펀딩을 해서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국무총리님께서 지금 ODA를 비롯한, AI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근본적인 개선 플랜들을 준비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할 수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조금 요약한다면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주도적인 국제적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과감하게 하자 그리고 ODA도 그런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재편하자 하는 것으로 제가 대략 이해를 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의식을 대통령님께서 제기를 하셨고 ODA와 관련해서 총리실에서 담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면적 재검토를 해서 새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나름대로의 전면적 재검토가 아직 여전히 관성적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제가 지금 정리된 안을 다시 또 살펴보고……

사실 살펴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도 관심이 있어서 이걸 다 살펴봤는데 몇천 개 보다가 지쳐서 그만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ODA를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초벌을 마쳤을 때 위원님 한번 모시고 아이디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차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한 명의 의원이기도 하지만 국제개발 영역에서 전문가 중의 하나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 얘기를 드리면, 지금 4차 국제개발계획 그 두꺼운 안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활동가나 학계에 있다가 와서 알고 있는 부분은 전 세계의 글로벌 협력 모델에 대해서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고 가나 같은 나라에서는 기존의 원조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아예 협의체를, 이니셔티브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전문인력은 사실상 전 세계 국

제개발 협력의 프레임워크를 뒤집고 그 대안을 제시할 만한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총리님께서 한국이 이런 전환기에 모델 국가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글로벌 자문기구 같은 걸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력은 전 세계의 석학들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니깐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차지호 위원 예.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희도 조금 아이디어의 고갈 내지 한계를 느꼈는데, ODA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자문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차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네트워크가 있으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정리를 해 나갈 때 한번 꼭 자문을 해 주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차지호 위원 예, 국회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같이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NDC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많은 치열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불합치, 불일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헌법 불합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아이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이 최근에 통과돼서 미래세대를 위해 NDC 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형성된 안이 우리가 헌법의 결정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정신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내는 것은 정부에서도 쉽지 않고, 민주화된 정부에서도 쉽지 않고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정신의 원칙에 입각해서 애기한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걸 AI 분야랑도 연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지금 정책이 두 가지가 불일치합니다. 하나는 AI를 비롯한 신산업 전략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온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듯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 그게 실제 글로벌 투자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같은 가장 큰 기관에서 수십조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엔비디아와 같은 혹은 오픈AI와 같은 기술 쪽의 리더십과도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향후 AI 전환이 일어나는 10년, 2035년까지 한국 사회의 산업 전반을 AI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할 바 없이 구체적인 안들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는 AI는 클린에너지 기반으로 통합적 모델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게 블랙록과 한국 정부와의 MOU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에 하이퍼스케일 AI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그 에너지 리소스는 재생에너지 혹은 클린에너지 기반의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서 전 세계의 전환 과정의 레퍼런스 모델로 만들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인한 신산업 중의 에너지의 특성 중의 하나는 재생에너지나 클린에너지

기반으로 가고 그렇게 됐을 때 2035년경 우리의 계획들이 제대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AI와 관련된 신산업은 국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많은 논의, 산업계나 어떤 부처 안에서의 많은 논의들 중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신산업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NDC 목표를 60%로 잡고 있다 그리고 60%가 AI 전환 과정 중에 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게 에너지전환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AI 정책이 산업 전환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와 클린에너지가 연합된 모델로 산업 전환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 소요량, 탄소배출량은 전체 경제 규모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NDC 추계는 현재 전통적인 산업구조, 우리가 바꾸고 개선하고 신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서 작성돼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상에 이런 딜레마가 있는 두 가지 안들을 동시에 추진한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AI에 대해서 다음 10년간 AI 선도국가라거나 AI 산업을 우리 경제의 축으로 삼겠다고 하면 NDC 목표도 이 AI 전환을 고려한 상태에서 작성돼야지 NDC 지금 얘기되는 여러 가지 보수적인 안들은 전통적인 산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안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불합치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글로벌 금융이나 자본 산업에서 기후 문제를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블랙록의 래리 핑크, 블랙록이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2경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블랙록이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 반복적으로 제시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기후 리스크는 곧 금융과 재무 리스크다’. ‘클라이밋 리스크 이즈 파이낸셜 리스크(Climatic risk is Financial risk)’라는 굉장히 단순한 워딩으로 표현을 하고 기후변화가 기업의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특히 물리적 영향, 폭염이나 홍수나 해수면 상승, 농업 생산성 등과 규제 전환 리스크 이 부분이 자산의 미래 현금 흐름과 기업의 리스크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투자자는 기후 리스크를 기업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미국 기업의 대주주가 블랙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종의 스튜어드십 코드로 이걸 공시하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기후 리스크를 장기적 재정 리스크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 관련 리스크나 전환 전략 혹은 배출 감소 목표들을 명시적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포트폴리오나 투자자본의 배분 전략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이 돈을 벌려고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곳이 기후 리스크를 가장 주요한 재무상 리스크로 보고 이 부분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투자한 기업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로벌 전환 과정 안에서 기후 리스크는 앞서 2개의 불일치를 넘어서 한국 금융과 자본이 글로벌한 어떤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선진국에 비해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후퇴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한국은 이때 AI를 신산업 전략으로 던지는 것처럼 기후 문제에 대한 과감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헌법상 또는 과학기술상 또는 국제적 관계상의 대전환을 전제로 두고 예상하지 않으면서 설정하는 NDC가 굉장히 비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아주 좋은 말씀으로 참고해서 최종 결정하는 데 의견을 모으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다음 10년, 2035년이 NDC 목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 10년을 내다 보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우선 부총리님,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재정수입 전망이 674조 2000억 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출은 728조 원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지출예산이 54조 더 많네요. 그런데 2022년 이후에 최대 증가율입니다. 그렇지요?

자, 이렇게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우리 정부는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인 11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말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41조 증가하고요. 국가채무비율 또한 49.1%에서 51.6%로 상승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확장 재정 기조가 정부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재부의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이 2027년·2028년에 각각 5%, 2029년도에 4%로 유지되고요.

제가 지금 많은 것을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9년도에 1789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는 뭐라고 했느냐? 지난 10월 16일 날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가 2030년까지 GDP 대비 64.3%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원화는 국제 통용 통화가 아니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보다 낮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부총리님, 물론 경기회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 쓰여야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지역화폐, 농어촌 기본소득 이렇게 다수 항목이 지방선거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용 선심성 예산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멸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도 정부가 쪽 해 온 부분이고 또 주로 지역

쪽에 많이 내려잡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좋지요,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면. 그런데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도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재정수지 적자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프랑스를 보면 아주 모범적인 복지국가의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니까 성장 둔화하고 맞물리면서 재정적자가 GDP 5%를 넘어서니까 EU 집행위원회가 뭐라고 그랬냐면 과도 적자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나 무디스에서 프랑스 신용등급을 잇따라서 하향 조정하니까 국채금리도 급등했고요 신용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프랑스 하면 우리가 상당히 선진국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좋았잖아요, 국가채무 비율이. 그런데 너무 갑자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도 그랬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경기부양 필요성은 공감을 해요. 하지만 저는 재정 확장 방향성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방향을 틀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린 부분이 R&D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산업 분야고요, 세 번째가 문화콘텐츠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전략을 통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많이 배분하고요.

또 지난 정부를 이렇게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적자를 줄이려고 2.6%를 했는데 3.9%, 거의 4%가 버리고요. 2024년도에도 줄이고자 하는데 또 4%가 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정을 줄였는데 지금은 전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를 성과를 내겠다, R&D도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산업 부분의 투자도 성과를 내고 콘텐츠도 성과를 내고 이런 식으로 성과전략을 통해 가지고 GDP 파이를 키우면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는 만큼 성과 부분도 통해 가지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부채도 줄이고 또 채무도 줄이는 이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현금을 너무 많이 살포하고 그래서 건전한 우리 재정수지를 위협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림이잖아요, 축소해서. 그러면 정말 이 살림을 자기 규모에 맞는 소비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저는 ‘앞으로 돈 잘 벌겠지’ 하면서 막 쓰는 이런 우려가 생 각이 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돈 벌 쪽에 많이 쓰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아무튼 내년에 또 성과를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배숙 위원 법무부장관님, 오전에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

까 오후에는 출석을 안 하시네요.

우선 우리 법률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삼권분립,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해서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입법이 만능은 아니에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문명국가고 도덕률이 있는 국가라면 아무리 입법이라 해도 그 입법이 파괴할 수 없는 헌법적·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깨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데요.

우선 검찰청 폐지가 돼 버렸지요. 이제 기정사실화됐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판중지법,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행위’ 삭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또 대법관을 증원하겠다, 재판에 대해서 소원을 허용하겠다 또 법 왜곡죄를 하겠다, 자꾸 이런 입법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입법을 강행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법 시스템이 한 사람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입법이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나가는 입법 폭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오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전에 정점식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중지가 학설상 다수설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재판 중지하는 것이 학설상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발언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설을 보니까요 대통령 당선되도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그런 학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수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수설이라고 하려면 이것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 학계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면서 뭔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핫하게 떠올라서 학계가 뭘 해서 정리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다수설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같은 내용이 있다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오전 내내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100% 다 관련된 것은 각하결정이 됐어요. 왜 각하결정이 됐느냐? 각하는 내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시다. 각하결정은 이유가 뭐냐 하면 헌법 조항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서 가지고 제가 이것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장관님, 보세요. ‘소추’라는 뜻이 문헌 해석상 나오거든요.

국가소추주의라는 말 아시지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조배숙 위원 그리고 검사소추주의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국가소추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기본적으로 소추는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만 지금 일반적으로는 소추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헌법 84조의 소추 개념 관련해서는 수사·기소·재판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소만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게 더 다수설이지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것은 그것은……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이게 헌법적인 논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헌법 교과서를 다 보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수사·기소·재판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배숙 위원 아주 일부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꽤 많습니다, 이게.

○조배숙 위원 꽤 많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

○조배숙 위원 제가 그 근원을 찾아보니까 그게 보니까 일본에서 그런 해석을 한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저희 헌법 교과서에도 꽤 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본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것을 지금 우리나라하고, 저희가 45년도에 해방됐는데 일본에 있는 학설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일본 하면 저희가 극일을 하자 그리고 반일주의 그런 입장인데 일본의 학설을 따를 필요도 없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학설이 아니고요. 어쨌든 헌법 84조를 규정한 법 취지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예도 없었지만 소추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러면 헌법 제정 권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의 의사를 저희가 다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소추의 의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추라는 그 단어 자체.

그리고 프랑스 헌법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헌법에 보면 우리하고 좀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그 헌법 67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자격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외국의 입법례는 다른 입법례도 몇 개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륙법계라 프랑스 헌법의 이런 규정, 그 정신도 좀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는, 법원에서 그 이후로 중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원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 법원에 대한 어떤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법안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 원래는 개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지요.

○**조배숙 위원** 그런데 민주당의 어떤 의원님께서 어저께인가요, 특정 집단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구성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보통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기 때문에 이 요건이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 없이 해 놔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경우에 헌법 21조가 표현의 자유 이것을 포함하는데 정치적인 비판, 집회에서의 감정의 표현까지 저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법안이 너무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아닌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최근에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한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포함한 그런 혐오감들을 표출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 과정에서 나온 법안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법안이 위험한 것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고소나 이런 처벌 의사표시 필요 없으면 그냥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여기 비슷한 입법례도 외국에 좀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자꾸 외국에 있다는 얘기만 하시지 말고.

그러면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도 착수하고 처벌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형사 사법권 오남용의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 얘기를 하시는데요.

외교부장관님 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외교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문인석**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입니다.

○**조배숙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한국 내 반중 시위를 통제하라’ 이런 요구를 노골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여당이 입법 형태로 반영한 것이라면 어떤 심각한 외교적 종속 행위로 비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이 있는데 외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런 의사를 표시하니까 이렇게 법을 했다고 하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문인석** 일단 여러 가지 외국인에 대한……

○**조배숙 위원** 좋습니다.

다시 장관님께 돌아와서……

장관님,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은 반미·반정부 시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이었어요. 그런데 또 반중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형사처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편향성의 문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사실은 과거에도 많은 반미 시위가 국가보안법 위반뿐만 아니라 집시법, 도로교통법까지 적용해 가지고 처벌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개인의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물론 플러스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이 그 이전에 반미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건 아닙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아직 제가 법안을 보지는 않았는데요 특정 국가라든가 특정 국가의 지시를 받고 한 그런 입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보세요. 입법제안서를 제가 봤거든요. 제안이유를 보니까 제안이유는 단순한 예시가 아니고 법률의 입법 목적과 동기를 명시하는 공식적인 서술입니다. 입법제안서에 똑같이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지요. 그런데 예시로 든 것이 꼭 그 얘기를 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리고 이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들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여수시를 출신의 조계원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수 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아주 최근은 아니고요.

○**조계원 위원** 국가산단의 위기는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계원 위원** 지금 여수의 시내 대로변 상가까지도 임대와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듣고 있습니다. 곧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정도로 국가산단의 위기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로까지 도미노처럼 퍼지고 있고 여수 전체가 경제 위기로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루빨리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 정부에서는 선 자구노력, 후 지원 이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석유화학산단이 호황기에 엄청나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고 그것으로 배당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석유화학산단의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하면서 그동안에 벌어들였던 수익들을 적절하게 재투자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골든타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에만 맡겨 둘 게 아니고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좀 주도하고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좀 짚었지만 여수화학산단의 위기 상황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단순한 업황의 악화가 아니고 전방위적인 붕괴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요. 지금 석유화학산업의 기업은 보통 90% 가동률이 될 때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가동률은 전반적으로 70%대까지 하락하고 감산, 라인 중단 그다음에 설비 스크랩 등 자구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 감소가 곧바로 고용 쇼크로 이어지고 있고 실업급여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4.1%가 증가했고 구인 인원은 30.2%가 감소했고 구직 건수는 44.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수는 전년 같은 달에는 53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원 수는 3411명입니다. 61.1%나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표상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 질의 때 8월 결산 질의에서 요청드린 바 있는데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4년 10월 기준 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가 추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기업들은 연간 약 3000억 원의 추가 전기료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가뜰이나 중국의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전기료까지 인상이 되니까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제가 질의를 통해서 적어도 기업 전체가 아니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한해서 전기요금 인하를 요청을 드렸었고 제가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질의했었습니다. 그때 산업부1차관은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지금도 검토 중인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아직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덜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조계원 위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5항 5호를 보면요 그 밖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근거해서 당장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은 없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소비자 부담 전가라든지 보조금 관련된 통상 이슈까지도 검토할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기왕에 이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으로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다면 바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골든타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 안에 조치하는 게?

다음으로 산업부는 지난 8월 20일에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선 자구노력 후 정부지원. 그러면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하등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전혀.

보면 그런데 기업들이 실제로 자구노력을 하려고 해도 현재 제도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지요—제18조에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에 속한 기업은 자회사·손자회사·증손자회사에 대해 일정 지분 이상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증손회사 지분은 100%를 보유해야 됩니다. 기업 간에 협의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상호지

분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알아봤더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의무를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과 관련한 해석이 분분하고 그리고 이 특례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최대 3~5년의 한시적 유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석유화학산업같이 거대한 장치산업,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는 투자와 설비가 이루어지는데 3~5년 만에 기업의 지분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하신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의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 법적 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현재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재의 법적 규제 내에서는 합작회사를 만들었을 때 100% 보유해야 하는 게 일반 규정이고요. 아까 기활법의 특례조항이 적용됐을 때도 최대 3~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는 지분 100% 보유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 투자와 구조개편이 필수적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사실상 이게 활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시정되지 않고서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계원 위원 그래서 산업위기 지역에 한해서 이 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경과 취지는 공감하는데 저걸 딱 적용할 수 있을지 저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나와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사항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제가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릴까요?

○조계원 위원 예, 잠깐 짧게 설명……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제가 설명드릴까요?

○조계원 위원 예.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지금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요 기업결합 심사와 정보교환입니다. 지금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들이 기존의 공정거래법에서 관리하는 경성담합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성담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업들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정위가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서 신청 중인 기업이 있고 지금 사전협의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가능한 방법들이 많고 과거에도 기업결합을 했던 경험들이 2015년 삼성종합화학과 현대

케미칼 그리고 2006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기간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때 당시 기간이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때 당시에 6개월 정도 걸렸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을 지정한 지가 5월 달에 지정했고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의 시한은, 텀은 너무 깁니다. 적어도 한 두 달 정도 안에 그런 심사 과정은 완료가 돼야만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지금 공정위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구조조정을 공정위의 동의를 거쳐서 인가하게 돼 있더라고요. 동의를 맞지요?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안에는 협의를 거치면 기업 간의 구조조정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걸 공정위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제가 잠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6개월 걸렸지만 이번에는 더 빠른 시간에,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정위도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훨씬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고요.

○조계원 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법적인 개편에 있어서 공정위의 동의를 무조건적인 강제 조항으로 적용하는 것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총리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러니까 공정위는 어떤……

○조계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기업 간의 사업 재편을 하려면 양도·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막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현행 규정상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따른 법인세는 25%, 지방세는 2.5%가 발생하고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8%가 발생합니다.

총리님, NCC 같은 석유화학공장의 자산 규모는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달합니다. 양도·양수 시 법인세, 취득세 등 다 원리원칙대로 적용하면 막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업계 자체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원리원칙대로 적용하면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공정위 이슈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 이슈를 포함해서 지금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슈들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느끼겠지요.

○조계원 위원 지금 저기 화면을 보시면 스페셜티 기업과 정유를 포함하는 S-OIL이나 GS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일까요?

그래서 정부도 업계의 사업 재편 계획들을 잘 검토해서 금융, 세제, R&D, 규제 완화 이런 지원 패키지를 통합적으로 마련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보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들에게,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2% 수준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계원 위원 지금 이게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고요. 그리고 다른 독일이나 캐나다, 일본 등등에 비교했을 때 세액공제율 격차가 10% 수준이고요. 다른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등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낮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R&D만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임하겠다는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꼭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대기업과 관련해서 R&D 부분에도 그렇고 R&D 부분이 아닌 부분에도 사실은 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일정한 지원이나 감면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큰 취지에서 R&D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흥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 구체적인 대기업에 관한 수칙에 관련해서 저 부분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당연히 기업에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그것을 촉구하는 것은 옳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에게 모든 걸 먼저 알아서 사업 재편을 하고 오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잘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공약으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 지원을 약속하신 바 있지요. 실제로 정부도 지금 이러한 부분에 노력은 다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길을 열고 기업이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감사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여수 세계섬박람회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계원 위원 내년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지정이 되어서 개최가 됩니다. 규모는 30개국에서 300만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수지역 공약으로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섬 도시대회’ 그리고 ‘2026 국제 섬 포럼 in 여수’ 등 다양한 MICE 행사도 개최될 예정인데요. 저도 여수의 국회의원으로서 또 문체위원으로서 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나 한국콘텐츠진흥원 과도 MOU를 맺고 여러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수 박람회는 단순한 지역의 이벤트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국가에서 지정한 공

식적인 섬박람회이고 그리고 이 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를 세계 섬 방문의 해로 지정을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특별히 무슨 다른 부작용이 없다면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섬 방문의 해를 지정하면 전국적 관광소비 확대에 따른 지역 고용소득이 창출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행사를 준비하는 선포식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비를 위해서 한 5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여수 섬박람회 기간 동안에 여객선 운영비, 반값 여객선 운임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섬박람회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국가예산 12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도비 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한번 제대로 잘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어디 그런 전례가 있던 걸 본 것도 같은데 하여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김남근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의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구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국무총리님께, 한국형 디스커버리라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남근 위원 우리 대선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납품 거래를 할 때 대기업들이 종종 납품하는 부품이나 소재에 대해서 설계도나 공정도 이런 거 갖고 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설계도를 자기 것으로 바꾸고 공정을 자기 것으로 바꿔서 기술을 탈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남근 위원 그런데 그걸 막상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설계도나 공정

도를 바꾼 것들은 대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재판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재판에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 이기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통은 일반 언론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 편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영미법 국가에서 많이 하는,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소위 디스커버리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증거를 법원에 다 내놓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독일하고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륙법계 국가는…… 이런 디스커버리제도가 배심제도를 기초로 하는 영미법제도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법원이 지정을 해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대기업 영업장에 가 가지고 설계도도 보고 공정도도 보고 기계 성능도 검증해 보고 한 다음에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내면 그것을 가지고 법관이 ‘이 설계도는 이 재판에 꼭 필요한 거니까 제출하도록 해야 되겠다. 공정도는 제출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게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복사를 할 수는 없고 와서 보기만 해라’ 이런 식의 재판 지휘를 하는 제도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들을 다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히 5대 국가 중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기업들도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깐 다 미국 가서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LG하고 SK하고 배터리 기술 분쟁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해 봐야 그것 이기기 쉽지 않다,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 미국 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LG가 이겨 가지고 결국은 배상을 받고 분쟁을 해결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미국 가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쨌든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법원에 가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어 가지고……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기술 침해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더니 승소율이 1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봐야 거의 10개 중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저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를 하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눈물 나는 소송들을 많이 해 봤는데 해 보면 2년, 3년 계속 질질 끌려가기만 하고 쉽지 않은 소송들입니다.

그다음에 처리기간들도 보통 2년, 3년은 가는 거지요. 일반 소송보다 훨씬 많은 673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포기하는 게 좋다. 이런 관행이 생기니까 대기업들도 기술 탈취를 하고서는 분쟁이 생기면 ‘빨리 소송해. 소송 가서 하자’ 이런 식의 태도란 말이에요, 법원에 가면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고 한 게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라는 것이고 내용은 대륙법계 국가 독일과 일본의 제도와 그다음에 미국식의 디스커버리제도를 좀 혼합한 것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 그래서 미국, 독일과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법관이 지명한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재판 지휘를 하도록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이런 소송에서는 증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법원에서 증인심문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원 밖에서 당사자 대리인들이 증인심문 같은 것들을 해 가지고 법원에 영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이런 것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도입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대선 공약도 있었고 이 소송의 필요성이 큰 특허법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지식재산처하고, 또 어쨌든 현재의 민사소송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용을 갖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에서 안 나오신 것 같으니까 산자부에서 한번, 산자부장관님……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나와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나왔습니까?

지식재산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해서?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이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계에서 오랫동안 요청해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증거의 편재 문제로 인해서 특허권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에서는 21년부터 80여 차례 이상의 소송을 해서……

○**김남근 위원** 아무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 인정하시는 거지요?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제도개선안을 마련……

○**김남근 위원** 됐습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긴밀히 협의해서 도입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다음 중요한 게 이걸 도입했을 때 법원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도 문제인데 법을 개정해 봤더니 법원에서 죄다 판짓하면 의미 없는 입법이 되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김남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시고 한국 현실에서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들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10년 전부터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입법 의견도 낸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기로는 영미적인, 원형적인 디스커버리제도는 오히려 소송을 좀 지연시키는 그런 폐해가 있다라고 해서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검토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도 도입하는 데 문제없다, 우리가 대륙법계 소송 제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데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해서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에요.

중소벤처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중소벤처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중기부장관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저희도 내용 파악해서 현재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넣어 뒀고 산중위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김남근 위원** 중소벤처부장관님도 어떻게 보면 제일 앞장서셨어야 될 분인데 하시겠다는 것 같고요.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잘 아시겠지만 공정위는 법 개정에 같이 협력해서 추진 중입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면 유일한 게 법무부예요. 법무부가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인데 민사소송법에 도입하는 건 쉽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특별법인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이런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건데……

사실은 이 제도가 기술 탈취 소송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경제형벌 합리화…… 제도에 있어서도 배임죄와 같은 경제형벌로, 형사처벌로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징벌적손해배상, 디스커버리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민사적으로 해결해 보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의 입장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도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일단 개별법의 개정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적극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행정부처도 법원도 다 찬성하시는 거고. 그런데 기술 침해 이외에 투자자하고 대기업 임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임죄로 하지 않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제도로 활용을 해 보자라고 하려면……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려면 민사소송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김남근 위원** 그건 법무부가 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냥 장관님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김남근 위원** 구체적으로 TF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법무부에서 상당한 정도의 논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구는 돼 있고. 어쨌든 지금 관련 법안 2건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법안 상정해 갖고 논의가 진척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배임죄 문제 처리와 이건 동시에 같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배임죄만 대체입법으로 전환을 할 때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걸 이게 보완을 해야 되고. 결국 배임죄 같은 것으로 자꾸 고소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게 만들고 그 제도를 활용을 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려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 점에서 법무부도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든 행정부처가 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도 입법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산적 금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지금 대출 규제 가지고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하니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자금이 많아 가지고 부동산에도 충분히 다 빚내서 집 사라고 대출해 주고 또 남는 돈으로 산업 투자를 해 가지고 신산업인 AI·반도체·바이오 일으키고 이러면 좋은데 자금이라는 게 항상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쓸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 같은 데 쓸까? 부동산 해 가지고 과연 생산적 효과가 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BIS 같은 데도 다 인정을 하는 거고. 생산적인 곳에 은행이나 보험사나 이런 데가 갖고 있는 돈들을 좀 가게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10대 첨단전략산업들을 육성하는 데만 한 500조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150조 정도의 국민성장펀드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 국민성장펀드도 절반인 75조 정도는 결국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데 부동산에 대출해 주고서는 앓아 가지고 쉽게 돈 버는데, 작년에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이런 것 대출해 주고 이자 장사로 번 돈만 43조예요. 그러면 그런데다가 투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가중치, BIS 비율을 계산할 때 위험가중치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여 가지고 그러면 자본을 많이 쌓아야 돼서 은행이나 보험사들도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 부동산 대출을 줄이게 되고, 주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대폭 낮춰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자본금 쌓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정책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본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관계부처하고 합동으로 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남근 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대책으로 금융규제 대책은 내놓고 이것을 잘 설명을 못 해요. 물론 빚내서 집 사라 하는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DSR 같은 기본원칙을 채무자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기본적인 소득이니까 연소득 대비 1년에 원리금 갚아야 될 것들의 비율…… DSR 같은 경우는 금융의 기본원리로 하니깐 과잉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꾸준히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부동산대책을 여러 번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

데 그런 금융의 기본원리를 안 지키는 데다가 은행들로 하여금 자꾸 부동산이 아닌 이런 생산적인 것에 투자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이 일관되게 안 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DSR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규제해 오고 있습니다만 DSR 그것을……

○김남근 위원 그런데 꾸준히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도에 주택금융공사가, 공기업이 47조나 부동산에 대대적인 돈을 펴 썼고 그때 DSR 이런 거 하나도 적용 안 했잖아요. 정책금융부터가 안 했어요. 그렇지요? 2024년에 HUG에서의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이거 23조나 풀었습니다.

그 후유증을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부동산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가격이 자꾸 오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

○김남근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처럼 부동산 부양한다고 다시 DSR 풀었다가 다시 죄었다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 번 금융 대책 하지 말고 이런 생산적 금융이나 DSR을 금융의 기본원리로 보면서 꾸준히 하게 하면 그러면 부동산에 자금이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막고 버블을 막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할 생각이고요. 지금 관계부처하고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 국토부장관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에 절벽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2년도에 직전 3년도에 비해서 한 28% 정도 착공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53% 정도 줄었습니다.

막대그래프를 보여 줘 보세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한 46% 정도 줄었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착공한 지 3년 정도 지나야 입주할 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착공이 준 것이 2025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영향이 크겠지요. 착공이 2023년도에 56%나 줄었으니까 더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입주가 더 많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2027년도도 마찬가지지요, 2024년에 한 40% 줄었으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런 주택공급의 대실패,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의 대실패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의 절벽 상태 속에서 집값이 계속 불안하게 되는 이 위기 상황을 맞은 겁니다. 이런 진단들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비상하게 주택공급 정책 같은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공공이면 공공, 민간이면 민간 활성화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예를 들면 서울지역에 74개의 공공 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도심복합개발을 필두로 해서. 이것은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잖아요, 공공이 하는 거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김남근 위원 그러면 이런 데부터 LH 서울지역본부의 역량을 늘리고 자금조달 방식을 개선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74개의 공공 재개발사업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뭘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지구지정만 많이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업이 다 어디서 지연되고 있냐 하면 지구 지정 다음에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 할 때 주민들 동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현금 청산 문제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현금 청산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어르신들이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은 공공이 그것을 지분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공공 지분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현금 청산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 이런 대책도 필요하단 이거지요.

그래서 너무 오세훈 시장한테만 맡겨 두지 말고,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뺑을 치는 게 있어요. 지구지정 많이 했어요. 지구지정만 하면 주택이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10년이 걸리고 15년이 걸리는데 지구지정 1년 2년, 1년 앞당겨 났다 6개월 앞당겨 났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뒷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지금 다 두 손 들고 주민들이 동의 안 해서 사업 안 된다 이 탓만 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에만 맡겨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겁니다. 국토부 차원에서 서울지역에 있어서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분담금 문제……

또 오세훈 시장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74개 공공 재개발사업들에 대해서 다 인허가 지연시키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한시법으로 작년 9월에 끝나기로 돼 있는 도심복합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하나도 끝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시법도 연장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적어도 공공은 공공대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고 민간은 민간대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다양한 주택 공급망을, 최선을 다해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또 특히 공공이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저렴한 주택들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부담 가능한 주택들이. 예를 들면 지분적립형 주택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큰 빚 내지 않고 처음에는 30%, 50%만 사고 시간이 가면서 계속 지분을 매입해 가지고 사 나가는, 그러면 큰 빚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출을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런 정책들도 포함해 가지고, 그래야 안심하고 기다릴 것 아닙니까? 지금 큰 빚 내서 사지 않아도 정부가 충분히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계속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는 안심을 시킬 수 있으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 대책을 포함해 가지고 신속하게 주택공급 대책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우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위원 총리님, 오늘 저는 연금 관련된 문제를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연금 관련된 부분이니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랑 경제 관련된 부처에서도 같이 좀 잘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마 우리 선배님들께 엄청 고마움을 느끼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래도 정말 많이 부족함 없이 자랐고, 그래서 이번에 APEC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 많이 높아져 있구나, 역사책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훌륭한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세대는 불안함을 느끼고 사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도 너무나도 작아졌고 이번에, 저는 그래도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를 해외에 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 국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국내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또한 불안함을 갖고 사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인구구조입니다. 출산율이 0.7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거의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의 전쟁이 일어난 국가보다 인구가 빨리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런 재앙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의 이렇게 빛나는 대한민국이 30년 뒤에도 빛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을 지니고 사는 세대가 또한 저희 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연금이 혹시나 고갈되면 미래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불안을 지니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올해 초에 연금개혁이 있었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우재준 위원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구조개혁은 아니고 모수개혁이었습니다.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다 조금씩 올렸습니다.

○우재준 위원 이번에 개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결국은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연금 자체와 또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이 한편에 있어서 재정의 안정화라는 측면만 볼 수는 없어서 그 양자를 절충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우재준 위원**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 안정화, 이 인구구조의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우리가 연금 재정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비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겁니다.

연금 재정 고갈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돈을 내야 할 사람은 더 내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받는 돈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미 있는 돈은 우리가 조금 더 잘 지키고 수익률을 올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말고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크레디트부터 해서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모두 다 이 세 가지 공식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자가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지난 연금개혁 기억하십니까? 더 내고 더 받자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걸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더 내는 건 우리인 것 같고 더 받는 건 웬지 기성세대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재앙적인 인구구조 하에서도 ‘이것 웬지 뭔가 우리만 손해 보는 결론이 난 것 같다’라고 해서 분노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전제는 그런 식으로 갔을 때는 연금이 일정 시기가 되면 고갈해 버린다는 어떤 산식도 전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식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견해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재준 위원** 세 가지 방법 중에 수익률을 올리면 됩니다. 맞습니다. 수익률을 올리면 되는 건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더 낼 필요도 없지요. 맞지요?

물론 최근에 수익률이 좀 올랐다는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증시 호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국무총리 김민석** 그래서 고갈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수익률이 잘 나올 수 있다면 더 낼 이유도 없겠지요. 더 내는 걸 그래도 감내하는 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마이너스 40%, 50%까지 나오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연금개혁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많이 이렇게,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 점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부분에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는 청년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지요. 원래는 여러 가지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한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이제 수급개시 연령이 얼마 남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비교적 빠르게 보험료율을 9~13%까지 올리고 조금 오

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청년세대들, 20대들은 조금 더 천천히 1년에 0.5%씩 올려서 장기간에 걸쳐서 보험료율이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원래 정부 초안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그것도 삭제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예.

○우재준 위원 그리고 대신에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즉시 43%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재정이 정말 힘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개혁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대—50대 후반 정도가 됩니다—그분들은 덜 내고 더 받아 가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현재 우리의 연금 구조 또 연금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균 수령을 해도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도 사각지대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와 있는 저희의 특수성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재준 위원 최근에 연금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총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보니까 ‘연금을 신뢰하는가’라고 했을 때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팽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팽팽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세대 간 ‘신뢰한다’ ‘불신한다’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면 바로 보이시지만 50대·60대는 ‘신뢰한다’가 많고요, 20대·30대는 ‘불신한다’가 압도적입니다. 30대는 심지어 75%가 ‘불신한다’고 합니다. 국가 재정정책에 있어서 이 정도의 압도적인 불신이 있다면 사실 굉장히 이 분노는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렇게 해서, 다만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정 부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는 사람들, 청년들은 더 내는 것을 부담하고 기성세대는 받는 돈을 조금 줄이는 장치로서 자동안정장치라는 것을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모두 인정해 주는 것에 있어서 나중에 인구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물가상승률을 일부분만 반영함으로써 받는 보험급여를 조금 줄이는 그런 부분에 기성세대도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연금개혁 합의 당시에는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자라고 하고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회 연금특위가 만들어졌지요.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국무총리 김민석 예.

○우재준 위원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연금개혁안을 가져왔는지를 보면 이런 부분이 모두 빠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혹시 기성세대의 양보에 대해서 담은 부분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아직 정부 차원에서의 연금개혁안을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안으로 낸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123대 과제에도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지난번에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도 가져오셨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123대 과제에도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모두 다 보면,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요 보험료 지원 확대, 이것은 일부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크레딧 확대, 더 받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부, 이 부분도 더 받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초연금은 이 부분과 무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어려운 노인분들 도와준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는 장치는 꼭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모수개혁 이후의 과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저기는 부분 부분 나와 있는 연금 관련한 안들인데요, 그 부분은 결국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국회 연금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서 결국은 다뤄 갈 것이라고 봅니다.

○우재준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떠한 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연금특위에서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과제에도 발표를 하고, 다른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국회에서 하면 해 올게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지난 정부 시절에 저희가—저도 연금특위에 속해 있었거든요—그때 윤석열 정부에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속해 계신 의원님, 당시 사회수석을 하시던 의원님께서 원래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포함한 안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결국은 그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포기하고 국회 연금특위에 넘겼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을 내는 것이 좋은 측면과 국회에서 여야 또는 사회적 대화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은 측면이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과정이 그랬다는 점을 잘 아실 것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안, 구조개혁안을 포함한 안을 내야 되는 시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수개혁이 올 초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하신 연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정부 측에서 좀 고민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국회에 있는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진도를 좀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 이 점과 관련해서 왜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는지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이 첫 번째가 아니었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금개혁은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게 04년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연금개혁입니다.

07년도에 최종적으로 합의는 됐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연금재정이라는 게 고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비슷했습니다. 낼 사람들은 더 내야 하고 받을 사람들은 받을 것을 줄여야 된다, 그렇게 고통 분담을 서로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더라고 해서 당시에는 어떻게 정부가 초안을 가져왔었냐면 정부는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야 될 사람들은 보험료율을 15.9%로 올리고 대신에 소득대체율, 받는 돈은 60%에서 50%로 내리자라는 게 처음에 정부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론이 혹시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해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 그때 당시에 받는 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보험료율을 15.9%로 올리지 않고 9%로 유지했습니다. 대신에 받아야 될 돈, 기성세대가 받아야 할 돈을 60%에서 40%로 20% 낮추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안에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 법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녀세대가 지금 20년이 지나서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받는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총리님,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여러 가지 측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이 문제는 저는 향후에 다른 문제하고도 많이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세대 간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정년 연장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우재준 위원 정년 연장이 있어서, 정년 연장이 혹시나 청년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우재준 위원 그렇다면 이 점도 일정 부분은 세대 간 대화가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 그런데 연금 문제처럼 이렇게 세대 간 불신이 쌓이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이게 합당한 대화가 되고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래서 이번에 운영되는 국회 연금특위는 특히나 세대 포함을 더 시킨 사회적 대화를 처음부터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위원 저는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시겠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청년세대일 겁니다. 집이 없는 청년세대고, 반대로 집값이 좀 오르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기성세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금 문제와 같은 이런 불신이 있으면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합리적 해법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도 저는 굉장히 크게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재명 정부는 청년세대보다 기성세대의 이야기를 더 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오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라는 그런 불신,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이재명 정부, 새 정부가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더 잘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는 대통령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펼쳐야 할 정책 운영 방식에 있어 제일 큰 과거와의 변화 중의 하나는 모든 정책 결정과 그 논의에 있어서 젊은 세대를 반드시 일정 부분 포함해서 하자, 그런 방식의 사회적 대화가 이전의 사회적 대화와 달라져야 한다, 그것이 핵심적 변화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려고 합니다.

○**우재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치고는 연금 문제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대단히 죄송한데 연금 문제는 이제 시작이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연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유보 통합과 함께 아주 거창하게 개혁 과제로 내세웠던 연금을 마지막에는 사실은 구조개혁, 모수개혁 다 안 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타결을 포기 내지는 해태했었습니다. 그것을 어렵게 사실은 모수개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재준 위원**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어도 자동조정장치라는 기성세대의 희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자동조정장치 여부를 떠나서 저 사안 자체에 대한 타결을 사실은 포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정리한 것인데 저것이 100점짜리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위원님의 충정도 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우선 논의하시고 또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입장을 가져야 될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계속 의견을 주십시오.

○**우재준 위원** 이재명 정부가 이미 오랫동안 많은 일을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정부 과제도 발표를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적어도 초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단 한 푼도 신규 과제가 없더라고요. 연구용역 예산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또 다른 기회에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런 문제들이 저는 세대 간 신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복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위원님 말씀을 특별히 청해서 듣겠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모시고 말씀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총리실 차원에서 논의할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재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를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무총리님, 경제부총리님, 산업통상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감사원장님께 다 질의를 드리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총리님, 제가 예결위에 와서 봤더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리님하고 비서실장님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지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견제할 필요가 없어서 질문하지도 않을 텐데 국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쁜 마음으로 질문을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감사합니다.

○김한규 위원 APEC과 한미 관세협상으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잼버리 참사,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잇따른 외교 참사로 크게 마음이 상했던 국민들의 자존심이 성공적인 APEC으로 상당 부분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쟁 후보지였던 제주에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랬는데 경주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었던 금관 모형 선물을 보고 제가 마음을 풀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주도 꼭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관세 합의 관련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야당 위원님께서 이게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총리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한미 관세 합의가 헌법 제60조에 따른 조약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헌법 60조에 따르는 조약이라고 보기에 엄격하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헌법 60조에 따르면 통상조약이라든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미 간의 합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 국제법 보고 사법시험도 국제법을 선택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국제법은 특징이 몇백 년 동안 잘 안 바뀝니다, 오랫동안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합의를 해 왔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조약 중의 하나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조약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요.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 합의입니다. 그러면 이번 합의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뒷부분에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느냐라는 게 기준인데요.

이제는 총리님 말고 전공자이신 산업통상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 장관님, 여러 나라 간에 FTA를 체결하잖아요. 그중의 한 나라가 FTA를 위반하게 되면 WTO 상소기구든 이렇게 국제분쟁 해결 기구에다가 제소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자간 협약인 WTO는 어떻습니까? 그중의 한 나라가 위반하면 다른 나라가 역시 상소기구에 제소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있지요. 이런 게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겁니다. 맞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이번의 한미 간의 통상 합의,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연 200억 불씩 투자하기로 했다가 첫해에 좀 사정이 있어서 150억 불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어딘가에 제소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없지요.

반대로 미국이 자동차 관세에 15% 부과하기로 했다가 17%를 부과했어요.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WTO 상소기구에 제소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없습니다. 결국 한미 간의 조약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조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전에 있는 정의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거의 가입되어 있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조약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 거의 모든 나라가 비슷한 방식으로 조약으로 취급하고 그 나라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장관님, 정치적·행정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신사약정이다 보면 맞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 MOU 안에도 이 내용이 국내법과 상충되지 아니해야 한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정신하에서 비슷했던 미국과 일본도 이른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협상하실 때 이미 양국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할 거다라는 걸 전제하고 협의하신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성격이 되는가를 정하는데 이게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공통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신하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한규 위원 만약에 국회법상 비준을 거쳐야 된다면 통상적으로 비준을 준비하는 데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짧으면 이삼 개월 최소한 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효력 그게 그때까지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조약이 맞다고 한다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렇지요.

○**김한규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미국과 관세협의를 한 나라가 EU, 영국, 베트남,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친 나라가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없습니다. 만약에 양보해서 조약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면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는 미국은 비준을 안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해서 국내법과 효력을 같이하게 될 경우에 글로벌 통상 질서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여건 변화가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들이 굉장히 양국 간 협상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하나 할 때마다 법을 고쳐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국익에도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사법연수원 때부터 통상법학회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상대방 국가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약점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만약에 미국은 조약으로 취급을 안 했는데 우리가 조약으로 취급해서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규정을 위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 불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제기구에 제소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조약이라고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 취급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나……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제관례도 있고 조약도 있습니다. 비준은 조약에만 하는 거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여기에 의무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동의합니다.

○**김한규 위원** 총리님께 이것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조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이거는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고려해서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추후에, 내년 내후년에 예산심사할 때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팩트시트가 확정이 되면 국회만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설명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한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 다른 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산중위에 속해 있습니다. 산중위에서 이번 국감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게 과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진행됐는가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산업통상부에서 지난달 23일 감사원에 석유공사를 대상으

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혹시 어떤 점이 문제가 돼서 공익감사 청구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뉴스에 나오기는 했는데요.

○국무총리 김민석 저도 대략 들은 정도인데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김한규 위원 예, 맞습니다.

엑트지오라고 유명한 1인기업이 있지요. 여기의 선정 과정 그리고 대왕고래 담당 팀들이 S등급을 받아서 성과급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과연 걱정했느냐. 이런 걸 포함해서 대왕고래 관련된 프로젝트 업무 전반에 관해서 저희가 볼 때는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요청했고 산업부에서 이걸 받아 주셨습니다.

총리님, 만약에 동해건 남해건 우리 바다에서 석유나 가스가 나온다고 하면 채굴을 반대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상당한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굳이 채굴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만약에 정말 채굴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신중한 분석과 투명한 업무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비용이 드니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래서 문제는 그 판단을 할 때 상당한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판단했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요.

○김한규 위원 그게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를 삼는 부분인데요. 엑트지오라는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유수의 글로벌 자원탐사 분석업체들이 있었는데 기술·가격 2단계 입찰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경쟁회사들이 기술심사에서 부적격을 받아서 가격 응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엑트지오가 실질적으로 단독 응찰을 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엑트지오가 고객의 구미에 맞는 장밋빛 전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석유공사는 계속 이렇게 자원탐사를 해야 되는 업체입니다, 특히 해당 부서는. 그런데 다른 나라 우드사이드라는 업체가 포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 해당 팀과 해당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결국 ‘그렇지 않다. 유망하다’라는 고객맞춤형 전망을 해 주는 업체가 필요했다. 그래서 저는 엑트지오가 선정됐다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실패할 수 있지요. 자원탐사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실패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겁니다. 엑트지오가 동해에서 유망하다고 판단한 유망구조가 대왕고래 하나가 아닙니다. 무려 21개입니다. 나머지 20개가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나머지 20개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탐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렇다면 한 번 구멍 뚫을 때마다 1000억이 드는데 엑트지오한테 분석을 맡길 때는 25억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엑트지오 말고 다른 업체들을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25억씩 한 개나 두 개 업체한테 맡기면 50억이 들더라도 그런 교차검증을 통해서 중복되게 유망하다고 평가되는 그런 곳만 시추하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왜 그런지 석유공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엑트지오의 판단을 믿고 가겠다는 겁니다.

또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석유공사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석유공사가 동해의 나머지 유망구조를 유수의 글로벌 업체한테

맡겨 탐사를 계속하겠다는 기사를 나게 한 겁니다. 혹시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한규 위원 문제는 조광권이라는 탐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석유공사한테 부여를 한 거고 석유공사는 제삼자한테 넘길 때 산업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앉아 계신 김정관 장관님이 승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유공사가 자신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바로 그 시점에 보도가 되게 한 겁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 더 분노를 했느냐 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석유가 난다라고 직접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시총의 최대 다섯 배가 매장돼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부처 장관도 모르게 산하기관에서 발표를 합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공기업에 대한 컨트롤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산업부장관이 감사청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과연 이런 방식으로 주무 부처의 승인 없이 언론에 먼저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내고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서 채굴을 계속하는 게 국익에 맞는지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감사원장님, 산업부가 지난달 23일 날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접수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감사 실시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된 자료를 좀 검토하고 있고요. 하여간 저희들 신속하게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12일 날 퇴임하시는 분께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요,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제가 없어도 후임자들이 잘할 테니까요.

○김한규 위원 경제부총리님, 연기금투자폴 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연기금별로 좀 여유재원이 있습니다. 그걸 단독으로 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모아 가지고 위탁기관에 맡겨서 하면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수익도 극대화하고 그래서 여유자금을 잘 활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실제로 그렇게 여러 연기금이나 기관의 여유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면 수익률이 괜찮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작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규모 있게 하면 수익률이 작게 할 때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김한규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수익률을 봤더니요.

2024년 수익률을 봤더니 자료를 보시면 한 5.28% 되더라고요. 주식만 보면 16% 정도 되는데 다른 투자, 안정적인 투자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같이 전문적인 대형 연기금보다는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수익률로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 기관들은 직접 투자하고 관리할 만한 인력도 없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 또 수익률도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참여 비율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연기금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참여 비율이 공공기관은 16.5%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마 자기 돈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행안부장관님…… 지금 안 계시군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이렇게 법적으로는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김한규 위원** 실제로 어느 정도 위탁이 돼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수치까지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수익률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주 좋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한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병도 예결위원장님께서 확인하신 바에 따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별히 사진도 넣었습니다. 대전과 같은 경우는 1.99%밖에 안 되고요. 지자체들의 수익률이 2%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연기금에서 운용하면, 이렇게 투자풀로 운용하면 5.28%입니다.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어요. 지난 8월에 지자체들은 금고에 맡기는데 이자율도 공시돼 있지 않고 이게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게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 이게 법 규정을 한번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훈령을 만드셨어요. 훈령을 보면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라라고 만들어서 실제로 지자체는 다 정기예금에 넣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반하는 훈령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아마 지자체도 본인들이 일단 갖고 있는 자금을 중앙정부에 다시, 중앙정부는 아님니다만 연기금풀에 맡기는 것 자체가 불안한 것 같은데 불안해할 건 아니고요. 문제는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령 개정 여부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정기예금에 맡기는 게 아니고 연기금풀에 넣게 되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처럼 우리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더 관심이 있는데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기재부랑 협의해서 행안부도 지자체가 이렇게 낮은 이율로 계속 국민의 세금을 그냥 은행에 넣

어 두는 게 맞냐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자체도 다 금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금고의 이자율을 다 공개하게끔 이번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살펴보고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율을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이 확인하셨는데 1.99%라니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지적……

○**김한규 위원**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대령 인사에서 내란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으로 만들었느냐’ ‘잘 골라내라’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군인은 승진시키면 안 된다? 그러나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에 따른 것을 가타부타 여부 안 하고 가담만 했어도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면…… 지금은 뭐라고들 얘기하느냐. ‘명령을 어기면 항명죄에 걸리고 따르면 가담자가 된다’ 이렇게 자조 섞인 말을 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복무기본법 24조에는 명령권자의 준법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조 1항에 명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권자가 법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25조에는 바로 수명하는, 명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명령자가 법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를 해야지 수명자가 그것을 맞냐 안 맞냐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관님은 하도 제가 얘기를 해서 지금 귀가 아프실 겁니다.

총리님, 지휘관들이 전투 준비보다는 계엄 가담자 색출을 더 두려워하는 군이 됐다, 이래서 전쟁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계엄이나 군사쿠데타나 내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정리해 내는 것,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전력 강화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이제 법조문을 뒤져서 갈 거냐 말 거냐 따

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드리는 것이 바로 하급자, 소령·중령까지도 이렇게 따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중령에서 대령 거부한 사람을 진급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정당한 명령을 내려서, 전쟁이 났는데 안 가도 훈장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상식적 판단에 기초해서 일반 병사들도 그때는 정상적인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이해……

○**한기호 위원** 명령은 주구의 자리에도 가는 겁니다.

법무부장관님!

○**국무총리 김민석** 안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 이것은 과연 헌법과 법률의 책임주의 원칙에 맞느냐, 즉 고의와 책임이 있는 자만 처벌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것을 제가 법무부장관님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률적 책임이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것은 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란 상황이라는 게 너무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직후에 국민들이 바로 여의도에 집결해 가지고서 내란을, 또 군인들이 출동을 거부하는 상황들이 다 공개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한 책임들은 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명령을 받은 하위직에 있는 병사와 부사관 그리고 위관장교들이 그 당시에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면 군은 다 무너지고 말아 버립니다. 그래서 법에 책임주의 원칙을 항상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법무부장관님도 과거에 아버지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군에서 명령의 권위가 무너지면 조직이 아니라 각자도생하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휘관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가타부타 따지는 상황이 모든 계급에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법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지휘관, 이 지휘관은 법무 참모를 가지고 있는 사단장급 이상이 통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관님, 어제도 임종득…… 아, 오늘 임종득 위원이 질의했는데 합참의장이 합참 장군—약 40명 정도 됩니다—전원을 교체한다. 합참의장이 인사권이 있습니까? 없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과거 천안함 폭침 때하고 연평도 포격 도발 시에 해당되는 합참의장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합참의장을 처음 근무해 보니까 6개월 동안 업무 파악하기도 바빴다’. 그러면 지금 40명 되는 장군을 다 바꾼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다 6개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다 바꾸겠다는 것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

관님?

○국방부장관 안규백 우리 군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직을 교체한다는 것은 아마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한기호 위원 예.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런데 12·3 불법 계엄 이후에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아마 합참에서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분위기 쇄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쇄신해야지요, 당연히.

○국방부장관 안규백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위법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보직을 2년마다 바꾸지요.

○한기호 위원 당연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그러니까 그 시점이 도래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한번 도표 보십시오.

군인들은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공석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사단장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단장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된다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2군단을 하나 예를 들면 군단장도 이미 만 2년이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거기의 야전사단장도 몽땅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단부터 사단까지 동시에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이래서 이렇게 동시에 교체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위원님,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연속성을 보장하고 또 대비태세에 어떤 허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면서 인사할 겁니다.

○한기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 거기다 합참은 지금 중령·대령급도 전부 다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술렁거리고 있다는 걸 제가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현역 군인한테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술렁거리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군이 안정성을 가지고 군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예.

국방부장관님, 오늘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지요?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한번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또 서주석 안보실장도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그런데 금년도 1월과 5월 달에는, 이미 그때는 대통령이—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입니다—공석 상태였지요. 이때는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용어를 넣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그런데 오늘 발사하고 지난번 10월 달에 발사했을 때는 ‘규탄’이라는 말이 빠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하던 용어를 바꿔 버렸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이제는 규탄 안 하지요, 아무리 많이 싸도?

○**국방부장관 안규백** 이번에 쓴 것은 화성-11형(KN-23) 이스칸데르급인데요. 그게 고도와 사거리를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아마 저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스칸데르급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때도 규탄한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 정권이 아닌 때에.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것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듣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난번 10월에 썼을 때 대통령께서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저런 말씀 하셨습니다. 참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자꾸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안규백** 저것은 과거에 비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횡수가 많지 않아서 아마 저런 말씀 하지 않았나 이해합니다.

○**한기호 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군인들 관사 문제 때문에 장군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군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직업군인은 가족의 중요함을 인정합니다. 군인은 나지, 가족이 군인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가족의 고충을 대부분 비겁하게 회피하고 외면했습니다. 대대장까지도 휴가 나온 아들의 발바닥을 살피시는 어머니를 뵈면서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이제는 군인 가족의 희생을 강요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군인 가족의 삶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다음, 또 군인 가족이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방 지역은 관사 자체가 매우 부족해서 대기 기간이 길고 특히 교육과 생활권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서 기혼자의 주거 여건이 어렵습니다. 기혼자 관사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민원 시스템은 갖추고 있으나 노후화로 단열이 잘 안 되고 난방도 도시가스가 아닌 LPG 난방으로 경제적 부담도 큼니다. 전등도 LED 전등이 아니라서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근무 부대 인근 관사가 부족해서 외곽 지역을 배정받으면 통근 거리가 멀어서 교통비도 증가하고 아이들 교육·보육 시설도 없어서 아이들 돌보는 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절대 부족한 관사가 가장 큰 문제이며 아이들 보육과 교육 여건이 나은 생활권에 관사를 짓고 노후관사 리모델링이 절실합니다’,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그러면 실제로 관사가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부족하냐? 저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보통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소요가 4만 7657인데 부족이 1만입니다. 4분의 1 이상이 부족한 겁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제게 준 자료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를 강요하니 어떻게 근무하겠습니까?

다음, 그런데 제가 또 파악하면서 ‘그러면 실제 입주 희망자가 누군지 아느냐’ 한번 물어봤는데 입주 희망자를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파악해 놓은 것도 없어요. 그냥 부족한 현황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대 공급 자체가 지금 분석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기혼자들 입주할 대상자의 숫자에서 부족한 숫자만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025년도 전반기에 관사 대기 인원이 얼마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대의 명령을 받고 옮겨 갔으나 집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기 상태가 길어지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저거는 군인 관사 건축 연도를 본 겁니다. 지금 건축 연도가 20년이 넘는 건축 연도가 저렇게 많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살면 사회에서는 재건축합니다. 군은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장관님 집은 20년 안 넘으셨지요?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안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관사에서 노후화된 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군인에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총리님, 좀 전향적으로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위원님이 사실은 여당의 국방위원장을 포함해서 국방위를 오래 하시고 저 문제를 오래 제기하셨을 텐데 이 문제가 저렇게 안 풀리는 것을 보면서 저게 왜 그렇게 쉽게 안 풀렸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같이 저걸 풀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군의 유희지를 군인공제회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왜냐하면 군인공제회가 소규모 아파트라도 지어라, 지어서 아파트 분양을 하면 현역들이 입주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군 유희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건 공공기관인 지자체나 정부 기관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남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를 지으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요. 이제는 소규모라도 지어야 됩니다. 지으면 일거양득이 됩니다. 현역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면 현역이 거기 들어가서 사니까 군의 관사 부족한 게 저절로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집이 한 채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군 유희지에다 지었기 때문에 집값 자체가 싼니다. 또 군인공제회는 용자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역군인들한테 야전에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라고들 얘기하냐? 집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집이 없는 기혼자들이 어디서 삽니까? 독신자 숙소에서 삽니다, 자기 가족이 오기 전까지. 그러면 독신자 숙소는 또 어떠냐? 본래 독신자들이 살아야 할 독신자 숙소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게 풍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혼자의 숙소를 해결 안 하면

여러 군데 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장관님, 여기에 한번 힘을 실어 주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님의 그 공감 능력에 공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 사회도 사실 선진국의 문턱에 있지만 의식주 중에서 의와 식은 해결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도 주거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인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요새 젊은 MZ세대들을 비롯해서 장교들이 관사 또 전월세 또 다른 수요적 요구 이런 것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산술적으로 계획을 짜서 앞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위원님, 제가 들어가시는데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기하신 문제를 전부터 여러 번 제기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조금 진전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국감 끝난, 예결위 끝난 이후에라도 위원님 모시고 안규백 장관님 그다음에 기재부 부총리님 함께해서 저희와 같이해서 간단한 한두 번의 회의를 해서라도, 기존의 재정 투자하는 것 플러스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까지 점검하는,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진전을 좀 하는 노력을 실제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곧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이재관입니다.

방금 전에 김정관 장관님, 조약의 어떤 성격과 관련해서 한미 통상 MOU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약이 아니더라도 하는 부분은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일부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재정적 부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또 그런 논리를 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가 일시불로 투자를 하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외환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즉 200억 불 이하로 상한선을 뒀다는 점에서 그 문제 또한 해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관 위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 논쟁에 대해,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발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마지막까지, 서명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수고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감사합니다.

○이재관 위원 총리님께, 입술까지 부르트서 가지고 마음이 짝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께드립니다.

○이재관 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특구제도 진단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특구제도에 대한 전문가 설문을 최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지난 25년 2월 달에 개최해서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종합해 보면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그런 의견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규제자유특구 등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또 차별성이 명확하다라고 우수한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별로 나눠 주기 식 특구를 지향하다 보니까 특구 역량이 분산되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또 특구제도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선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아마 총리님께서서는 낙후지역의 지역발전이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거나 산업클러스터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특구제도는 80년대부터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 내용을 보면 규제 특례를 둔다든지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또 조세 감면 등을 두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재정도 투자를 합니다. 최근 5년간 투자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총 6조 5000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투자될까, 저희들이 11개 부처 87개의 특구·클러스터와 관련된 예산을 종합해 보니까 무려 1조 5000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예산의 절약이 중요합니다. 예산 절약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구제도 운영의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특구 운영 성과를 보면 특구는 대부분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GRDP, 즉 지역생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15년 0.2%에서 22년 5.6%로 더 벌어집니다. 기업 매출액 격차 역시 16년 10.4%에서 22년 16.4%로 크게 확대됩니다. 심지어 수도권의 지역소득이 수도권으로 순수출되는 경향도 더욱 심화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주력산업 비중조차 2010년 대비 20년에 보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경북의 경우에는 기업수 기준이라든지 매출액 기준, 상시고용인원 기준 모두 감소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특구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은 오히려 가속화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현재 수치로 본 이런 부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특구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에서 하는 것과 정부에서 하는 것의 통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기준과 대상이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 통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STEPI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29개의 특구제도가 운영되

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87개로 나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로 지정된 것은 1000여 개에서 2000여 개 정도가 지금 현재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보면 지금 현재 법률상의 근거는 있는데 한 번도, 하나도 지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연구원 보고서에서는 39개, 정부 보고서에는 14개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 인쇄문화산업단지, 마리나산업단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정이 된…… 분명히 어떤 취지에 의해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정부의 취지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비가 되지 않고 새 정부로 넘어가서 계속 도입만 됐지 있는 제도에, 지정된 제도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1개의 부처가 경쟁적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동안에 이것을 총괄하는 부처는 어느 곳도 없습니다. 국회예정처에서도 그렇고, 올 2월 경제장관회의 자료에서도 그렇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총괄적인 관리체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 어디에서도 이 특구 조정을 하는 부서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특구의 성격도 명시적으로 명확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특구의 의미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런데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특구가 꽤 있습니다. 산업부 그리고 과기부, 이렇게 같은 목적·지원대상의 특구들 보면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을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 지정되는 것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지정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역 형평성을 상당 부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이 특구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자치단체장의 하나의 성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이 돼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자치단체장은 특구를 유치하는 데 사실은 목을 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그것의 성과관리는 아주 소홀하게 하는,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지요.

부산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역이 특구로 중첩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 면적의 2.4배, 26종의 특구가 100개 이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12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특구를 통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 주력산업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력산업의 어떤 비중은 2010년 대비 20년에 정체되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STEPI의 보고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 보고서 역시 같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라는 이름, 지구·클러스터·벨트·단지 이런 유사 명칭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장관님들께서도 우리 부처에 어떤 제도가 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특구에는 근거법이 또 있습니다. 근거법이 있는데 그 법령과 규제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 관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가 사실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까지만 우선 제기하고 이따 제안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도 1조 5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성과관리 분

명히 잘돼야 되겠지요. 이 성과관리 또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56개의 특구가 법령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1개, 19.6%만이 그 근거를 두고 있고요. 45개, 즉 80%는 특구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구를 지정을 하고 시정하고 지정을 해제하는 이런 조항을 갖고 있는 제도도 41개 제도, 15개 특구는 지정 이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료의 취합·분석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이라든지 규모를 중심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분석을 합시다라는 그것이 매우 형식적이라는 것이지요.

총리님, 이와 관련해서 혹시 문제의식, 뭔가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적하신 문제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특구가 많은데 특별하지도 않고 너무 많고 또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재관 위원 예.

○국무총리 김민석 그래서 잘 정리하고 효율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제가 부산을 보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저것을 컨트롤타워에서 잘 조정하는 것과 함께 솔직히 저도 스스로를 돌이켜 봤는데, 자치단체장 말씀하셨는데 정치인들도 사실 관련된 자기 지역을 이러저러한 특구로 만드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또 좋은 대안을 주시면 같이 좀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관련해서 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중앙부처도 이 제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기에는 이것만큼 좋은 방식이 또 없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자치단체의 그런 속성상 중앙부처는 매력을 느끼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대안을 한번,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큰 방향을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수도권 1극 체제의 구조를 타파해야 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5극 3특 체제라고 하는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정책을 활용해야 된다는 일관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저는 이 특구제도도 바로 이와 같은 기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특구제도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각 자체가 아주 좁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5극 3특이라고 하는 그 시야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특성을 찾을 수 있고 자치단체의 장점을 결합시킬 수 있고 또 시행하는 부처 간의 어떤 칸막이도 해소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도 이것을 단순한 정부 조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그리고 이 특구의 콘텐츠와 관련된 혁신 주체와의 어떤 협력 체제를 마련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균형 성장의 내용에 보면 성장 5종 세트라고 있습니다. 즉 규제와 혁신과 금융과 인재와 재정,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부처별로 하다 보면 이 5개의 시스템이 사실 산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처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특구와 콘텐츠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지원 부처는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자리의 금융위원회는 아마…… 이 제도는 지방 부서하고만 관련된 것일 것이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융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도 분명히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부처 단위로 생각할 일이 아니더라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각 부처별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각 부처는 아마 순순하게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를, 조직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독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할할 수 있는 어떤 관리 법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만 이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라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큰 방향에 대해서 총리님 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 방향에서 같이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특구제도는 자치단체의 특화 발전, 자치단체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특구제도가 오히려 자치단체의 하나의 애물로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자치분권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각 부처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주로 국토부장관님께 질문드리고요. 총리님 그리고 경제부총리님께도 좀 여쭙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 국세청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혹시 질문드려야 될 수도 있어서요.

국토부장관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정이 되면 취득세·양도세 중과도 돼서 법적 요건이 굉장히 엄밀하고 명확하게 잘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천하람 위원 장관님께서야 잘 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국민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법률 요건을 같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택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고요.

다음 장 시행령 한번 볼까요.

시행령 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

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한다,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러 그러면 최근 3개월 통계를 봐 가지고 일반 물가상승률보다 주택가격상승률이 1.3배, 그러니까 최소 30% 이상 급등해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천하람 위원 그래서 10월 15일에, 그러니까 일단 처분일은 나중에 따지고 10월에 일단 지정이 됐으니까 직전 월이 9월이고요. 7·8·9월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일반 물가상승률보다 1.3배를 넘느냐가 일단 원칙적으로 따져 봐야 되는 모습일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따져 봤어요. 그래서 7·8·9월 통계를 보니까 물가상승률 1.3배를 안 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도의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 이렇게 서울의 4개 지역, 경기의 4개 지역이 1.3배 요건, 그러니까 주택가격상승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경제부총리님,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지요. 이것 위법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건 넘어갑시다.

이렇게 제가 기재부 국감에서 지적을 하니까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로 국토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해명 자료 내지는 설명 자료를 주셨어요. 내용을 보면 법정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 시점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시점에 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는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나씩 좀 따져 볼게요.

국토부장관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은 언제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13, 14 이렇게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 서면으로 하셨어요, 대면으로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서면으로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 서면으로 하셨지요? 그래서 의결은 14일에 서면으로 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천하람 위원 그러면 9월 주택가격 통계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식 발표되는 게……

○천하람 위원 공식 발표 말고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요. 9월 통계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재라는 말이 제가 볼 때 10월 15일……

○천하람 위원 그것 저희가 답변을 받았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천하람 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원으로부터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10월 10일에 통계 작성이 완료돼서 10월 10일 오전부터 존재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아마 장관님께서 ‘10월 15일 오후 2시에 이게 발표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그러니까 10월 15일 오후 2시에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요.

○천하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지요.

그런데 이게 10월 15일에, 그러니까 매달 15일에 나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보통 보면 발표되기 전에 그 달 둘째 주 정도에 그 전달 통계 작성이 완료된다, 그렇지요? 장관님, 이것 알고 계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천하람 위원 그래서 실제로도 매월 15일에 이렇게 쪽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기재부 부총리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15일에 관련 통계가 공식 공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부동산이 급등을 해서 이걸 빨리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15일에 관련 통계가—제일 중요한 통계지요, 주택가격 통계가—나온다는 걸 알면서 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13일, 14일에 하고 14일에 결정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하셨던 겁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천하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번에 10월 15일 발표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석 전부터 회의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 오고 있는 내용이었습시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 바로 회의를 해서 진행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천하람 위원 장관님, 너무 기시고요.

이제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10월 15일에 통계가 공식 발표가 되더라도 미리 받아 볼 수 있다, 적법하게. 통계법상 적법하게 받아 볼 수 있다. 2호에 관계기관이 받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주택가격 통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는 위탁 주체가 때문에 3호에 따라서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것 15일에 공식 발표되기 전에 미리 받아 보셨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총리님, 제가 그렇게 여쭙았던 것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해명 자료를 오늘 아침에 또 내놨습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깐. 뭐라 그랬냐면 ‘10월 13일 금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제공받지 않았습시다. 금번 9월 가격통계도 별도 제공을 요구한 바 없습시다’ 이렇게 오늘 답변했습시다.

다음 장 한번 보지요.

제가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이것 국토부에 언제 줬습니까’라고 물어봤습시다. 그게 왔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판에도 있는데요. 둘 중에 편하신 것 보십시오.

‘25년 10월 13일 16시경에 이미 위탁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에 10월 13일 날 오후 4시에 이 9월 주택가격 통계 받으신 것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천하람 위원 받으셨잖아요.

아니, 장관님, 이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제 말씀 듣고 좀 얘기를 더 해 주시겠어요?

○천하람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9월 통계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직전 3개월분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5페이지 해명 자료 다시 한번 보지요.

제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9월 통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쓸 수 있다. 9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8월 통계를 쓴 게 적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물론이고 실제 이 처분을 하기 전에 9월 통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법상 9월 통계를 써야지요. 왜 거짓말하면서 8월 통계를 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천하람 위원 거짓말이잖아요. 저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했다는 게 맞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우리에게 거짓말했다고 계속 의견을 말씀하실 거면……

○천하람 위원 거짓 해명이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우리 얘기를 듣고 나서 말씀하시지요.

○천하람 위원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9월 13일 날 오후 4시에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10월 13일 오후 4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10월 13일. 그런데 이미 우리는 추석 전부터 계속 회의를 해서 준비해 와서 실제 13일 날 오전에 이미 행정절차에 대한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천하람 위원 그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문제는, 위원님……

○천하람 위원 그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이미 시작했다 이런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제 의견 확인하지 마시고……

○천하람 위원 아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천하람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요? 이것 행정심판 하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지요? 만일 국토부가 법을 어겼다면 행정심판 하면 분명히 답이 나올 거기 때

문에……

○천하람 위원 법 어겼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서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천하람 위원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맞지요? 그 말도 맞지요?

○천하람 위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그전에 이미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해명이 다 달라요. 처음 해명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도 9월 통계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 의결이 14일에 됐는데 13일에 국토교통부에 나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 시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것 잘 띄워 주셨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위원님 그렇다면 행정심판 하면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요?

○천하람 위원 할 겁니다. 저희가 할 거고 이미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소송하면 될 것 같아요.

○천하람 위원 자, 보세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정 처분을 하는 처분권자 누구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부장관입니다.

○천하람 위원 국토부장관이지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법적 요건 한번 볼게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실제로 10월 16일 날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처분을 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천하람 위원 10월 16일이 처분일이라는 거는 당연히 다툼이 없으시지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 시는데,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규정돼 있다라는 것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의미지 그 심의결과에 쫓아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12페이지 한번 가 주실래요?

실제로 법문을 보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는 돼 있지만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최종적 판단권자, 처분권자는 장관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요. 장관님,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천하람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통계가 존재했느냐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장관님께서 최종적 판단을 하고 처분을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시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여시고 이럴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을 한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 얘기를 좀 들어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천하람 위원 아니요, 조금 이따가 설명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시간이 다 지나가서……

○천하람 위원 마지막 장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번 10·15 부동산 처분 관련해 가지고도 대환대출 LTV 관련해 가지고는 발표를 했지만 번복이 일정 부분 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정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발표를 해도 말로 한 것은 언제든지 번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법성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면 공식 처분이 된 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한 2장 정도 더 뒤로 가 주실래요?

실제로 보면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춰 가지고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한다. 그래서 아까 공고된 10월 16일에 처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장관님,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아니, 위원님!

○천하람 위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나 하면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월 16일 처분을 기준으로 명확한 기준 시점이 있어야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6일 처분 기준 시점과 관련해서는 9월 통계가 언제 있었느니 없었느니 지난 기재위 국감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에 장관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10월 13일 16시부터는 국토부가 9월 주택통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8월 통계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9월 통계를 원칙적으로 반영을 해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천하람 위원 왜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위원님은 계속 내용을 섞고 있어요.

○천하람 위원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된 문제인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제인지를 섞고 있고요.

○천하람 위원 제가 한번 여쭙볼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천하람 위원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정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때……

○천하람 위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걸 바꿀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인지……

○천하람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면 무조건 바뀌야 한다는 걸 묻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

잘아요.

○천하람 위원 무조건 바뀌야 합니다.

자, 볼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그건 행정심판 하면 되지요.

○천하람 위원 아닙니다. 제가 소송할 건데요, 들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소송하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천하람 위원 아니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마치 국토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천하람 위원 실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여쭙볼게요.

조정대상지역을 할 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질문을 했으면 답을 듣고 계속 질문해 주세요.

○천하람 위원 아니요. 할 때 직전 3개월 통계가 1.3배 이상 주택가격 상승이 안 됐는데 정부가 ‘이 지역은 앞으로 오를 것 같아. 풍선효과가 문제 될 것 같아’라고 임의로 판단을 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천하람 위원 못 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천하람 위원 그러면 직전 3개월 통계에 따라서 이 1.3배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만 적법하게 처분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행정적 재량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정책적 재량이 어디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했으면 답을 듣고 말씀해 주시지요.

○천하람 위원 예. 어떤 재량이 있냐고요. 있는지 없는지만 알려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계속 질문만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헛갈릴 것 같아요.

○천하람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장관은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천하람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9월 통계가 있는데 처분을 하기 전에, 심지어는 발표를 하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미 13일 날 행정절차가 들어갔다고……

○천하람 위원 잠시만요, 제 말을 들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천하람 위원 아니지요. 15일에 발표를 하고 16일에 처분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문제는 행정심판 하면 나올 문제라는 거예요.

○천하람 위원 장관님, 제 얘기 들어 보세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여기서 법적인 논쟁 할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예결위 아
닙니까?
- 천하람 위원 그런데 9월 통계가 있는데 왜 9월 통계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8월 통계
만 썼습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 천하람 위원 거짓말한 거잖아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어떤 거짓말 했습니까?
- 천하람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우리 국토부에……
- 천하람 위원 해명 자료 8월 통계밖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당시에 절차에 들어갈 때……
- 천하람 위원 8월 통계밖에 없어서 예외 규정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정책심의위 들어갈 때는 그 자료가 없었다고 말을 드리는 거
예요.
- 천하람 위원 이것 저희가 행정소송 할 거고요. 이 정도로 중대 위법하면요, 중대·명백
하게 위법하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가처분 성격의 효력정지 신청
도 이것은 패소할 겁니다. 제가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랑 해 가지고 당장 다음 주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넣을 겁니다. 법원 판단 한번 받아 보시지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넣으세요, 넣으면 돼요.
- 천하람 위원 10월 16일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 천하람 위원 아니지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목소리 크게는 저도 할 수 있어요.
- 천하람 위원 아니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사람 얘기를 듣고 좀 말씀하세요. 내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
습니까?
- 천하람 위원 자, 좋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17분 동안, 16분 동안 얘기했잖아요, 지금.
- 천하람 위원 아니요, 그래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할 만큼 했으면 들어 봐야지, 상대방 의견을. 안 그래요?
- 천하람 위원 장관님, 10월 16일 기준으로 그때 당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자기 얘기만 할 거면 쭉 하세요.
- 천하람 위원 그때 당시에 9월 통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9월 통계가 행정상으로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천하람 위원 왜 없지요? 10월 13일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행정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국토부에서.
- 천하람 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10월 13일 오후 4시에 있었는데 왜 그게 없어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9월 13일 회의 들어갈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들에게 그걸 공

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천하람 위원 왜 공표할 수가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식적으로 타인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정보는.

○천하람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판단권자입니까? 장관님이 판단권자고 처분권자예요. 장관님한테 그게 갔으면 그게 당연히 내용이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장관의 권한이지만 주거정책심의위의 의견을 들어야만 합니다.

○천하람 위원 장관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핑계 댈 거면요 장관직 내려놓으시고 주거정책심의위원 하십시오. 법적으로는 장관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실제 그 내용이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핑계 대실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게요 단순히 지금 이렇게 되면 정부 통계와 통계 활용에 대한 신뢰가 완전 떨어집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 전체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부동산정책 뭐 하셔도 국민들이 ‘진짜 더불어민주당 정권에는 무슨 통계 조작 DNA가 있냐, 이것 어떻게 믿냐?’ 이렇게 해 가지고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말조심하세요! 말조심하십시오.

○천하람 위원 저희가 이것은 법적으로라도 반드시 바로잡을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통계 조작이다, 통계 수정이다 해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다 지금 조사받고 수사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통계를 조작합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바보입니까?

○천하람 위원 10월 13일에 있었던 통계를 없다고 거짓말하신 게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부 공무원이 바보냐고.

○천하람 위원 거짓말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수사받고 있으면서 또 거짓말합니까?

○천하람 위원 통계 조작하고, 있는 통계 반영도 안 하고, 들어가면 안 될 지역에 다 넣어 가지고 재산권 침해하고 양도세·취득세 중과하게 만들고, 그래 놓고 뭘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멀쩡히 있는 알고 있던 9월 통계 왜 반영 안 했어요? 그게 통계 조작이지 뭐가 통계 조작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목소리 크다고 진실이 규명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한병도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목소리 낮춰서 말씀해 주시고 상대방 답변 좀 들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천하람 위원 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공무원들은 지지난 정부에서 통계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에서도 통계 조작이라고 했다가 통계 수정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통계의 수사를 받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고요. 재판도 지지 부진한 채 그 소중한 중요한 나이에 또 국토부에서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그걸 버젓이 보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아무도 지켜 주지 않았고 자기들만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바보처럼 통계를 조작하거나 통계를 이상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은 저는 바보 아니고서는 그럴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국토부 공무원들이 통계에 대해서 뭔가 조작을 하거나 이상하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행정에 관한 그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여기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결론을 내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국토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위치시키거나 다른 행정조치를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다만 정치 선동하듯이 그렇게 마치 누군가가 의혹과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9월 통계가 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랬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의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거 뭐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서 제가 좀 난처하네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를 지켜 주시면 좋겠고요 국토부장관님은 질문 안 할 테니까 잠시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부는 지금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약칭 NDC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어제 최종안이 공개됐는데 1안은 50~60% 감축하겠다는, 2안은 53~60% 감축하겠다는.

기후부장관님, 이것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림을 보시면 1안은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 사이 어딘가의 길을 가겠다 이런 목표고요, 2안은 일직선인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 어디쯤 길을 가겠다 이런 건데 도대체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라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그런 희한한 목표입니다.

장관님, 국제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2035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로 61%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2019년 대비 60%라 18년으로 대비하면 61.2%에 해

당합니다.

○이소영 위원 저 두 안의 상한과 하한 모두 권고된 기준보다 하회하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갑자기 목표를 단일 숫자가 아니라 레인지(range), 범위로 정하겠다고 하면서 무려 10%p의 엄청나게 넓은 레인지를 잡았는데 레인지를 목표로 정하는 국가가 많지도 않지만 가장 넓은 레인지를 정한 호주도 이 정도로 넓게 목표를 잡지는 않았습니
다.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이소영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의 레인지를 잡은 국가가 되는 거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최종 결정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공청회까지를 거친 안이고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소영 위원 2안의 하한인 53% 감축은 그냥 직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감축목표인데
요. 주로 경제 부처 장관님들이 반대하셔서 50%를 하한으로 하는 1안이 탄생했다고 들
었습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지 않아도요 어떤 이유로 반대하셨을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겠지요. ‘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 ‘공장을 해외로 옮긴다더라’ ‘중소기업들 어려운데
감축할 수 있겠냐’ ‘석탄발전 줄이면 전기요금 오른다’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식상한데요. 왜냐하면 2009년에 우리나라가 처음 온실가스 목표 정할 때부터 지
금까지 지겹도록 들어 온 레퍼토리이기 때문입니다, 발전도 없이.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박한 평가를 받아 왔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박근혜 정부 때는 외신으로부터 세계 4대 기후악당 국
가로 꼽힌 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서 감축 안 할 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같
은 석탄터빈 제조업체들 매출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동남아에 가서 석탄발전소를 무지
무지하게 때려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장관님들의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따랐어
도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수출 강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발전은 사양 산업
을 넘어서 멸종 산업이 됐고요 그사이에 엄청나게 성장한 재생에너지 판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OECD 재생에너지 꼴찌고요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기업들이
RE100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요, 전기차도 똑같은 논리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때의 그 결정들이 우리 기업과 경제를 위한 결정이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2035년 NDC 결정은요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 첫 번째 기후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두 가지 안은 제가 말씀드리건대 제가 본 지금까지의 역대 목표 중 가장
비겁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의사결정이 역대 정부와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

리 기후 목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종적인 헌법 해석 기관이고 여기 계신 모든 장관님들 그리고 저 같은 국회의원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헌재 결정에는 기속됩니다. 그게 우리 헌법입니다. 총리님, 우리 모두는 헌재 결정에 기속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결정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의 의사결정의 한계가 돼야 되는 내용이니깐요.

슬라이드.

헌재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님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정확하게 예견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할 경우에 단기적인 감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많을 것이고 그만큼 산업구조의 개선 속도가 느려져서 이후의 감축 부담이 다시 가중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정량적 수준 설정을 오로지 정부의 판단에 맡길 경우에는 단기적인 감축 부담만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는 감축 부담이 더욱 증가되고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다음 슬라이드—그렇기 때문에 전문 관료들에게 이 결정을 맡기면 안 되고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써 결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규범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고 전문 관료들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입법 절차와는 달리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민주적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몇몇 장관님들과 같은 전문 관료가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래에 계속 살아갈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행정부 관료들이 단기 주의적인 판단에 간혀서 장기적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우리 미래의 국민들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고 헌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나온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에 기속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기속됩니다, 헌재의 결정에.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서 온실가스 목표를 정하고 또 결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기후특위라고 하는 입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기후특위 위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기후특위의 총 20명의 구성원 중 13명이 ‘우리 감축목표는 단일 목표로서 국제기구가 제시한 61%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합치해서 이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로부터 이런 결과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유도 헌재가 예견한 대로 단기적인 감축 부담만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국민에게 감축 책임을 미루고 떠넘기는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슬라이드 다시 보여 드리지요.

이 선은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1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열심히 줄이다가 그 이후로 2050년까지는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보이세요, 빨간색? 위로 볼록한 선이요. 일직선으로 비례적으로 줄이는 것도 아니고 위로 볼록하게 배출량 유지하다가 2040년 이후가 되면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이때는 1년에도 몇 %씩을 줄여야 됩니다.

2040년 이후에 살아갈 국민들, 그때 경제활동을 할 기업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공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의 국민들한테, 지금의 어린이들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급격한 감축을 감당하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부담은 잠깐 덜자, 저는 이런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현재는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의 무책임한 감축안을 발표할 것도 미리 예견했습니다. 현재는 말합니다, ‘감축목표가 상향되는 진전 속도가 느려지면 감축경로 전체의 모양도 크게 볼록한 형태가 되어서 누적 배출량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

1안도 2안도 위험입니다. 이 두 안 중에 결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위로 볼록해지는 50%를 국가 목표에 포함시킨다, 이것은 위험입니다.

이런 엄청난 현재 결정이 우연히 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라고 전 세계에 소개되는 이 기후소송의 원고가 아이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레타 툰베리 잘 아실 겁니다. 그 아이들이 스웨덴에서 기후 시위를 시작하고 세계에 서 주목을 받을 때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무료로 소송을 제기해 줄 수 있는 공짜 변호사를 찾아서 직접 면접을 보고 변호사를 골랐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선택된 첫 번째 변호사였습니다. 가서 면접을 봤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더 어린아이들, 정말 어린이들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부모가 시킨 것 아니냐는 악플에 시달렸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 보면요 정말 절박하고 심각하고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여기 앉아 있는 장관님들보다 너무나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현재 재판정에서 최후진술을 했던 12살 초등학교 6학년생인 한제아 양이 왜 이 소송의 원고로 참여하게 됐냐는 질문을 받고 법정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저도 마찬가지인데요—인생의 절반은 기후변화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인생 대부분을 평균온도 상승이 가시적이지 않을 때 살았습니다. 최근에 평균기온이 1.5 언저리 상승했다, 매년 재난 일어날 때마다 이것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뉴스를 접하는 것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인생의 대부분을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재난과 변화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아이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한 남자 고등학생 아이에게 왜 이런 소송에 참여하게 됐는지 물어봤는데요. 그때가 2019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18년 여름에—최악의 폭염이었던 때인데요—뉴스를 보다가 야외 노동을 하던 공장 노동자의 뇌가 익어서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게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두려워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기에 계신 장관님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총리님, 장관님들이 이 아이들의 남은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단한 기적적인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결정을 받아 왔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의 장관님들은 산업계의 부담이라고 하는 16년 전부터 반복되는 레퍼토리를 반복하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을 공론화를 한답시고 공청회를 하고 이 아이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씩이나 돼 가지고 지금 50% 언저리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 이런 한심한 수준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장관님들은 미안하지 않으세요?

한제아 양의 법정 최후진술 중 발췌……

다음 슬라이드.

‘저는 지난 1차 공개 변론에 참여해서 5시간 동안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31년 이후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목표를 높게 세우고 실패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낮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세대 문제 해결보다 현재 세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31년이 되면 19살의 성인이 됩니다. 저는 이 소송이 2030년 그리고 2050년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12살짜리 초등학생이 법정에 나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입니다.

총리님,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살아갈 국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단언컨대 잘못된 일입니다. 여기 계신 장관님들만 빼고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4월에 현재 결정의 취지를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국제기준(2019년 대비 60% 감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감축목표를 수립할 것’.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인권위원회니까 잘못 결정한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원민경 여가부장관님도 인권위원으로서 이 결정에 함께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크게 답변해 주세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예.

○이소영 위원 그리고 인권위는 일관되게 이런 권고를 해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송두환 위원장 체제에서도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에서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해서 감축목표를 상향하라’. 이 6차 보고서에서 발표된 감축기준이 61% 감축입니다.

여기 계신 장관님들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은 자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미래 국민들을 위한 인권 권고도 무시한 그런, 현재 세대의 안온만을 추구하는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옳습니까?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안을 떠나서 2안조차 용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총리님, 어린아이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국민들도 우리 국민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소영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은 우리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살아가는 국민들이 적절히 나눠서 져야 되는 책임을 그 아이들한테 떠넘기는 몰염치한 결정을 설사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결정은 여기 계신 고작 몇 년의 임기를 가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미 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결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끄럽고 이 아이들에게 미안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기 계신 총리님과 모든 국무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종합정책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이재명 정부의 정치·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소영 간사님께서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NDC 목표가 맞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낮에는 조정훈 위원께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미래세대와 청년세대들에게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지 아주 따갑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서로가 다 동의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이런 의견들이 활발하게 여기서 토론됨으로써 우리 정치가 발전되고 우리 국가도 발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어제지요. 어제 국무총리님 인사말씀 중에서 틀린 팩트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총리님 인사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추경안을 여야가 잘 협력을 통해서 통과시켜 주셔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추경,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 아닙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들을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 그렇게 사실관계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비서실장께서 오전에 와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

배숙 위원님이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가 되느냐 정지되지 않느냐. 다수설이나, 다수설 아닙니다.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헌법학자 10명에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7명이 중지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비서실장 아침에 나오셔서 또 판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으면 우리가 왜 이런 논쟁을 하겠습니까?

저는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는 정부와 대통령실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씀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팩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월, 6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의 정치 부분을 한번 돌아보면 저는 상대방은 죽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살리고 여기에 정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가역량을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허비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것 누구 말씀 같습니까, 총리님?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였을 때 한 말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저는 이러한 정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을 지금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법안 통과가 특검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명된 3명의 특검이 지금 열심히 수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해서 한 특검이 있었을까요? 특검은 왜 필요할까요? 특검은 기존의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는 건 항상 야당이었습니다. 기존의 수사기관들은 여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가 있으니까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판례였습니다. 그게 특검의 본질에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 특검들은 여당이 특검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당이 통과시킨 특검입니다. 왜 일까요? 수사기관을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특검을 고르기 위해서. 그 특검을 고른, 3명의 특검이 민주당이 얘기하지 않아도 민주당 입맛에 맞는 수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까지 조은석 특검이 청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님 이 영장 보셨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영장을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형수 위원** 읽어 보지 않으셨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는 일부러 안 읽어 봤습니다.

○**박형수 위원** 저는 이 영장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통화하고 그 이후에 한 추경호 대표의 조치가 뭐였냐면 당사도 되어 있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장으로 공지를 한 겁니다. 표결을 방해하려 그러면 거꾸로 됐어야지요. 국회로 돼 있던 걸 당사로 바깥으로 옮겼더라면 대통령과 통화하고 난 다음에 표결 방해하려고 그렇게 옮겼구나…… 그런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으면 그대로 됐어야지요. 당사, 의원총회 장소가 돼 있던 걸 그대로 됐어야지요. 통화한 직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바꿨어요. 국회로 오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방해가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한테 통화를 합니다. 국회의장이랑 통화를 했어요. 뭐라고 통화를 하나면 경찰이 지금 국회로 들어오는 걸 전면 통제하고 있다, 이것을 풀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11시 37분에 경찰이 전면 통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부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증을 보여 주면. 그런데 37분부터 전면 통제를 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한테 통화를 하면서 이걸 경찰에 얘기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결 방해가 되는 겁니까? 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수사를 기점으로 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장관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지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야 되는데 정당의 목적을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당의 강령이나 당헌·당규를 봐야 되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우리 정당의 강령이나 당헌·당규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령이나 당헌 외에도 주요 인사들 활동도 포함됩니다.

○**박형수 위원** 활동이지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활동이지요. 활동인데, 정당의 활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위가 표결 방해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의 활동이 정당의 활동으로 바로 대표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은 이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게 특검에서 수사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체포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본회의장에 보고할 때 구속영장 전체의 혐의 사실을 읽고 증거까지 읽으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이 의원님들에게 예단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원에서 온 그대로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 최소한의 요지만 읽을 생각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건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정당해산 사유입니다. 정당해산 사유가 설사 추경호 원내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위가 어떻게 정당의 활동으로 바로 치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법무부장관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연일 계속해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애매모호하게 이 수사 결과를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축은……

요전에 장관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있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공소 취소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공소 취소는 검사가 자기 명운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 공소 취소를 만약에 어떤 검사가 하게 된다면 그 검사는 아마 역사에 길이 이름이 남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름이 남을 것인지는 본인들이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한테 자꾸 ‘검찰이 공소 취소해’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듯이……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검사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지요. 이거 정말 하려고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직무상 명령을,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할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 존경하는 위원님이 검찰에 계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지요. 검찰총장은 할 수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래서……

○**박형수 위원** 그런데 본인은, 법무부장관은 지금 그걸 할 자신이 없으면서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검찰보고 공소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당의 대표로서 어떤 정치적 이런 걸로 하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사건에 대한 표현을 제가 지금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정치적인 말씀도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를 공소 취소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합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공소 제기 자체가 공소권의 남용이라든가 또는 증거의 조작이라든가 또는 강압에 의한 증거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다고 지금 공소 취소 여부는, 그거는 법원의 판결에서 밝혀질 겁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정상적인 재판 과정을 제쳐 두고 왜 공소 취소라는 이상한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부터가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듯이 또는 지금 법무부장관 얘기하듯이 그렇게 무리한 기소였고 불법한 기소였다면 법원에서 무죄 나오겠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무죄를 받는 것이, 억울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재판을 받고 법률생활입니다, 그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거 다 피해 가고 공소 취소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총리님,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제정책이 과연 우리 기업들이 떨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인지 참 저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지금 주식시장이 활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스럽긴 한데 과연 이게 우리

기업들이 또는 우리 경제가 저평가된 것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외국인들의 투자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것인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정부 당국에서는 주식시장이 4000 되고 5000이 되는 이걸 자꾸 희망을 주고 경제 정책이 성공했다라는 그런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우려를 가지고 조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게 다 기업들이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대미 관세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금 경제환경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떻게 국제경제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업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환경도 지금 AI나 반도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들을 육성시키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전기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력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안정적이고 원활한 전기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것도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총리님께서 잘 살펴서 정권의 유불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고민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경제정책을 아주 신중하게 바라보자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시장의 현재 상승 추세를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동일하게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경제에 부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위원님이나 또는 그런 비판적인 것도 또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박형수 위원** 그래서 저도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상법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입법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경제적 지표가 크게 봐서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 나쁜 쪽으로 보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은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6개월 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선부르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가 사실 모든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 중에서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13명이나 정부 요직에 들어가 있거나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검찰 인사라고, 검찰 편중 인사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싸우다가 다투아 간다고 그대로 다투았습니까?

지난번 정부에서는 검찰에 치우친 편중된 인사라고 온 국민이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대통령 변호인들이 출세하는 자리인가, 보상해 주는 자리인가 똑같은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법제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무죄라고. 이것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면 부정입니다.

법제처장 파면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주의를 주거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어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임명직으로 공직의 일을 하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역량과 자격이 맞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인 평가에 대해서 ‘여기는 역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진지하게 또 겸허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중에 선출직으로 된 분들은 사실은 국민의 평가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판단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공천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의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

총리님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또 정동영 장관님은 아직도 무슨 공부를 하시는지…… 한 10초간 기지개를 한번 켜십시오. 총리님, 장관님,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이쪽도 좀 하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감사합니다.

○박희승 위원 다 잘하자고 하는 것인데 너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법무부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장관께서도 7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법시험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로스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신중히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로스쿨 제도가 갈수록 음서제가 되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도 로스쿨 입학자의 절반이 넘는 55.4%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소위 SKY 출신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을 서울권 대학으로 확대해 보면 전체 합격자의 83.9%까지 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작년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68.2%는 소득 9~10분위 가구 자녀거나 국가장학금 지원 없이 학비 전액을 납부한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반면에 신입생 중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은 6%가 채 안 됩니다, 5.86%.

고소득층 가구일수록 자녀에게 각종 컨설팅, 스펙 쌓기 등을 지원하다 보니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쓴다는 사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하게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러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난 로스쿨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저도 폐지하자는 건 아니고요.

사법시험을 폐지했던 원인 중 하나는 몇 년, 몇십 년씩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변시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로스쿨을 갓 졸업한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약 75%인데, 다만 응시생 전체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2.3%에 불과합니다. 현행 로스쿨은 5년 내 5번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매년 약 200명 정도가 끝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탈자’라고 부르는데 현재까지 누적 오탈자가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스쿨 정원이 2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졸업만 하면 사실상 변호사 자격을 갖추는 거라고 여겨졌던 로스쿨 설립 초기와는 다른 현상인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방송통신대학교에도 로스쿨을 설치하자는 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시 동일하게 음서제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겨졌던 사법시험을 일부 도입하거나 서울의 고소득층만이 아닌 지방의 우수한 인재가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걸로는 법조인 2세들이 다시 법조인이 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제가 과거 입학사정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합격자와 불합격자 점수 차이가 0.12, 0.23 굉장히 미세하게 걸쳐져 있는데 실제로 교수님들 정성평가 점수가 8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평가제도 가지고는 제가 정말 공정하게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장관님께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모아서…… 하여튼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최적의 방법이 어떤 건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아마 이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분은 이런 제도에서는 절대 태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고진 교육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격차를 초래하고 이게 다시 경제적 격차를 벌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심각합니다.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큰 서울은 76만 9000원 정도고 가장 적은 전남은 29만 5000원,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사교육

참여율도 역시 가장 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전남이 약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서울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강남을 비교하면 사실 여러 배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지역에 교육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서울로 올라오는 원정 과외, 원정 학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런 격차를 해결하고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책을 마련 중인 걸로 압니다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장관님, 제안입니다만 각 지역별로 공립 지역거점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습니까? 현재처럼 일반적으로 평준화된 형태의 공립고등학교가 아니라 투자를 확대해 학생들이 앞다투어 오고 싶어 하는 명문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지역에는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이런 취지로 만든 교육 기숙학원이 여럿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만 봐도 현재 운영 중인 순창 인재숙과 임실 인재학당이 있고 남원의 인재학당도 올 6월에 첫 삼을 뗏습니다.

지역 명문 고등학교가 생긴다면 일반 학원 형태의 이런 기숙학원이 별도로 있을 필요도 없고 예산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경쟁력이 올라갈 뿐 아니라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훗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교진** 지역별로 교육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사교육 문제도 역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공교육 강화와 같은 노력도 하고 있거니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지금 가칭되어 있는, 각 지역별로 지역과 산업과 일자리와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는 가고 싶은 대학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을 함께 만드는 작업을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점 국립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 말씀은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검토해 본 바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바로 답변드리기보다는 한 번 더 논의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앞서 정당해산은 정당의 목적이거나 활동이 민주질서에 위배됐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정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정당해산이라는 게 함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물론 받아 봐야 되겠지만 계엄을 해제하는 국회의 권한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 권한이 의도적으로 방해받았을 경우에는 민주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한 것들이 정당의 목적이나 정당의 활동으로 기속된다고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민주질서 위배가 명확한데도 인정에 이끌려서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던 시도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명확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최후의 보루로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마음을 늘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고민정 위원** 고용부장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최저시급을 못 받고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 사업자는 법을 위반한 게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들이 가서 사법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보훈부장관님께 여쭙게요.

지금 보훈단체에 16개 공법 보훈단체들이 있는데 그 임직원 가운데 하위직급 및 지부 근로자들은 23년부터 3년간 임금이 동결이 됐고 그래서 94%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오경준** 기초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민정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오경준**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결국은 기재부장관님께서 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고용부의 답변도 들으셨고 보훈부의 현재 상황도 들으셨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40억 정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데 최소한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최저시급 문제만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훈부에 다시 묻겠는데요.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가 있는데 그분들은 전쟁에서 보통은 부모를 잃으신 분들이 유족회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순직군경 부모유족회라고 여기는 주로 자식들을 잃은,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군·경 안에서 목숨을 잃은 경우에 유족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쪽이 더 사람이 안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 열심히 활동은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좀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오경준**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예산 지원, 즉 인력 문제일 텐데요 일단 추계

해서 제가 올리기는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오경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기재부장관님, 이번에 경주 APEC 다녀오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고민정 위원 문화공연도 보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문화부 정상회담 문화 공연 봤습니다.

○고민정 위원 자랑스러우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고민정 위원 그리고 케데헌 오늘 하루종일 얘기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고민정 위원 그런데 결국 이런 K-콘텐츠를 잘하려면, 앞서 이훈기 위원님께서 콘텐츠의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예산입니다. 뭐냐 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계승해서 돈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면 연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 교육부 안에 한국고전번역원이 있고 거기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나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고전번역원 출연 예산이 올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참 기괴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K-콘텐츠 그리고 대단한 대한민국의 콘텐츠 하면서 열광을 하지만 실제로 아주 기본이 되는 소스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처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승정원일기 번역을 대거 축소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 예산은요 한 6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불교계에 있는 고전 사기 번역도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이것도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답니다. 사실 제가 예결위 하다 보면 수백억, 수천억, 몇조 단위 돈을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맨날 필요한 이 문화 콘텐츠는 기껏해야 몇억밖에 안 되는데도 늘 잘립니다. 참 서러운 실정 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APEC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큼 됐는지 이 자리에 계신 국무 위원들 다들 알고 계시니 이번만큼은 이 K-콘텐츠와 관련된 것은 기재부가 더 많이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다들 피곤하신데……

제가 올해 예산 발표하는 것 들으면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기재부장관님?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27조 원에 이른다라는 발표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제가 의성군의 군의원이었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부처의 예산을 10% 감축하라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때 막 부랴부랴 모든 부처들이 군 단위에서조차도 감액 예산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27조 원을 구조조정을 했을까 싶어 가지고 죽 봤어요. 굉장히 항목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지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 질의에 좀 당부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내역을 죽 보니까요, 지출 구조조정하고 사업비 감액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총리님하고 부총리님,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목적이 다르고요 그리고 주체가 다르고요 절차나 방식이 다릅니다. 이 지출 구조조정의 목적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낭비 요소를 찾아내고 그리고 저효율 사업을 정비하고 우선순위 재배분해서 그 재배분된 예산을 정부가 방향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겠다는 사업에다가 예산을, 국정 핵심과제로 옮기는 게 지출 구조조정 아닙니까?

반면에 사업비 감액 조정은 사실 그냥 단순 사업에 대해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 단순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절차나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주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는요 기재부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처하고 협의를 굉장히 긴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감액을 할 때는 그냥 부처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절차나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업비 감액 조정은 집행률이 낮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 단가를 조정하거나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반면에 지출 구조조정 사업은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먼저 구조조정 대상을 정하고 부처의 자율평가를 거쳐서 기재부와 전문가들의 합동 평가를 거칩니다. 그 후에 사업을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전환하거나 하면서 예산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절감된 재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 우선순위 사업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은요 매우 전략적이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농림부 예산을 죽 살펴봤고요. 오늘은 앉아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된 예산을 죽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구조조정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감액되었구나, 불용률이 높은 예산을 좀 감액했구나……

이것 절차에서 보면 기재부에서 삭감할 만한 비율을 아마 정해 준 것 같습니다. 10% 내외에서 감액 예산 목록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범위 안에서 아마 이게 감액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 들고 옵니다. ‘감액이 됐는데 다시 증액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고 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대로 된 지출 구조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돈 쓰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돈을 쓸 때 옛날에 쓰던 방식, 옛날에 관심 있었던 사업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

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제대로 된 지출 구조조정을 좀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프로세스를 좀 명확하게 하고 총리님께서 총대를 메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가능할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물량 조정하고 단가 조정하고 그래서 예산 조금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출 규모를 지방정부가 감당해 내기 어렵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지출 구조조정이 지금 위원님이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하신, 혹시 민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은 저도 조금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있지 않던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앞으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조조정을 하려는 노력 자체는 취지로서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발표는 이렇게 했는데 약간 좀 민망했습니다. 제대로 좀 지출 구조조정의 정석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상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총리님.

노동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노동부차관입니다.

○김위상 위원 노동존중사회를 말로만 외쳐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침해되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말로만 외치는 노동존중사회는 우리 국민들이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토론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한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총리님,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등을 비롯한 특사경의 수사권한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나 법무부장관한테 좀 여쭙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명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중수청이나 국수본에서 지휘를 받게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자체 종결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실제로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검찰수사권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홀로서기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든 간에 결국 근로감독관의 수사권한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은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뒷걸음칠 것이라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경찰 수사인력의 10년 이상 경력자 비중이 한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말씀 주십시오.

○김위상 위원 현재 33.4%고 그다음에 근로감독관은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13.8%에 그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수사하는 산업안전 부분은 8.8%에 그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미처리율이 18%고 24년도에 78.2%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상 경찰의 미처리 사건이 한 해 전체 접수의 한 15%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김위상 위원 2028년도까지 근로감독관 충원을 몇 명 정도 더 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한 1300명 정도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연도별로 조금씩 변동성이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총 한 3000명 규모로 보고 있지요?

총리님도 이것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7급으로 전량 근로감독관 충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업무에서 7급만 충원을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8급·9급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알고 있으리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근로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양질의 감독, 수사 역량이 반드시 전제되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총리님께서도 잘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권리 침해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면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기관 개편에 맞춰 가지고 근로감독관 등 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정부 합동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강구해서 이후에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김위상 위원 그리고 특사경 수사권에 대해 가지고,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 이훈기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과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올해 4차 기본계획이 끝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5차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는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이 있고 독도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예.

○이훈기 위원 독도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내용을 이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번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되는 조사·연구, 안전시설 인프라, 교육, 홍보, 관광, 환경·생태계 보호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간다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께서 영토주권 공고히 하는 부분들을 넣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데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정기념일에 대해서 좀 정부의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담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도 국회가 끝날 때마다 자동 폐기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 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라든가 과거 의원 시절에 전쟁범죄를 두둔한다든가 또 무력 사용을 금지한 일본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이런 우려사항 때문에 독도에 대한 도발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글썄요, 독도에 대한 도발을 해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외교부장관님, 독도 법정기념일 지정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부담이 좀 큼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부담이 있느냐 그런 차원보다는 이게 실익이 있느냐 한번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국민들은 정서상으로 상당히 원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부장관, 농식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부자산 매각 중단 지시 이후에 YTN 정부자산 매각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부장관님, 지금 산하 공공기관인 한전KDN이 YTN 지분 21.43%를 2022년 말에 2214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정부의 압박이라든가 강요가 있었다는 증언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강요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조사하신 적 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대통령님 말씀도 있고 총리님 말씀도 있어서 YTN 지분에 대해서 처음에 한전KDN이 존치로 입장을 정했다가 그 이후에 산업부의 권고가 있어서 그 입장을 변경했는데 그 변경 과정에서 불법이나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지난 과방위 국감에 한전KDN 사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대주주 변경이 취소가 되면 다시 주주로 복귀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기후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면 다시 복귀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리고 송미령 장관님, 농식품부도 지금 마사회가 YTN 지분 9.52%를 984억 원에 매각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전화 한 통으로 YTN 매각을 지시했다, 그리고 마사회 회장이 농식품부 세종청사에 불려가 압박을 받고 YTN 지분을 팔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마사회 회장님도 과방위에 출석하셨는데 정부의 방침이 있으면 다시 매각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새로 한번 다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훈기 위원 YTN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의 상징적인 사례이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문에 만약에 대주주 변경이 취소된다면 정부에서 다시 매각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훈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사회교대)

○조정훈 위원 짧은 시간이라서 짧게 질의를 드리고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오후에 총리님은 충분히 괴롭혀 드린 것 같아서 지금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부동산 안정화 정책 이후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최근에 저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강남에서 신고가가 67건이었는데 그 뒤로 15일 동안은 60%가 넘는 108건입니다. 그리고 외곽은 거래가 막혀 가지고, 그리고 풍선효과가 뚜렷해지고요. 화성시는 61주 만에, 구리시는 279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서 풍선효과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서울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5% 감소했고요. 월세는 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임대 물량이 60%를 돌파했는데도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참 놀랍다 싶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정책수단을 논의하기 전에 정책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름이 안정화 정책인데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시지요. 뭘 기준으로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단계적으로 급등하지 않는 그런 게 저희들은 좀 더……

○조정훈 위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목표가 뭐니까?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가기를 기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일부 등락은 있어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걸……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내려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정훈 위원 그러면 내려가는 정책수단은 작동하지 않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일부 이렇게 어떤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등락은 하는 거지만 급격하게 내려가서도 안 되고요 급격하게 올라가서도 안 되고요.

○조정훈 위원 올라가지는 않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않도록 하는 게……

○조정훈 위원 그러면 목표하는 부동산 가격 기준이 문제인 정부 초기, 윤석열 정부 초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 수준을 유지하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총리님, 이게 정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저분의 개인적인 소망입니까? 이걸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일단 부총리의 답변이니까 부총리님하고 그 부분은……

○조정훈 위원 아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저분은 지금 기재부 부총리기 때문에 정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그 질문을 조금 더 명료하게 다시……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가격 목표 수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수준 유지입니까, 하락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내려가도록 정책수단을 쓰지는 않을 거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급격하게 내려가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주택 보급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주택 보급은 저희들 공급에서는 늘릴 수 있는 데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정훈 위원 그러면 주택 보급률이 중요합니까, 자가 보급률이 중요합니까, 이 정부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일단 주택 보급을 늘리면서 또 자가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먹고, 먹기도 하고 보기도 좋다 이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래도 저희들은 목표는 그렇게 잡아 가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정확하게 해야 수단을 쓰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그러면 안정화된 부동산 정책, 지금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할 거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자가 보유율보다는 주택 보급률에 신경 쓰겠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주택 보급률도 하면서 자가도 할 수 있으면……

○조정훈 위원 그러면 목표가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정훈 위원 보급률에 대한 목표가 뭐니까, 그러면? 제가 말 안 끊을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보급은 35만 호 지금 밝혔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그것은 그냥 공급이고 자가 보급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서울 같으면 한 40대 후반 정도고요.

○조정훈 위원 주택 보급률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주택 보급률은 전체적으로 또……

○조정훈 위원 서울의 주택 보급률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주택 보급률 같으면 서울은 한 100%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100%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경기도까지 합치면 한 110도 가고 이러는데요.

○조정훈 위원 경기도하고 서울 합치면 110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것 몇 자리 숫자 틀린 것 갖고 제가 꾸짖진 않고요.

자가 보유율이 44%예요, 서울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서울은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주택 보급률이 98%입니다. 뭐냐 하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목표는 다주택 물량을 소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 보급률보다 저는 자가 보유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한 채씩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게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0%에 가까이 왔는데 자가 보유율이 44%에 머물고 있다는 건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목표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뒤에 서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전국의 자가 보유율을 얼마로 하겠다, 목표를 정해야 수단을 쓰고 이게 35만 채가 필요한지 100만 채가 필요한지 정하는 것 아닙니까?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35만 채를 공급했는데 이미 주택 있는 사람한테만 다 가면 자가 보유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청년주택 보유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수치를 뭉뚱그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5년 뒤에 이걸로 승부 보겠다, 부동산 가격 5% 10% 5년 내에 올라가지 않겠다, 자가 보유율 가장 낮은 서울 70%까지 올리겠다, 청년주택 보급률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목표수치를 정해 봐야 거기에 따른 정책수단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장에서도 반응을 할 겁니다. 지금은 너무 헛갈려요. 10·15 정책 하고도 며칠 있다가 대출은 이것 허용하겠다 저것 허용하겠다, 막 소리 지르면 찢끔 해 주고, 이거는 올바른 시장 운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정책수단을 논의할 텐데 정책목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또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걸 지금 연구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핵폭탄을 터뜨려 놓고. 정책목표가 있으셔야 이만한 핵폭탄을 터뜨리시는 거지요. 그것은 무책임한 발언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소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전남 여수율의 조계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국무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님, 지난번에는 총리님이 힘드실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두 번 연속해서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한반도 KTX에 대해 총리님께 의견을 묻고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 보이시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가장 빠른 KTX-청룡의 경우 2시간 18분에 주파합니다. 그리고 광주와 서울 간은 325km인데 가장 빠른 경우에는 1시간 36분에 주파합니다.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서울에서 여수까지 가려면 360km인데 3시간 3분이 걸리고 패턴 조정을 해서 가장 빨리 달리는 게—패턴 조정이라는 것은 거점 구간을 운영하는 걸 말합니다—2시간 50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구간이 구철도, 꾸불꾸불한 일반철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평균속도 150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저 구간을 직선화하자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직선화 노선만 검토가 되었고요. 2021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따라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가 88km 구간 직선화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도 부적격으로 판정이 났고, 그때 88km를 2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최근 2024년 10월에 다시 42km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오히려 88km보다 훨씬 더 짧은 부분 구간, 42km를 직선화하는데 30분을 단축한다고 과장을 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한 15분 정도는 아까 패턴 운영, 거점 구간을 운영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거고 15분 정도, 물리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부분 직선화로 국가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했을 경우 한 번 돈을 태우면 애물단지로 전락한다.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리고 새로운 EMU-320이나 또 HEMU 같은 미래형 철도는 탑재할 수도 없다. 설사 탑재한다 한들 제 속도를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반도 KTX를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한반도 KTX 노선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남서울에서 용인, 안성을 거쳐 청주, 세종(북대전) 그리고 전주(동전주), 남원, 구례, 동순천을 향한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노선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는 직선 노선으로는 한 315km고요 실제 노선으로 했을 때는 한 325km까지 이 정도로 노선이 단축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서울에서 광주까지 최고로 빠른 노선은 한 1시간 40분 정도까지도 가능하고 2시간대 이내로 달성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점이, 장점이 뭐냐 하면 남서울의 KTX 이용 수요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서울이나 용인·안성 이쪽에서 청주로 가는 수요가 이미 30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KDI에서 이와 관련한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남서울에서 청주 간에 노선

이 만들어진다면 그 청주부터 세종을 거쳐서 여수까지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노선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 노선으로 따지면 20~25조가량 소요되겠지만 남서울에서 청주 간 노선이 민자가 됐든 그 담보가 된다면 나머지 구간은 10조를 좀 상회하는 정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정도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경우 익산에서 여수까지 전체 직선화하는 것하고 예산상으로는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한반도의 철도 대동맥을 완성하는 길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노선에 대해서 제5차 철도망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를 총리님께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지난번에 한번 저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 위원님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것도 제가 그때 듣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기 보니까 철도망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건의되는 뭐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게 있는데 아마 그 프로세스에 해당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것은 조금 새로운 안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논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상의해서 별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국토부장관님께도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로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여수-익산 간 예타 부분의 용역을 아직 하고 있으면 이 노선도 함께 반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여기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는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치밀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국토부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15 부동산 대책의 조정대상지역, 이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고 또 조세도 중과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지정해야 되는 게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것은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법문에도…… 제가 나중에 법문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가 있더라도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이지요. 이해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

문에……

○**천하람 위원** 예,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관님과 나름대로 설전을 벌이면서 제 입장에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게 단순히 행정심판 해라, 소송해라, 위법하면 거기 가서 따져라라고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정부 내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국민한테 유리한 통계가 나온다, 국민한테 유리한 요소가 나온다 그러면 잠깐 멈춰서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까,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이런저런 심의회가 있다 그래도 가능하면 이것은 좀 반영해 주자, 가능하면 국민에게 기본권 침해가 덜한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내부 논의 이미 진행 중이고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심의위원회 이미 해야 되니까 새로 통계 나왔더라도 우리 그것 없이 그냥 갈게’ 이것은 저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천하람 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심의위원회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통계가 어쨌든 장관님 손에 들어온 게 13일이고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시점이 15일이라고 그랬는데 14일에 심의위원회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심의위원회 하루만 잠깐 홀드하고 15일에 이거 공개할 수 있는 9월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자, 관계 장관들도 15일에 논의하고 얘기하자 그렇게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굉장히 많은 국민들, 실제 우리 지역은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실거주하는 목적인데 왜 이렇게 제약하냐라고 하는 지역들을 빼 줄 수가 있어요. 빼 줄 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적법하게 했으면 뺏았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장관님께서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그게 저한테 하시는 얘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듯이 말씀하지 마세요.

○**천하람 위원** 아니요. 국민한테도 하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무슨 우리가 정책 결정하는데 무슨 행정편의로 그렇게 합니까?

○**천하람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제 말씀대로요 하루 늦춰서 9월 통계 보고 많이 안 오른 지역들 빼면 뭐 큰일 납니까? 왜 그거 안 하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지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는 풍선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나면 그 옆이 오르고 또 그 옆이 오르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 부동산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처음부터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지역을 선정해

야 된다는 게 큰 원칙이었습니다.

지지난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 스물여덟 번 했느니 스물다섯 번 했느니 즉자적인 그런 대책 남발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에 크게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볼 때 국토부는 이 규제지역을 아직은 미흡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도의 심한 지역을 묶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천하람 위원 장관님, 얼마 안 남아서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장관님, 그랬으면 법을 먼저 바꾸셨어야지요. 왜냐하면 이게 조세법률주의도 있고 법치행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 장관님께 풍선효과를 고려해서 1.3배만큼 안 올랐는데도 규제를 사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 그래도 되냐라고 했는데 장관님께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하면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적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요. 풍선효과 우려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세금이 올라가고 재산권을 제약하는 거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법적 근거가 10월 15일에 발표하셨고 10월 16일에 처분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월 13일에 있는 통계를 안 쓰는 거는 법적 근거에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풍선효과가 우려돼도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적법하게 가셨어야 되는 거지요.

이걸 10월 15일에 9월 통계가 발표되니까, 통계가 발표되고 나면 저 지역들 다 빼야 되니까, 풍선효과가 나오니까 10월 14일에 빨리 심의위원회 끝내고 15일에 빨리 발표해서 통계 공표되기 전에 빨리빨리 해 버리자.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유리한, 법에 써야 되는 통계를 왜 안 써 주냐. 이게 위법할 뿐만 아니라 왜 우리 국가는 나에게 유리한 통계를 안 써 주냐’. 국민들 입장에서 속 터질 일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위법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정책 목표도 있지만 국민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장관님께서 저보다 훨씬 선배 정치인이시고 제가 소리쳐서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소송하세요. 행정심판 하세요’라고 할 때 솔직히 저도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변호사로서 있는 게 아니고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부장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하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천하람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국민들에 대한 충정 어린 마음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이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국토부장관으로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부터 이 주택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어

느 정도는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인사도 올렸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조금 더 인내심 있게, 투기 세력과 또 갭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잡지 않는다면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게 된다면 그 피해 또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하는 현실 또한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천하람 위원님께서 그때 13, 14, 15 이 과정에서 정책적 결정에 대한 국토부의 선택을 정책적으로 질문하신다면 얼마든지 정책적 토론을 하겠지만 마치 국토부가 어떤 것을 숨기고 또 어떤 것을 조작하고 뭔가 편법을 동원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의구심과 의혹에 대해서 만큼은 어떤 논쟁을 하기보다는 저는 법적 처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병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래서 천하람 위원님께서 정책적 질의라면 정책적인 토론을 하시고 법적인 문제라면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13일 날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국토부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심판을 통해서 결론을 내면 그 결론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장관님, 우리가 정책이 어떤 게 옳고 그른지는 서로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겁니다.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게임의 룰인 법은 지켜 가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10·15 부동산 대책이 적법한지 불법한지 따지는 거는요 법정에서만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녹을 받는 모두는 적법행정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지금 당장, 지금도 국민들 재산권 침해에 제대로 된 통계가 적용이 안 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병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9월 통계 이미 나왔고 내용 아시잖아요. 지금이라도 이것 기본권 침해,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직권 취소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법적인 위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법정에 가서 하세요’라고 법정에 던지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진심도 위원님이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양측의 주장이 이제 충분한 것 같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입니다.

아까 부총리님께 예산 관련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예산 관련 질의는 월·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의 여러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3월에 있었던 산불피해에 관한 복구와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3월 산불로 인해서 18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만ha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1조 8000억 가량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재난·안전 기본법을 개정해 가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농어업인들 지원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산불피해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는 것 이렇게 두 갈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 기본법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했고 지금 협의 중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관련해서 저희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복구 기준 마련해서 용역 실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박형수 위원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통할하는 부처가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기재부에도 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원 기준을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이 이하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각지대 그렇게 해서는 해소가 안 됩니다.

지금 산불 특별법에도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주택을 가액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 놓고 다 지원을 해 줬기, 그게 약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예를 든다라면 1억 원짜리 집을 가진 분이 1억 원 지원을 받고 5억, 6억인 집을 가진 분도 똑같이 소실됐는데 1억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한정을 해 버리면 사각지대 해소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정평가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한다면지 또는 최대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면지 이렇게, 금액 기준으로 하면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재부에서 유념을 하시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불피해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부처가 지금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 만드는 데도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아마 만들게 될 것인데 여기에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아마도 재난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한 것과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기본법을 기재부에 부탁드린 대로 그렇게 규정을 해 주셔야지 산불피해 특별법에도 마찬가지로 지원될 겁니다.

그다음에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에 여러 가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들을 다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다 시행령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행령으로 안 되면 재건위원회에서 또 그것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진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정자, 재사 그다음에 고택, 사찰 이런 것하고 농산물의 저온저장고, 창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도 기반시설 여

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주택, 그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도 이게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면적이나 옛날 가옥도 마찬가지로, 목조 주택도 마찬가지로 또 새로 지은 주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도 좀 달리 규정을 해야 되고요.

또 공가는 보상을 안 해 주고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가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지 또 건축 중인 건물,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조정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축산 또는 농가에서 쓰는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부처에 지금 모두가 다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리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행안부에서 이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래서 산불특위와도 논의를 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당 지역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이 대표로 답변을……

○국무총리 김민석 박 위원님 주신 말씀 의논해서 꼭 챙기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정훈·조지연·김성희·이훈기·조계원·이소영·박형수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 그리고 24시간 위원님들을 밀착해서 보좌하고 계시는 보좌진 여러분, 의정기록과 직원분들과 의회경호과 직원분들, 중계방송에 협조해 주신 국회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4분 산회)

○출석 위원(41인)

고민정 김기웅 김남근 김대식 김성희 김용만 김위상 김한규 노종면 박민규
박형수 박희승 서범수 서왕진 송기현 안도걸 우재준 윤후덕 이병진 이성권
이소영 이수진 이재관 이훈기 임미애 임종득 정점식 정진욱 조계원 조배숙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차지호 천하람 최기상 최형두 한기호 한병도 허성무
황정아

○출장 위원(2인)

곽상언 김승원

○청가 위원(2인)

강승규 김상욱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동훈
입법심의관 최철민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총리 김민석
대통령비서실
실장 강훈식
정무수석비서관 우상호
대통령경호처
정책관 박관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감사원
원장 최재해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국무1차장 김영수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제1차관 구혁채
교육부
장관 최교진

외교부

장관 조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문인석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장관 안규백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차관 김민재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기획조정실장 오경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강형석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제1차관 금한승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2차관 강희업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차관 김성범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법제처
처장 조원철
차장 김창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국세청
청장 임광현
관세청
청장 이명구
조달청
청장 백승보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
차장 노경원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병무청
청장 홍소영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진호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차장 서효원

산림청

청장 김인호

차장 이미라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기상청

청장 이미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차장직무대리 여성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조소영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사무처장 조정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